

2025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2025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2025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목차

I 발간사

원내대표	010
정책위의장	012

II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015
법제사법위원회	019
정무위원회	023
기획재정위원회	029
교육위원회	03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45
외교통일위원회	053
국방위원회	063
행정안전위원회	0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8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89
보건복지위원회	1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9
국토교통위원회	117
성평등가족위원회	131

III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137
법제사법위원회	149
정무위원회	159
기획재정위원회	169
교육위원회	17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7
외교통일위원회	197
국방위원회	207
행정안전위원회	2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3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3
보건복지위원회	25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3
국토교통위원회	273
성평등가족위원회	289



원내대표 발간사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국회의 본래 역할을 바로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3무(無) 즉, 무능(無能), 무지(無知), 무책임(無責任)을 정면으로 추궁한 국감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핵심 증인 채택·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을 상습적으로 지연·누락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악조건에서도 국민의힘은 국정 실태를 면밀히 파헤치며 국정감사를 주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 끝에 사망한 참혹한 사건은 국가 책임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초기 보고가 있었음에도 외교부는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피했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문건과 보고 체계를 끝까지 추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를 방기하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 앞에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7월에 발표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는 사실상 6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외교 실패이자 서면 합의서조차 없는 졸속 합의였고, 심지어 관세 협상 결과 중에 미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 완화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전월세 폭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없는 기형적 시장이 고착되었으며, 공급은 멈춰 섰습니다. 대출규제만 강화된 탓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규제 확대를 위한 통계조작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 시장 데이터에 기반해 이러한 정책 실패를 짚어내고,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라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인권을 무시한 폭압적 수사로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정치 특검과 사정기관의 실태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 수사와 강압적 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은 무능·무지·무책임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한 입법·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를 지켜보며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발간사



2025년, 제22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당리당략적 국정 운영에 맞서 국정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검찰 해체 시도 등 사법체계를 흔드는 시도를 분명히 경고했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비정상적 행태를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합리적 대출 규제와 LH 중심 공급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중심의 정상적 공급체계 복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추어적 경제운용과 소비쿠폰 중심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산업 정책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처벌 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현장의 문제점을 알렸고, 비현실적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성과 포장 외교'의 문제점과 '두 국가론'의 반헌법성을 짚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언론 분야에서도 교육 현장의 이념 편향을 바로잡고, AI 정책의 합리적 추진과 언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국민의힘이 민생과 정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길을 걸어온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사무처당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 있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은영*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정감사 총평

“김현지 실장!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주요 내용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 거듭된 운영위 국감 출석요구에도, 끝끝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마무리된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자, 국민의 공분만을 키운 국감
- 운영위 국감진행 직전에 갑자기 국정감사 출석 대상인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꿈수 인사이동시킨 이재명 정권의 속내 밝히기
- 대통령실 국정감사 당일에도 온갖 꿈수와 반칙으로, ‘언제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며 이른바 약속대연을 주고받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 대통령실에선 국회로 공을 던지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요지부동’ 증인채택 합의 거부
- ‘김현지’라는 이름 세 글자만 나와도, 운영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폭언·막말을 일삼고, 이른바 ‘입틀막’을 선사하며 발언 진행을 방해해,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적인 의구심만 잔뜩 키워놓은 집권여당 민주당

● ‘민주당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주장 허구성 지적

- 임기(3년, 27.9월 종료)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온갖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마타도어 등을 일삼고, 심지어 인권위원장직 사퇴를 주장해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위선 및 비민주성 지적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참 및 국민 무시 행태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 규명 노력 및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입법부 무시 태도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통령 ‘문고리권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대국민 의혹 부각

- 인사개입 및 권한남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PC컴퓨터 교체 직접 지시한 녹음 공개 등 증거인멸교사 의혹, 경기도 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자금 논의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앙지이자 중심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선캠프 인사들과의 재판 관련 논의 정황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물
- 30년 이상 국감에 빠진 전례가 없는 총무비서관을 증인석에 앉히지 않으려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출석 기피를 목적으로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해놓고,
 -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 ‘그는 누구인가!’
- 그러나, 비선실세·권력남용·증거인멸을 일삼은 의혹을 받으며, 이재명 정권 의혹사건의 모든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대국민 환기

● 오직 ‘김현지’를 위해서라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나선 집권여당 민주당의 꼴사납고 적나라한 행태

- 운영위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온 힘을 다해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김현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는 실태를 고발
- 야당 원내대표의 적법한 요구와 지적에도, 이른바 ‘배치기 방패’로, ‘무력’과 ‘육탄’으로, 증인출석을 막아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처량한 모습만 목도하게 된 실태 지적
-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이제 ‘도대체 왜? 김현지 실장은?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토록 국회의 본령인 국정감사 출석과 적법한 진행을 철통방어로 막아서는가’하는 근본적 의문만을 촉발시킨 결과

● “‘김현지’보다 내가 한 수 위! 국민 짜증유발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독단적 국회 운영 및 상임위 전횡의 문제점 지적
- 신성한 국정감사와 과방위원장 직위를 딸 결혼식 축의금 모금용 한탕 잡기의 기회로 써먹으려던 위법행위 비판
-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횡에 대해 국회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견제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권의 명실상부한 회복에 집중한 합리적 대안제시 국감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댄 행태 비판 및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선진화법 등 입법대책 마련 논의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개정

-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건 대폭 강화 등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주장 등 근거없는 의혹제기, 마타도어 등으로 일관해 인권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행태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임기(3년, 27.9월 종료 예정)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온갖 근거없는 의혹제기, 마타도어 등을 통해 비방하고, 심지어 인권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위선 및 비민주성 지적

-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근거해, 위원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
- 사적 종교에 대한 언급, 과거 특정 발언을 짜깁기하여 동일 질문 반복
- 일반적으로 노조 등에 의해 제기된 진정사건 등을 기반으로 밀어붙이기식 사퇴 압박을 하는 여당 민주당의 문제점 지적
- 이에 더해 민주당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하여, 인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재와 징계, 인권위원회 구성의 삼권분립적 요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

*민주당 의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 : ▲ 인권위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는 모호한 근거로, 이를 위반할 경우 2/3 찬성으로 퇴직 의결, ▲ 인권위원의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 등

-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버젓이 ‘유치장’ 란과 ‘파출소’ 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을 상대로 신고를 유도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
- 이에 더해, 제보 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대응과 고소 및 고발 등의 압박수단을 언급하는 위험한 상황을 환기
-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새벽배송(자정에서 새벽 05:00 까지) 제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이는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하고, 또한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해야 함을 강조
-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년이 넘도록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비민주성과, 지난 8월 대한민국 헌행법인 「북한인권법」을 부정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의 부적절함 지적
- 또한,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받다가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인권위에서 즉각 직권조사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인권위로부터 ‘향후 모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가인권위의 원활한 인권보호 업무 진행을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 경주
- 국가인권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 북한인권재단 국회 몫 이사진 추천 절차 조속 진행



국정감사 총평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

주요 내용

● 국감 모니터단 평가 '역대 최악 F학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저질국감"이라고 평가
- 모니터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섭단체(야당) 간사 선출 안건을 부결시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과 개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 또한 "추 위원장은 감사위원(국회의원)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발언·질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질타
-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르지 않고 약 90분간 자리를 지킨 것 등에 대해 모니터단은 "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 위배의 우려를 초래했다"고 평가

●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헌법적·반인권적 의사진행

- 질서유지권을 남용한 국회의원 발언권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태
- 또한 국회법에 보장된 토론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표결을 통해 종결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반민주적 행태임
- 특히 편파를 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시끄럽다'를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폭력적인 권한 행사임

● '법사위 국감 3악' - 삼권분립 훼손, 재판 결과 뒤집기, 의혹 부풀리기

- 민주당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각종 음모론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망신주고,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함
-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의 근거조차 희박한 의혹들을 언급하며 재판결과 뒤집기, 수사결과 뒤집기, 감사결과 뒤집기를 시도함

사법부 독립 훼손

민주당의 대법원 유린 및 대법원장 사퇴 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민주당의 도를 넘은 대법원장 공격

- 제보자조차 불분명한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을 90분간 모욕
-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녹취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함
- 특히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장 합성 사진까지 꺼내 들며 법사위의 위상과 수준을 떨어뜨림

● 대법원 '점령' 현장 국정감사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일방적으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함
-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한 각종 로그기록 등 재판기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함
-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갑자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 집무실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면담을 진행함
- 대법정 법대에 올라가고 대법관 집무실을 시찰하는 등 국정감사 취지에 반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가 헌법 학계 다수의견
-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적극 저지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검찰 해체 대책없는 검찰해체, 형사사법제도의 대혼란 예고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단 '없애고' 관련법 개정 등 정리는 '나중에'

- 70년간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범죄 척결과 사회 안정에 공헌해온 멀쩡한 조직을 자신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시킴
-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일부 문제나 일탈을 이유삼아 조직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임
- 특히 조직의 명칭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
 - 이를 위해 수백개의 법안을 개정하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등 심각한 혈세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사고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음
-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다반사고, 검찰해체의 부당성과 사회적 혼란을 지적하는 증인·참고인에게 욕박, 협박, 고성, 발언권 제한 등을 통해 의견개진 자체를 제한함
- 비판적 의견은 억압하고 무비판적 순응만을 강조해 검찰해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

• 민주당만을 위한 '개악'

- 검찰해체와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각종 개혁안 발표 및 철회 반복
-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개혁을 협박과 흥정의 도구로 사용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민혼란과 사법제도 붕괴를 초래하는 검찰해체의 문제점 적극 공론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의 문제점 등 이재명 정부 민생실패 지적 및 정책 대안 제시

주요 내용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어려움 가중 등 정부의 과도한 6·27, 10·15 부동산 대출규제의 문제점 비판**
 - 대출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한계에 봉착, 결국 보유세 강화까지도 검토할 우려
 - 정책당국의 말바꾸기(대환대출 한도 조정, 재초환폐지 관련 말바꾸기, 보유세 인상 논란 등)로 시장 혼란 가중
 - 정책당국의 말과는 달리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까지도 축소되었음을 데이터로 제시
 - 대출규제를 총괄하는 금융당국 수장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투자 비판
- **이재명정부 민생정책 실패 등 비판**
 - 급증하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
 - 이와 관련 불법 금융광고 차단, 캄보디아 관련 국내 자금 동결 등 신속한 금융 제재 필요성 강조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범죄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워짐을 지적
 - 이재명 정부의 채무탕감 사업인 새도약기금 사업의 문제점 비판
 -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인사가 다시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정치코드를 맞춘 데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문제 제기
 - 일괄 탕감 방식으로 인해 도박빚 등에 대한 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성실상환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문지마 채무탕감은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실책임을 지적

부동산 대출규제의 문제점 실수요자 거래는 막으면서 금융당국 수장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투자

주요 내용 및 성과

- **과도한 대출규제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의 필요성 강조**
 - 정책당국의 말바꾸기(대환대출 한도 조정, 재초환폐지 관련 말바꾸기, 보유세 인상 논란 등)로 시장 혼란 가중
 - 정부는 실수요자 대출 축소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신생아특례대출도 신청건수에 비해 승인건수가 감소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실수요자 대출마저 어려워지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
 - 결국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공급확대를 해야 부동산 안정화 가능
 - **대출규제를 총괄하는 금융당국 수장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투자 비판**
 - 대출규제로 갭투자는 막아놓고, 본인은 과거 갭투자로 수십억원대 강남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금융위원장
 - 강남권 아파트 2채 보유 비판에 대해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 1채로 줄이면 고통스럽지만, 공직자로서 고통을 감수하고 매도하겠다(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 높은 가격) → 최근 실거래가로 매도가를 낮추자 바로 거래 완료됨으로써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의 실패를 직접 입증한 금감원장
-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
 - 지방 미분양사태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출 프로그램 마련 촉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플랫폼 불공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 등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끼워팔기 등 플랫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마련 촉구**
 - 유료멤버십인 쿠팡 와우의 경우, 서비스 확대 명목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고 있으며, 스포츠패스를 통해서도 끼워팔기는 진화하고 있어 유료회원제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 촉구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불공정 행위 지적 및 대책 주문
- **8개월째 진행 중인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사재출연 추가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 등 직원·소상공인 보호와 사태 해결을 촉구**
- **대기업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에 대한 공정위의 근절대책 유명무실, 실효적 대책 주문**
 -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납품단가 부당지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촉구
 - 기술탈취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금은 0건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300여건 발생하는데 비해 지난 5년간 시정명령은 29건에 불과
- **대기업 중요경영사항 공시누락을 포함하여 반복적인 미공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누진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 강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반복되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도개선

민생경제 실패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정책 실패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물지마 탕감’ 새도약기금 사업의 문제점 제기**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이사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취임함. 성과도 없이 부실 운영에 책임있는 인사가 다시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대선 직전 발언 등을 통해 정치코드를 맞춘데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 정부는 오락, 도박빚 등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일괄 탕감 방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성실상환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물지마 채무탕감은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실책임을 지적
-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사 촉구**
 -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감원 등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 공소시효나 타 기관의 수사 개시가 금융당국의 조사에 문제가 된다면 관련 제도개선까지도 검토할 것을 요청
- **민생소비쿠폰은 민간에 부담을 전가한 현금살포 행위**
 - 민생소비쿠폰 관련 정부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2.5조원의 단기차입을 활용하고 이자비용으로 80억원을 지출하는 등 민간에 부담이 전가되었으며 지원대책이 필요한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급감
 - 보여주기식 현금살포 대신 물가 안정과 부채 완화를 병행하는 민생대책 필요
-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기관에 대한 신속한 금융 제재 필요성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새도약기금, 민생소비쿠폰 등으로 인한 민간분야 부담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보훈정책 국가유공자 체감 우선 및 탈이념적 보훈행정 실천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보훈부 차관의 연평해전 참전자 비하 발언 질타

- “제1연평해전 유공자 신청 8명 중 4명 됐으면 많이 된거 아니냐”, “그러면 6.25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나” 발언

• 부실한 보훈행정 관리 지적 및 꼼꼼한 정책집행, 제도 개선 주문

- 독립유공자 발굴 위한 자료 분석사업의 실효성 지적
 - 8년간 중국인 2명에 위탁, 성과도 없어, 허투루 국민혈세 낭비 지적
-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 부실한 집행 드러남
 - 대상자 17만 4513명 중 2만 5432명 미신청, 지급율 85.4% 불과
-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행정착오로 유공자 자격 즉시 배제하지 못한 점 등 보훈 행정의 구조적 허점 드러남
 -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과오급금 57여억원 지급 등
- 여전히 심각한 보훈 급여금 부정 수급 지적
 - 최근 5년8개월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은 사망하거나 재혼(개가)·이혼 등 신상 변동시 신고 지연 등 포함 총 574건, 53억 1,400만원
 - 부정 수급 최장 기간 46년 5개월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함.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추진 요청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관련 사업의 신속한 제도개선 점검 및 2026년 예산편성 관련 사업 시정 조치

기획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易地思之’ :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을 꾸짖은 국감**
 -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편의주의적 행정에 일침
 - 실상은 숨긴 채 巧言令色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부와 치열한 ‘진실 찾기’
 - 정책 입안자들도 실현 불가능한 규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내로남불 정권에 회초리를 든 감사
- **‘民生經濟’ : 소모적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 현안에 집중한 여야**
 -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그간 현실을 외면했던 거대 여당에서 소수지만, 중산층에 부담이 된 상속세 개편 필요성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정책 목소리가 나온 것은 아직 희망 고문에 불과하나 ‘고무직’
 - 마약 밀반입 증가, 보이스 피싱,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생활 속으로 파고든 위험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 민간인 10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누적 체납된 국세와 관세를 걷겠다는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경고
- **‘相互尊重’ : 배려와 성실함, 전문성이 빛난 국감**
 - 상호 비방은 최대한 자제하고, 실책은 지적하되 호통과 막말 등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 매너가 돋보인 국감
 - 서울과 부산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점을 찾아낸 ‘생활 밀착형’ 질문이 돋보였던 국감
 - 국감기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한 국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평가 이재명 정권의 경제·재정정책은 ‘F학점’

주요 내용 및 성과

- **아마추어 정권의 좌충우돌 5개월**
 - **Amateur(아마추어식 국정운영)** : 국정에 대한 전문성 ‘zero’
▲원전정책 뒤집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반기업 입법 몰두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물가와 국가부채 폭등시킨 ‘13조원 소비쿠폰’ ▲대출 제한과 맹탕 공급정책으로 전월세만 폭등시킨 ‘서민주거 안정’ ▲미필적 살인으로 건설사들 몰아세우며 ‘건설경기 부양’ 등 모순적 사탕발림 정치구호 남발
 - **Bankrupt(도박적 재정운영)** : 빚더미에 눌린 미래세대. 청년층이 은퇴할 무렵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천만원. 2072년에는 1인당 2억원을 상회
 - **Chaos(정책 혼선과 딜레마)** : 정책 혼선과 충돌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대. 상법과 노란봉투법 충돌,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 청구 불가
 - **Dangerous(위험천만한 정부기조)** : 정부 주요인사들의 위험한 발언들. 관세협상에서 보여준 정부 고위 관료의 ‘밟을테면 밟아보라’ 식의 반미 프레임화
 - **Error(정책 오류투성이)** : 정책 목적과 수단인 미스매칭으로 혼란 가중.
노란봉투법↔상법, 부동산정책↔집값 및 전월세 폭등, KOSPI5000↔대주주요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여권 내 불협화음 등
- **모래사장에 부어버린 국민 혈세 13조원**
 - 한달 만에 약발 떨어진 소비쿠폰 : 국세청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자료에 따르면 6월 122조원→7월 127조원(소비쿠폰 발급)→8월 122조원으로 제자리
- 신용카드 건당 사용금액도 건당 3.8만원에서 점차 하락 중. 소비자심리지수도(6월 108.7→8월 111.4→10월 109.8) 회귀 중. 소비진작 효과 의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서민·중산층 주거 사다리만 걸어찬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및 성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린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의 보통 이웃들, 내 집 마련 포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폭탄만



- 대출 아닌 적금 들어 집 사라는 정부, 사실상 주택 구매는 불가능



-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정책 입안자들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10·15 대책의 실체 ... 주거 사다리를 걸어 찬 '국민 재산 약탈 정책'

- 정책 수립의 핵심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협상? 문서 하나 없는 '깜깜이 타결'

주요 내용 및 성과

일본에 비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이었나?

- GDP대비 투자 규모 : 일본 13% < 한국 55%
- 외환보유고 기준 : 일본 41% < 한국 83%
- 국민 1인당 부담 : 일본 4,500달러 < 한국 18,700달러
-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국인 반면,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마저 불발

모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영끌 투자, 미국에만 유리한 구조

- 3,500억 달러는 지난해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 145조원의 3배를 넘는 규모로, 350만개의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셈
- 연간 현금투자 200억달러는 그간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시 대응할 실탄으로 향후 외환시장의 '방어막'이 사라지는 꼴
-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씩 빠져나갈 경우, 국내투자 여력 위축으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핵심 제조업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국내 산업기반은 고사 가능성
-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미국 대통령이 모두 결정하고 승인하는 구조. 美 정부 보증도, 원금손실 방지 장치도 전무한 상황. 수익배분 구조마저 불리해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5:5, 그 이후로는 9:1로 미국에 유리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양국간 이견

- 트럼프 美 대통령, 별도의 6천억 달러 투자 언급. 전체 투자 규모·농축산물 시장 개방·반도체 관세문제를 두고 美 정부는 벌써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
-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도 공동 성명이나 선언조차 전무. 문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이 협상'의 전형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모든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요구

- 한·미 양해각서(MOU) 및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 철저 검증
- 국회 비준 동의후, 정부 제출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익에 기반해 면밀히 검토

민간 체납관리단 신설 최소한의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세청의 급조된 사업과 예산...VIP 지시인가?

- 국세청, '경기 성남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본받아 민간인(기간제근로자) 1,000명을 고용해 133만명의 체납자(체납액 110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9.4)
 - 이재명 정부, 내년도 125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9.3)
 - 기재부로의 예산요구액 제출시한은 통상 5월 말임에도 민간 체납관리단 사업은 신임 국세청장 임명(7.23) 이후 기재부와 협의(7.25)를 거쳐 세제개편안으로 발표(7.31)되고, 125억원의 예산 배정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
 - 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비용추계서 지출 부분엔 '해당 없음', 수입 부분에는 '추정 곤란'으로 허술하게 기재하는 등 졸속 추진
 - 경기도 체납관리단 목표는 2.7조원 징수와 4,500개 일자리 창출이었으나, 19~21년간 실적은 목표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에 불과. 또한, 체납자들의 각종 불편 호소도 이어져 시작 2개월 만에 3만건의 민원 접수

• 관세청도 '관세 체납실태 전수조사' 추진 발표

- 관세 체납관리단 채용(12개 팀, 48명)을 위한 15억원 예산(순증) 요구
- 서울본부세관의 체납관리단 민간 조사인력 채용공고를 보면, '채권 추심업무' 경력을 우대사항으로 적시

• 시작도 하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우려되는 사업

- 세무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3인 1조)를 채용한 체납실태조사는 공무원 권한의 민간 이양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 재산조사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위임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 가가호호 방문해 실태확인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은 강제징수, 세무조사에서나 가능. 체납자 낙인효과 등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불편 호소, 민간 실태조사원의 안전 문제, 개별 납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 상존
- 국제징수법(개) 국회 입법예고기간(9.5~9.14) 중 전체 의견 8,232건 중 반대 의견이 8,096건으로 93.3% 차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제징수법 개정안과 시행령 위임사항, 예산 세부내역까지 철저히 검증

주택 보유세 인상 잘못된 조세정책, 청년·서민층의 주거 부담만 증가

주요 내용 및 성과

•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사

- 구 부총리, 19일 美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고가의 집을 소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폭탄 발언

•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잡기'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 거래세까지 합하면 OECD 평균의 2배 수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1%p 증가할 때 전세보증금은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폭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
- 보유세 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에게도 타격. 종부세 납부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만 57%에 달해 노년층 세금으로 전락. 소득 없이 집 한 채 보유한 노년층이 세금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매각할 경우 현금 여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만 주택 구매 가능. 이는 부의 재분배가 아닌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자산 양극화만 초래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 부담 증가도 마찬가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증 분석 결과 10%의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가격을 1~1.4% 정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전세가격은 1~1.3%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여당, 보유세 인상에 대해 '유보' 입장으로 선회

- 구 부총리,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해 개편할 계획"이라며 즉답 회피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증세를 추진할 시, 입법 저지는 물론 국민 저항 캠페인 추진 등 적극 대처 방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을 심도 있게 지적하며 맞대응
 - 특히,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
 -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이후 경남교육청은 6년째 채무문제 방치, 조속하게 관련 절차 착수 촉구
 -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및 고려대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
- 교육 현장의 정치화·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 및 정치적 활동 판단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
- 졸속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강력 비판,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
-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공자학원의 공산주의 이념 교육실태, 교육현장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날날이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강력 촉구
-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질적 재정 여건과 사립을 포함한 지방대의 열악한 교육 환경 등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
 - 지역살리기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 모색
- 교육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정책 당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국감 진행

교육 현장의 정치화·이념편향 방지 교육 현장의 정치화·이념화를 우려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강조

주요 내용 및 성과

- 교육현장의 정치화,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 이재명정부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기조인 '교실 밖 정치적 자유, 교실 내 정치적 중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 비판
 -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
 - 이 중 46.6%(84건)가 계엄·탄핵정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집중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 제시와 정치적 활동 판단의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점 지적, 교육현장의 기본인 공정성과 중립성 강조
- 2026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교육청의 포퓰리즘 정책 질타
 - 노키즈존, 복권판매점, PC방, 주류판매 업체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국민혈세 낭비되고 있는 전남 초등학교 교육수당 약 870억원의 사용 실태 및 집행 적절성 지적
 - 교육수당의 2026년도 중고생 대상 확대 계획의 대표 행위 가능성 비판
- 공자학원·서울대 시진핑 도서관의 공산주의 이념 교육 실태 지적,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촉구
 - 국내 공자학교 대학 등 공자학원 현황 지적,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 미화, 문화공정 등 역사왜곡 실태 강력 비판, 중국에 국내 상황 보고하는 공자학원의 위험성 지적
 - 교육부의 미흡한 실태 파악 질타, 추후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보고 요청
-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심 정책 추진 우려 지적, 전교조 단체 협약의 부당성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 세밀하게 지적, 공청회 개최
 - 학부모 단체들과 소통하며 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이재명 정부 핵심 교육정책 비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과 공직자 인선, 이대로 괜찮은가!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하향 평준화 만들기’로 전략 우려**
 - 명확한 목표·기대효과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주문
 - 거점국립대 국제화 지표부터 개선 필요
 -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의 현재 재정 및 교육 여건 등 운영 상황 언급, 현재 정부 예산 투입 계획으로 정책 집행의 효과 및 실효성 등
-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지적, 보완 방안 마련 촉구**
 - 면밀한 준비 없이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 지적
 - 고교학점제에서 큰 규모의 고등학교 선호 현상, 교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대학 입학시험 제도와 고교학점제의 정합성 불일치, 지역별 교육격차 우려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개선 강력 요구
-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의혹 지적**
 - 이재명 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 등 연구 진실성 문제 제기, 연구윤리 관련 공직 수행 여부 가능
 - 교육부 장관 처남 운영 급식 납품 업체의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 업체 선정 특혜 의혹 제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교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 지속 점검 및 제도개선**
- **교육부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인선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기준 검증**

교육 현안 점검, 발전적인 대안 모색① 초·중등 교육 현안을 짚어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 모색

주요 내용 및 성과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의 실질적 개선 방안 제시**
 -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지적 및 개선 촉구
 -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교사 사망 사건·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배치 미흡 실태 지적, 실질적 개선 방안 주문
 - 교감 업무 과중 해소와 처우 개선 요구
- **학생 자살률 증가 실태 지적,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학생 자살률 증가 실태 지적,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등 교육 현장의 미흡한 대응 실태 비판,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브니엘예고 학생들의 극단적 사건에 깔린 입시 카르텔 의혹 강력 질타,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 촉구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계획 미흡 실태 지적, 대응책 마련 촉구**
-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실태 비판, 후속 조치 강력 촉구**
 -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실태 비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 강력 촉구
- **학생 안전 및 건강 관리 강화**
 - 미성년자 약취·유인 증가 현황 지적, 실태 파악 및 대응 강조, 교육감협의회 의제로 상정 촉구
 - 2025년 ADHD 치료제(‘성적 향상 약물’로 잘못 인식) 처방 증가세, 학교현장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지원 체계 강화 등 즉각적인 조치 필요
- **서울특별시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 지적, 강력 개선 촉구**
 -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자동 배정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 제기, 제도개선 촉구

교육 현안 점검, 발전적인 대안 모색②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이 나아갈 길 모색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발전 방안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요구**
 - 글로벌 대학 사업 선정의 공정성 강화 촉구 및 추가 선정 필요성
-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제도 전반의 개편 촉구**
 - 최근 4년간 대학원생들이 빌린 학자금 대출 총액이 4000억원대에서 7000억원대로 1.5배 가까이 증가
 - 대학원 전용 장학금은 2024년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2025년 신설된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 계층 장학금(인문계)'이 있으나 부족
- **첨단 국가전략사업 인력 양성 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강력 주장**
- **AI 연구 확대에 따른 대학 전기료 부담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의 AI 연구 확대에 따른 전기료 부담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책 마련 촉구
- **캄보디아 피해 대학생 및 현지 학교 실태 파악과 지원 필요**
 - 국내 대학생들의 캄보디아 피해 실태 파악 촉구, 현지 교민 자녀 재학 학교현장 실태 파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촉구
- **국립대병원들, 장의용품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면서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지적**
 - 국립대병원은 수익성 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례식장 운영 시스템 개선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교육현안에 대한 지속 점검, 신속 대응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지적된 교육현안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 실태 점검, 개선방안 및 대응책 마련 촉구
 -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 실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이슈화
 - 개선방안 제시 및 대응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학교 다문화언어 강사 절대 부족, 이주배경학생 체계적인 교육 지원 절실

- 초중고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2025년 기준 학교에 배치된 다문화언어 강사는 총 1,006명
- 이주배경학생 의사소통 지원해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필요

● 학원비 초과징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학원비 초과징수 시 학생·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환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보완책 마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교육현안에 대해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예산 반영 및 법령 제·개정 추진

-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슈화
-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개정 및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국가 인프라 위기관리 체계의 총체적 점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사이버공격 대응 실패 등 공공데이터와 국가안보 체계의 허점 지적
- 화재로 인한 피해 확인 및 피해 보상 촉구
- 재난 대응 매뉴얼 개선 촉구

● ICT 산업과 국민보호 중심의 디지털 정책 강화

- 통신사 해킹사태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기준 미비 등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요금제 도입의 지연을 비판하며, 요금제 개편을 통한 실질적 통신비 절감 필요성 강조
-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 확대 촉구

● AI와 사이버 안전, 기술윤리의 병행 강화 요구

- 딥페이크, 여론조작, 가짜 정보 확산 등 AI 악용 사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언론 공정성 확보 논의

-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강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
- TBS 지원 조례 폐지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YTN 매각 과정 정쟁화 중단 촉구

● 이재명 정부 실정 지적

- 국가재난사태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미흡한 정부 대응과 부적절한 대통령의 예능(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에 대한 사과 요구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증 및 국민성장펀드 산출 근거 문제 제기

국가 인프라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수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문제 제기

-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및 38시간 경과 후 중대본 회의 소집 등 초기 대응 지연 지적
- 데이터센터 이중화 부재, 매뉴얼 미비, 대응 인력 공백 등 구조적 문제 확인
- 우체국쇼핑몰 마비로 인한 피해 실태 점검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촉구

● 국가 차원 「통합 사이버위기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제시

- 사이버공격 대응 당시, 국정원·과기부 간 협력 부재 문제 제기 등 위기 발생 시 부처간 협업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가사이버안전 기본법」 개정 추진 및 범부처 통합대응체계 구축 요구

- 과기부 중심의 '사이버위기관리단' 재편 및 민관공조 매뉴얼 개선

● 재난 복구 시스템 예산 확보 지속 점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 피해 보상 약속 이행 지속 확인

- 우체국쇼핑몰 피해 소상공인 보상

ICT 산업 보호 및 국민 디지털권리 강화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해킹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통합요금제 도입 지연에 대한 정부 및 통신3사 책임 촉구**
 -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1~5Mbps 속도로 추가 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넘어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약속 확보
- **KT·SKT·LGU+ 해킹사태 점검**
 - 반복되는 해킹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와 피해자 보상 지연 지적
 - KT 대표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면제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 확보
- **팜토셀 관리 부실, 중국산 장비 보안성 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확인**
 - 로봇청소기·서빙로봇 등 IoT 기기의 보안취약점 및 인증제도 한계 지적 후 법제화 요구
-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 감소 문제 지적 및 확대 필요성 제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과기부의 통합요금제 도입 추진 상황 지속 확인 및 당 차원의 조력 제공**
- **해킹 피해 조기경보 및 의심 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마련**
 - 민간기업에 대한 사이버안보 기관(과기부·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상시 접근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관계기관에 해킹 의심 정황 발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지속 독려
 -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및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 강화

AI(인공지능) 발전 AI(인공지능) 예산 및 윤리·안전 기술 규제 대응

주요 내용 및 성과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대책 점검**
 -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질적 산업·인재투자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 제기
 - 국민성장펀드 내 AI 투자(약 30조 원 규모)의 집행 투명성 미흡과 민간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자율·책임형 투자구조 마련 요구
-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 촉구**
 -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허위정보 생성·딥페이크 확산 등 부작용 시연
 - 선제적 대응 및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안전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AI 기본법」 및 하위 법령(가이드라인 포함) 보완**
 - AI 안전성·윤리·책임체계 관련 조항 보완 필요
- **AI 및 R&D 예산 확대**
 - 딥페이크 방지 기술개발, AI 학습데이터 윤리관리 강화 등 예산 확대 필요
- **정책 점검**
 - AI 투자 재원의 다양성 확보 및 평가 체계 마련
 - 국민성장펀드 AI 분야 투자액 집행 상황 지속 점검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및 언론 공정성 강화 일방 강행 처리 법안의 부작용 지적 및 언론 자유 수호

주요 내용 및 성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강행에 따른 부작용 규명
 - 명칭 변경(방통위→방미통위, 방심위→방미심위)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 방미통위 직무대행 법적 근거 및 친정권 인사 편중 문제 제기
 - OTT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체계 지적
- YTN 매각 과정의 정쟁화 중단 촉구
- TBS 지원 조례 폐지 타당성 확인
-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방송통신망법)」의 반대 의견 표명
 - 언론 자유 침해 소지 지적 및 대체입법 필요성 제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방송·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플랫폼 책임성 강화한 <디지털 서비스법>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원점 재논의 요구
- 방송통신망법 강행처리에 대한 입법저지 노력 지속

에너지 안보 및 원전산업 경쟁력 회복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원전 정책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규제 혁신 지연 지적
 - SMR 강국 도약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발 촉구와 성과 제고 주문
 - 선진국 대비 5년 기술격차와 예산 축소 문제 지적
 - 고리원전 계속 운전 심의 과정 확인 및 국내 부품산업 회복 현황 확인
-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정책 말바꾸기 지적
 - 후보시절과 당선 후 발언 불일치 사례 제시, 정책 신뢰성 저하 문제 부각
- 북한 우리농 공장의 핵폐수 방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촉구
 -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 보호 활동 다짐 확보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탈원전 저지에서 나아가 'SMR·핵융합발전 선도국' 전략 추진
- 원자력 안전 감시 강화 및 방사능 모니터링 항목 확대
- 원자력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지원 확대

상임위원장의 공정성·도덕성 검증 최민희 위원장의 국정감사 공정성 훼손 문제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최민희 위원장의 보도갑질·화환갑질·직원갑질 문제 제기

-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및 '친국힘 편파보도'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 및 국정감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지적
 - ※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및 방송법 위반죄로 공동성명서 발표(10.23) 및 경찰 고발(10.24)
- 감사 기간 중 진행된 자녀 결혼식(10.18)과 관련해 피감기관·기업의 화환·축의금 수수 논란 제기, 위원장직 사퇴 요구
 - ※ 뇌물 혐의 고발(10.30)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권익위원회 신고(10.31)
- 국회 과방위 소속 직원 과로로 인한 병원치료 사례 지적
 -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으로, 국회 사무총장의 실태조사 요구
- 향후 상임위 운영의 중립성 강화 필요성 언급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회 차원의 상임위 운영 규칙 개정 및 국정감사 제도개선 논의 필요

-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방지 조항 검토

• 「최민희 방지법」 추진

- 상임위원의 사적행사(경조사 등)에 피감기관·관련 기업의 금품·화환 등 금지 조항 신설 등

외교통일
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성과홍보에만 급급, 실익은 챙기지 못한 무능외교

주요 내용

- **이재명정부, ▶ 김칫국 외교 ▶ 자중지란 외교 ▶ 마이너스 외교 ▶ 소음공해 외교로 국격 추락**
- **외교의 본질 훼손 – 국익보다 ‘성과 부풀리기’ 우선 지적**
 -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보다는 ‘성과 중심 보여주기’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관세 협상 등에서 실질 합의 없이 ‘성공적 합의’로 포장한 것은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성과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
- **컨트롤타워 부재와 외교 리더십 위기**
 - 캄보디아·조지아 사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도 외교부-국가안보실-경찰-공관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집중 추궁
 - 캄보디아·조지아 사태 등 국민 생명 위기상황에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171개 공관 중 43개 이상이 공석, 주요 5강 대사(미·일·중·러·EU) 모두 후임 미지정 상태로 드러남, “무책임한 외교 행정” 질타
 - 주유엔대사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변호인으로서 외교관 경력이 전무한 차지훈 변호사 임명, 다자무대 협상력이 필요한 유엔에서의 우리 국익실현에 한계, ‘외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인사 실패’ 지적
- **한반도 내 유일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체성 공고화**
 - 통일부장관의 반헌법적 인식에서 비롯된 두 국가론의 모순적 실체를 밝혀내며 정부의 일치된 국가관 주문
- **북한인권을 포기한 이재명정부의 반인권적 위선행보 지적**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중단 등 북한 눈치보기 자체검열 비판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촉구
-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촉구**
 - 기관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 정치적 편중 오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 및 의무준수 권고

한미 관세협상

외교의 본질 훼손 – 국익보다 ‘성과 부풀리기’ 중심 외교

주요 내용 및 성과

- **김기현 의원, “정권이 외교를 국익 실현이 아닌 ‘성과 홍보용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켰다”고 지적**
 - 대미 3,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에서 구체적 이익 없이 “성공적 합의”로 홍보한 사례를 대표적 ‘성과 부풀리기’로 제시
- **“외교는 신뢰와 장기전략의 싸움인데, 이재명 정부는 말 바꾸기와 양치기 외교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
- **특히 대미 협상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과 외교부 답변 간 불일치가 확인되며, 국익보다 정권 홍보를 위한 ‘성과 포장형 외교’라는 비판**
 - 언론 또한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성과 과장·투자규모 부풀리기”(조선일보 10.17) 등 보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외교성과 발표 시 정량 지표(국익 증대·고용창출·투자유치 등) 의무 명시 제도화**
- **대통령실·외교부·산업부 공동으로 성과 검증 보고서를 분기별 제출하도록 제도화**
- **정권홍보형 브리핑 방지를 위해, 협상 완료 전 홍보 제한 원칙을 명문화 등 검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캄보디아 사태 관련 외교 무능·무책임 질타, 국민보호 대책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올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30배 이상 폭증했는데도 외교부 대책, 대응 미흡 집중 추궁
 - ※ 민주당(윤후덕 의원)에서 조차, “한국인 납치·감금이 330여 건으로 급증했는데 외교부는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이라고 평가
 - “상황을 인지하고도 선제조치가 없었다”며 외교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재 지적
 - 인도사례(외교관이 직접 현장 투입해 770명 구출) 제시,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요구
 - ※ 언론 또한 “정부의 느장대응·피해자 가족 방치” 등을 집중 보도(경향신문·조선일보 10.15~10.20)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재외국민보호센터 기능 강화: 24시간 상황실, 위기대응팀(외교·경찰·국수본 합동) 상설화
- 위기 발생 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외교부-행안부-경찰 실시간 데이터 공유체계 확립
- 캄보디아·조지아 등 고위험 지역 공관 재편검토 및 현장대응 인력 확충

낙하산 인사 무책임한 내사람 챙기기 - 차지훈 유엔대사 임명 논란

주요 내용 및 성과

- “유엔대사는 대한민국 외교의 얼굴인데, 외교 경험이 전무한 비외교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외교 전문성 훼손”임을 질타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8명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객관성이 없다”며 평가결과 및 민간위원 참여내역 제출 요구
 - 외교부의 관련자료 미제출 관련, 외통위원장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출하라, 불응 시 법적 책임 묻겠다”고 강력 지시
- 캄보디아 대사는 공식인 채 유엔대사를 우선 임명한 것은 국익 역행적 인사라는 질의도 제기
- 정권 코드·측근 챙기기 인사로 외교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붕괴”로 규정
-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지속 거부, 문제제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개선: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의무화, 평가결과 국회 보고
- 외교부 인사검증 기준 강화
- 외교부 내 ‘외교인사 검증위원회’ 설치, 장관 외 독립적 인사검증 가능토록 개선 등 검토

외교 공백 컨트롤타워 부재와 외교 리더십 공백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이 해외에서 납치·감금당하는데 외교부는 ‘강 건너 불구경’ 수준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데 대한 질타
 - 외교부의 위기대응 라인, 재외국민보호과 및 위기관리센터가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상 초기 대응 실패한 사례가 보고됨
 - 장관은 “유관부처 협업이 필요하나 외교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휘체계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외교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진단
- 171개 공관 중 43개 이상 공석, 5강 대사(미·일·중·러·EU) 모두 후임자 미지정 상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민안전 외교 컨트롤타워(총리실 직속 또는 외교부 내 상설기구) 법제화 추진
- 위기대응 프로토콜 개선: 공관별 실시간 위기보고·현장결정권 강화, 장관 직속 ‘현장 즉응팀’ 신설
- 공관장 공석률, 자격심사 결과 등 외교 리더십 공백지표 정기 보고 의무화 등 검토

비자문제 재외국민 참정권·비자·여권제도 제도개선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B1·ESTA 비자체계가 혼선되고 입양인 시민권 문제도 미해결” 문제 지적,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질책
-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에도 공관 파견 인력 부족으로 ‘동포영사제도 복원’ 요구 제기
- 우리당의 그간 재외국민 참정권 및 권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조명,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비자 간소화는 인권의 문제이자 국격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
- 또한,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비자발급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부처 간 단절 구조’가 문제로 지적
- 경남부산 지역 긴급여권발급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전자투표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검토
- 입양인 시민권·이중국적제도 개선: 출생국 확인·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이중국적 연령 하향’ 관련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우선
- 재외동포청 기능 강화: 현장형 동포영사제 부활, 동포권익보호과 인력·예산 증액
- 부산경남지역 긴급여권발급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 신속 조치

두 국가론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임을 천명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동조하는 통일부 정책

주요 내용 및 성과

• 통일부장관의 아전인수식 두 국가론 주장 파쇄

-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관과 안보인식 결여 규명
-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평화적 두 국가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저질정치 비판
- 이재명정부 내 일치된 국가관 촉구 후 정동영장관의 자의적인 평화적 두 국가 주장 철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향후 통일부장관의 국가관과 안보인식 지속 점검

- 부처 중요 사업과 정책이 국무위원의 인식에 맞춰 편중·왜곡·불법이 없는지 수시 모니터링
- 통일부장관의 국내외 활동 시 두 국가 주장 계속 할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재심사 필요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검토 등

북한인권

북한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북한인권실태 감추기를 중단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인권실태 알리기를 저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시도 규탄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 북한인권기록센터 사업 중단 등 국내·외에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을 숨기려는 정부조치 지적하며 원상복구 촉구
-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제대로 바로알기' 정책이 실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 제시
: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대표(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의 실례확인과 국제사회 평가 경청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북한인권재단 출범

-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 : 현재 발의 법안을 신속 심의하여 당이 재단 출범 적극 주도
: 북한인권법 개정(이재정, 2211503, 25.7.16)
북한인권법 개정(추경호, 2205685, 24.11.19)
북한인권법 개정(김용태, 2205518, 24.11.13)
북한인권법 개정(김기웅, 2202369, 24.7.30)

•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전환 촉구

- 북한 실상을 회피하거나 숨기려는 정부의 비겁한 조치에 맞서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실태를 바로 알리려는 노력 경주
: 북한인권법 개정(김기현, 2212822, 25.9.9)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성 제기 및 방안 제시

- 사관학교 생도의 장교 복무 지원율 감소, 중견 부사관 전역지원서 급증, 신규 부사관 모집율이 역대 최저인 상황임을 밝혀내고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시함
- 군 초급·중견 간부 복지와 급여체계의 획기적 개선, 군 간부 이탈 방지와 군 병력자원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안을 제시함
- 군 장병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국회에 '군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 국회가 군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정함

•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의 문제점 지적

- 2020년 GP 총격, 2022년 12월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은 이미 17차례 걸친 도발로 군사합의 위반을 넘어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시켜옴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대전차방벽 무장강화,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및 사격 훈련 중단 등이 군의 사기를 짓밟고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함

• 핵 잠수함 도입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건조시설 문제 등으로 실제 도입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핵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외비 사업'으로 추진돼 오랜 기간 걸린 점을 지적하며 '국책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안

• 특검의 오산기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한미동맹 훼손 상황을 비판

- 공군본부 국감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의 '특검이 압수수색 전 협조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내고 압수수색 당시 군 지휘부의 보고 및 대응, 이후 주한미군 측의 항의 서한 발생 과정에서 합참의장,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무능한 대응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함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초급·중견 간부 복무 지원을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군 병력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군 초급·중견 간부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군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필요성 지적

- 군 장병의 사회와의 경제적 보상 격차를 개선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개선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군 장병 대상별 맞춤형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군 장병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국회에 '군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군 복지 향상에 나설 것을 결정함
- 군 장병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주거·보수·교육지원 강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의 재설계 추진
- 장병의 작전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
- 군 복무중 성취달성 프로그램 확대 및 직업 안정성을 제고
- 군인이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지원책 강화

이재명 정부 실정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점

주요 내용 및 성과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문제점 지적

-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 군 작전 및 훈련 등이 제약을 받게 되어 막대한 안보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북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대전차 방벽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실시하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함에도 군이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해서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군이 정치적인 고려에 휘둘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강조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이재명 정부의 평화쇼 안보해이 시도에 대해 軍의 대응태세 점검

-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군사훈련 축소, 전작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졸속 유화책을 이용한 국가안보 정쟁화에 차분하게 대응
- 이재명 정부의 졸속 대북 평화쇼로 간과할 수 있는 러시아 군사 기술 이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현재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세 및 대응을 지속 점검

행정안전
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거대여당 친여정당 독주 국감

주요 내용

• 상임위 독단적 일방 운영

- 이재명 정부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친여정당 포함)은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했음
 - 증인 채택 및 증인 고발시 수적 우위로 일방 처리
 - : 우리당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증인 신청 거부
 - : 김현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신고 내역,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현지 관련 자료(음성파일 : 지사님 6천만원은 있음, 5백억 필요) 미제출
 - 행안위원장, 우리당 의원에게 발언권 미부여, 발언 간섭 및 통제, 여당 위원들은 고성으로 우리당 의원 발언 방해
 - 우리당은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은 선례에 따라 노태약 선거관리위원장이 행안위에서 국감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석 시킴

• 모든 일은 前 정부 탓

- 캄보디아 사태는 전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1인 증원 요청 무시 및 외사국 폐지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구출쇼, 전세기쇼로 사건 본질 호도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5년 9월 26일 무자격 하도급업체의 배터리 이설 및 매뉴얼 미준수 등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예산 탓하며 45시간만에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재난 컨트롤타워) 엄호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 중앙지검 고발

• 계엄몰이·야당탄압·정치편향·역사뒤집기 위한 일방 국감

-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 계엄동조로 몰아가며 행안부 감찰
 - 부산의 경우 민주당은 행안부 지시도 없이 청사 폐쇄했다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 이에 부화뇌동해서 행안부는 감찰 진행
- 일부 반중국 정서와 반중 표현을 “혐오, 차별”로 규정하고, 과거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반일·반미 선동·시위때와는 다르게 강력 대응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멸공” 댓글 적은 경찰관 징직 처분, 다른 쪽의 정치편향 징계에 비해 중징계 의결
- 민주당과 친여정당, 여순 사건 당시 남로당 좌익세력들의 반란 및 경찰 희생 부정하며 대한민국 건국 부정
 - 경찰청 직무대행, “여순사건, 반란 아니다” 답변

• 지방자치 역행(소비쿠폰, 부동산 대책) 정부, 중앙통제 정권임이 드러난 국감

-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정책은 정반대. 소비쿠폰 발행 위해 시도와 협의없이 일방 통보하고 재정 부담 일방 요구
 - 서울의 경우 시장이 취임 후 부채 6000억원 줄여냈는데 소비쿠폰 때문에 3500억원 지방채 발행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3조3845억원 경기도 빚), 올해 소비쿠폰으로 경기도 지자체 빚 가중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발행에서도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재정부담 차등, 서울시는 25% 부담이나, 경기도는 10%만 부담토록 함
- 서울 쏠 지역과 경기 15곳을 토허제로 묶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서울, 경기도에 발표 하루 전날 일방 통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대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 피해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정자원 화재, 매뉴얼 부재와 기본 안전 절차 무시 “총체적 관리 부실”

-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5층 전산실의 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 발생)
-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 일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되어, 정부 전자시스템 마비로 국민의 일상 및 행정 서비스마저 중단
 -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 436개 등 대전센터 내 전체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 가동 중단, 전산실 배터리 팩 총 384개 모두 소실
 -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등 7전산실 내 시스템 장애 96개 포함)

• [성과]

- 국정자원 기본 안전 절차 무시 및 감리·시공사 책임소재 불명확 등 문제점 확인과 국정자원의 “내부 관리체계 점검” 강화
-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로, 45시간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리더십으로 정부의 무능력 확인
- 데이터 백업 고도화, 이중화 시스템강화, 복구기준(SLA) 제도화 추진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전산 행정시스템 재정립(국가 전산망의 안전성 강화와 신속 복구 체계 확립)

- 국민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시스템 관리 컨트롤타워의 책임까지 국정조사 요구
-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구성 (위원장 박덕흠)
 -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피해 제보센터 개설
 -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입법적 미비점 개선 예정
- 주요 공직자 재산등록 지연, 특히 김남국 등 청와대 직원의 재산등록 현황에 대한 국민 궁금증 증대, 수기로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요구(계속)

정부조직 개편(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무리한 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 문제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책 없는 검찰청 폐지로 상호견제 없는 불균형 수사

- 지난 9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8년의 역사를 지닌 검찰청은 1년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국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큼
- 2021년 수사권조정 후 사건처리(20% 증가)가 지연되고, 사건절차가 복잡해져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문제점들 발생하고 있음
 - ※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사건접수	100.8	101.8	110.4	127.7

- 1% 정치사건 때문에 99% 민생수사 공백으로 각종 범죄의 확산 위기

• [성과]

- 정부 및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의 정부조직개편”문제점과 국민피해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검찰 수사 공백과 경찰 수사 지연은 곧 국민피해

- 그동안 검찰이 쌓아 온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 이전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노하우를 짧은 기간 내에 온전히 이전할 수 있을지 의문
- 범죄대응 역량 약화로 중대범죄 증가 가능성 우려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송치 후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미비한 제도 보완 필요 (법률 개정 추진 예정)

무늬만 국가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점검 국가적인 소방조직 지자체 부담만 가중

주요 내용 및 성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률 9.2%

- 문재인 정권시 소방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2020년 지방직이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그러나 지자체 사무로 규정된 소방업무를 국가 사무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인건비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전환 직후인 2021년 소방관 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13.6%
2022년에는 10.5%로 하락
2023년에는 10.8%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8.6%로 곤두박질.
올해 역시 소방관 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9.2%에 불과
-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 6조 원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은 제한적.
10명 중 9명의 소방관 월급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셈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소방업무 법 개정 및 자원 마련 대책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실질적 국가책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대책 시급
- 지자체 사무로 규정된 소방업무를 국가 사무로 변경하는 제도적 개정 검토
-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고 있지만 소방안전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용 자원 마련 검토 및 관련 법 개정
※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268억2400만원	7933억2800만원	8897억9300만원	7728억원	8874억1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관리 선관위의 선거 관리 및 보안 강화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선거 부실관리와 안일한 보안점검

- 총선·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중 80%가 위촉 투표조사무원 과실로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 못해 부정선거 의혹이 확대되어 이어졌음
- 부실한 자체 검증에만 의존하는 국민정보 관리
21대 대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 4439만 187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선거구, 투표일자 등 민감한 정보와 사전투표 여부까지 담겨 있음에도 자체 검증에만 의존.
선관위는 매년 2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으며, 2023년 국정원 컨설팅에서 대외비 문건 유출을 인지 못하는 등 보안 능력 한계 드러남

[성과]

- 사전선거일 명부 망 열릴 때 보안 대책 부재 확인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와 배터리 같이 있으며, 듀얼시스템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
- 위촉사무원 대상 교육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고 강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체계적 방안 마련 검토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전산 보안 체계 제도화 및 선거관계자 교육 강화

- 4400만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는 민주주의 핵심 인프라로 근본적 보안 강화 대책 촉구
- 선관위도 국가정보원 서버 보안 점검 받도록 의무화
- 선관위 망 분리, 서버와 배터리 분리, 이중 운영 체계(듀얼 시스템) 등 전산 보안 예산 반영
- 선관위 투표조사무원 교육 강화법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안, 25.6.2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기획체포”

주요 내용 및 성과

• 경찰의 보여주기식 불법 체포

-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 날짜를 협의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단순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경찰의 합작품이라고 주장
- 출석요구서의 “조작된 정황”에 대한 의혹 제기
 - 9월에 출석날짜를 합의했음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횡수를 누적시키는 과정상 문제점
 - 사건 담당자(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이는 정기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건 관련자를 빼돌리기 위한 은폐성 인사로 볼 수 있는 문제점 지적

• [성과]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사의 체포를 넘어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 “경찰 수사권 과잉화 우려” 등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획 체포” “정치적 보복” 비판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보완

- 검찰해체 이후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제도적으로 보완
- 정권 출범 초기 공세적 수사로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이나 진영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절차의 적정성, 수사의 긴급성, 형평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속적 감시·감독 필요.
- 이진숙 위원장 체포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부작위 직무태만으로 징계 요구(계속)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국감전반, 'K-컬처 300조' 실행력 점검

- 2025년 국정감사는 ▲정부의 'K-컬처 300조 구상'의 실행력 검증 ▲콘텐츠 정책 집행구조(보조금 중심체계, 공공기관 운영·감사) ▲저작권 플랫폼의 공정성 및 AI/TDM 환경 대응 ▲문화시설·박물관 등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현장 안전 ▲체육계 인권·청렴 거버넌스 개선 요구로 압축됨

● 콘텐츠 집행 구조 개선 요구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 중심 공모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출연금 전환·성과 재투자 루프 설계 주문
- 게임제작지원의 미출시·폐업 리스크와 낮은 회수율 문제 제기, 성과기반 관리 강화와 사후 평가 고도화 요구

● 디지털 플랫폼·저작권 공정성 강화 지적

- 웹툰·음악·게임 등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계약구조와 불투명한 수익 배분 문제 지적
- 문체부 표준계약을 악용한 기획사의 불법 계약 사례, 네이버 웹툰의 수익독점 구조 공개
- TDM면책과 AI학습물, 확률형 아이템 표시·위반 제재 등 디지털 공정성 의제 관련 이슈 제기

● 체육계 인권·청렴 거버넌스 확립

- 체육계 폭력·성비위·배임·셀프징계 관행을 집중 조명,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징계 독립성 부재를 지적
- 각종 대회의 안전관리 부실과 불공정 서약서 문제를 공개

● 문화시설·국가유산·관광의 지역 균형 발전 과제 제시

- 국립기관 대관 운영 공공성, 지역 박물관·공연장 수요·서비스 격차 지적

'K-컬처 300조' 구상 실행력 부족 점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K-컬처 300조' 구상 집중점검 및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K-컬처 300조' 구상의 실행력 부족 집중 점검

- 성과지표 부재와 투자집행을 저조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지적
- K콘텐츠 펀드의 투자 미집행액이 40%에 달하는 것을 공개하고, 투자·성과 관리의 체계화를 요구
- 투자형 문화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국감 핵심 이슈로 부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문체부, 보조금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장관, "투자 프로세스와 수익창출 구조 점검" 답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 펀드 운용지침 개정 검토를 통한 성과 기반 운용·환수체계 명문화 검토
- 문화산업펀드 성과 보고서를 국회 문체위 정례안건으로 편성, 지속점검

디지털 플랫폼·저작권 공정성 강화 플랫폼 산업계의 불공정 계약 구조와 불투명한 수익 배분 문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웹툰·음악·게임·AI 등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사례 개선 요구
 - 기획사의 불법계약 강요 사례 및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의 수익 독점구조 공개 및 개선 요구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미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지적
 - TDM면책과 AI학습물 관련 이슈 제기를 통한 저작권자 권리 보호 문제 제기
 -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디지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검토
 - 플랫폼 표준계약서 고도화 및 계약 투명성 확보 제도 도입 제안
 - AI학습 데이터 등에 대한 디지털 공정성 패키지 입법 검토

체육계 인권·청렴 거버넌스 확립 체육계의 폭력·성비위·배임·셀프징계 관행 집중 조명 및 개선 요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비위·배임·셀프징계 관행 공개 및 개선방안 촉구
 -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징계 독립성 부재를 지적
 - 대회안전관리 부실과 불공정 서약서 문제를 제기
 - 정부의 체육계 인권·청렴 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공식화 제안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체육계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 체계 확립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징계 주체를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인권침해·비위 사항을 의무공개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
 -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징계절차 분리, 안전보험 제도 개선” 약속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징계 권한 강화 및 예산 확대 검토
 - 문체위 차원의 ‘체육계 인권·청렴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연례 보고 제도화 검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이재명 정권의 감금이 韓美 관세협상, 농업인 불안 지적

- 농업인 소통부재 감금이 관세협상으로 농업인 불안 증폭지적. 농민과 소통 및 MOU, 비망록 등 공개촉구
- 조현 외교부장관의 쌀 쿼터 조정 발언 문제점 지적으로 쌀 개방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확답(관계부처 합동 입장문)을 이끌어냄

• 산림청장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의혹, 셀프 추천 문제 지적

-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의제21」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백현동 개발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밝혀냄
- 산림청장 인사에 대한 김현지 실장의 개입의혹과 셀프 추천 등 문제 투성이 인사 의혹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

•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해양주권 포기한 이재명 정권 비판

-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이 아닌 군사 목적 시설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 비판
- 국제법 위반한 중국에 대한 규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비례대응 촉구

• 포플리즘에 편승한 설익은 농어촌기본소득 비판

- 졸속추진으로 지방재정 위험, 지역갈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대로 된 검증 후 정책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
- 공동영농 등 검증된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넘어 농업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

•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물 이전의 연관성과 추진 상황 점검

- 북극항로 개척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해양수산물 부산 이전의 연관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 새로운 경제축으로 시너지효과 내야 함을 강조

한미 관세협상 문제 지적 감금이 한미 관세협상 문제점 지적 및 농업계 우려 전달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재명 정권의 감금이 韓美 관세협상, 농업인 불안 지적

- 농업인 소통부재 감금이 관세협상으로 농업인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 농민과 소통 및 MOU·비망록 등 공개촉구
- 조현 외교부장관의 쌀 쿼터 조정 발언 문제점 지적, 증인 출석 요구 및 기자회견, 농식품부 장관의 대응 질타 등을 통해 쌀 개방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확답(관계부처 합동 입장문)을 이끌어냄
- 쌀 뿐만 아니라 대두 등 농산물 개방은 불가함을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불분명한 한미 협상결과, 지속 점검 필요

- 10.29 관세협상타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주장. ‘농산물 추가 개방 방안’ 했다는 이재명 정부 설명과 배치
- 특정 품목에 대한 개방 없지만 검역 완화 등을 통한 농산물 개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산물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및 지속 점검 필요

산림청장 인사 의혹 김현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및 셀프 추천 문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산림청장의 인사 문제 지적 및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제기

- 전문성이 중요한 산림청장 임명이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실장과의 개인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하여 「성남의제21」에서 김인호 청장은 정책평가위원장, 김현지 실장은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백현동 개발 때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의견서를 낸 산림청장의 문제에 대해 지적
- 국민추천제에서도 셀프추천을 하고 정체불명의 인사에게 검증서류를 제출한 문제 등 의혹투성이 임명과정에 대해 비판
- 대형화 추세인 산불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질의에도 답변을 못하는 모습 부각. 전문성 부족·자격 불충분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산림청장의 직무수행 능력 지속 검증

-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산불 진화의 총책임자인 산림청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속적 능력 검증 필요
- 백현동 옹벽 사건과 관련하여 김인호 청장이 연루된 증거가 나온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필요

서해 중국 구조물에 대한 대응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대책과 노력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우리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촉구

- 중국은 2024년 4~5월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하였고, 12월에도 추가로 1기를 설치하였음. 올해 2월에 이어 9월 24일에는 해수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중국 해경 함정 두척이 에워싸고 대치하는 상황 지적
-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강조
-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함. 차후에는 국가의 해양 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런 장면들을 녹화하고 보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비례대응 예산 확보

- 추경 예산 편성시 1차 10억원, 2차 605억원을 올렸으나 최종 예산에 반영 안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비례대응 원칙 고수 및 강력 대응 의지 표명

- 직접 비례대응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란 정부의 말과 다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부각하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졸속추진 문제 포플리즘에 편승한 설익은 농어촌기본소득 비판

주요 내용 및 성과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문제점 지적**
 - 졸속추진으로 지방재정 위험, 지역갈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대로 된 검증 후 정책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
 - 지방부담 과다해 돌려막기 예산구조.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 사업비 삭감. 농업인 수당 삭감. 농업인 보조금 감액. 청년씨앗 통장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삭감하며 무리하게 추진. 해외에도 이런 방식 정책 없음을 강조
 - 소모적 사업보다 공동영농 등 검증된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넘어 농업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검증 및 보완**
 -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필요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검토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이전의 연관성과 추진 상황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극항로 개척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연관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함**
 - 정부가 북극항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나 세계 3대 해운사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하고, 북극항로 경제성과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첫 단추로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새로운 경제축으로서의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 조선산업을 해수부로 가져와야 해운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지적
 - 북극항로 관련 예산 대부분이 과거부터 추진되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11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급하게 투입되는데 따른 낭비적 요인을 점검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북극항로 개척의 장기적 관점 유지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안정적 추진**
 - 북극항로의 이용은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하고,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포항 등 주변 항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
 -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들의 이전도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주요 현안인 원전 수출, 석유 탐사 등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되고 반복된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익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템플레이로 대응하면서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의 객관적·합리적 정책 추진을 강조했고,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국제적·경제적·환경적 변수 등을 종합 점검하고 조명함**
 - 체코 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의혹은 대선 전후 해당 계약서 공개에 대해 여당은 공개와 비공개 방침이 혼재된 채 매국계약 등 선동적 주장까지 가했지만, 당은 일관되게 국익과 수출, 탄소중립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원전 정책 및 수출의 정당성과 우수성 등을 부각시킴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실패 관련 한계, 계약과 절차적 문제 등에 집중한 여당의 질의가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국내 에너지 수급, 자원개발의 적실성 및 현실, 탐사경험,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정파적 이해와 이념을 뺀 합리적·객관적인 접근으로 무기화된 자원개발의 중요성 강조함
 - 원전에 대해 대선 전후 태도가 바뀐 여권의 이중적 태도(탈원전 등)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부조직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실제도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비판하며 정파를 초월한 국민 공감형 대안을 제시함
- **수출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실체와 성격, 지연 및 관련 피해 실태, 대국민 발표의 이중성, 소통 부재, 반미 자극의 국론분열 공세 등 난맥상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국익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신속한 협상타결과 관련 대책을 요구함**
 - 특히, 관세협상 관련 한미 간 입장 차이 극복, APEC 前 신속한 타결로 국익 확보의 중요성, 주요 수출 분야 피해 상황 등 협상 전반에 대한 추궁과 대응을 주문함
 - 또한, 한중 무역 성격·피해사례 제시와 대책 마련, 공급망의 저변 확대의 현실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 등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음

자원개발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백년대계 자원개발은 1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제 구현

주요 내용 및 성과

- **여권의 정파의 이해관계, 정략적 소재로 부각된 자원외교 정책에 대한 결과론적 공세에 국익에 바탕을 둔 일관된 추진 강조와 정쟁 식 대응 개선 지적**
 -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보여진 자원빈국의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미래보다 정략적 태도를 앞세우는 여권에 대해 14회 시추한 가이아나, 중국 등 해외 성공사례 비교 등을 통해 자원개발의 성격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 - 작년 총선 이전이 아닌 6월 발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고려한 정략적 태도가 아닌 점 강조, 문제 있다면 특검과 고발 주문, 자원개발의 정략적 접근 차단함
 - 과거 자원개발 공세 및 국책사업에 국론분열 반복 없이 끈기있는 분석과 탐사 전략 등을 통한 진행 부각, 시추 1회 실패로 장관의 감사 청구 문제 지적
- **2차 시추 공모에 英 시추사 포함 복수의 글로벌 메이저사의 입찰과 선정 사실 여부 추궁 및 지속적 탐사 중요성 강조**
 - 글로벌 자원개발 경쟁·추가 시추 중요성 제시 등 통해 여당의 정략적 공세를 비판, 자원개발의 진전과 후퇴를 국익 차원에서 여론 환기
 - 1회 시추결과로 "대국민 사기극" 여론몰이에 대해 2차 시추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과정 점검으로 자원개발 연속성의 중요성과 정당성 부각
 - 中 4만8천·日 8백회 시추, 가이아나 사례 등 꾸준한 시추로 성공 역사 강조
 - 과거 자원개발 추진 관련 국론분열 극복 필요성, 회토류 등 자원 무기화 현실, 20% 성공 가능성 및 1회 시추 성공사례 부재 등 부각, 여권의 파상적 공세로 위축된 시추 상황 점검, 자원개발에 대한 패배주의적·정략적 접근 자제 지적
- **정부 차원의 정권을 초월한 합리적 자원개발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주문**

**에너지정책은 원자력 중심의 백년대계
체코원전 관련 원전수출 논란 자제하고, 초당적 원전정책 추진 계기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체코원전 관련 한수원과 美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에 대해 여권의 매국계약 노예계약 공세의 정당화 수단 중 하나인 계약서 공개 여부 문제점 확인, 효과적인 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원전정책과 수출확대 추진의 동력 확보**

 - 계약이 괴담과 억측으로 오도된 측면, 국익을 중심에 둔 공개 여부 추궁에 정부는 ‘정상적인 계약’ 여당도 “국익에 맞는 해법 고민”의 태도를 유도, 계약서 비공개로 정리, 매국계약 공세 차단, 계약내용과 타당성 분석하며
 - 매국계약 공세의 논리적 비약과 허구성도 관세협상과 비유, 한수원 등 관계자의 매국노 여부, 여권의 태양광 불법 공조 등 지적하며 국익계약인 측면 강조
 - 추가 2기 협상의 중요성과 원전수출의 초당적 과제인 점을 부각시킴
 - 당정에 정권을 초월한 원전수출, 원전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
- 대선 전후 입장이 모호해진 정권의 이중적 원전정책을 지적하며, 국내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원전 경쟁에서 분명하고 정상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강조**

 - 여권 내 발언의 변화, 11차 전력수급계획 변화 시사 등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강력한 질타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반대’ 입장 확인
 - 설계수명 만료 고리·월성원전 가동 허가의 절차적 하자 지적, 해당 지역 지원 등 요구하며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당위성과 지속가능한 원전정책 부각
- RE100 태양광 실체 분석, 탄소중립의 핵심인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접근, 세계적 흐름의 변화로 정치와 이념을 뺀 에너지정책 추진의 중요성 확인**

 - 가파도 RE100의 에너지판 대장동 사업, 태양광 산재, 출력제한, RE100에서 CFE로 글로벌 흐름 변화 상황 등 제시로 여권의 RE100 산단 등 재생e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무력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대왕고래 프로젝트 포함 자원개발에 정쟁 아닌 국익과 기술적 접근 극대화**

 - 2차 시추 관련 정치권의 정쟁요소 제거, 희토류 등 자원공급망 확대 지원
 - 자원개발 관련 법안과 예산 발굴 및 초당적 추진, 정부의 지속적 시행 지원
 - 해외 성공사례(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 33회, 캐나다 레덕 134회 시추 등)를 통한 자원개발의 연속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차 시추 등에 글로벌컨소시엄 구성 등 정치권 논란 차단 방법 강구 고려**

한미 관세협상 추진 관련 입체적 조명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한 절차와 내용에 적합하며 신속한 협상 타결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체코원전 추가 2기 추진을 위한 초당적 접근으로 원전수출 지원 강화
 -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등 원전수출 및 정책 강화 관련법 적기 처리 등
- 망국적 탈원전 시도 차단을 위해 원전설계수명 연장, 신규원전 추진 등에 범정부적 여론형성과 관련 지원 확대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협상 과정과 발표의 문제점, 지연에 따른 피해대책, 신속 타결 등 강조하고, 협상 전반 관련 점검과 책임감 있는 구체화를 통해 관세협상 전반을 조명하며 건설적인 한미관계 중요성 강조
 - 7월, 8월 성공적 정상회담 자화자찬 평가 후 '탄핵' 타임지 인터뷰(李) 등 국민기만 태도, 소통부재, 부처와 엇박자 등 확인하며 과정과 절차 개선 요구
 - 협상 내용·과정 공유의 타당성, APEC 시점에 맞게 합의, 합의 문서화, 신속 합의 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협상 절차 부각
 - 농산물 수입 여부 확인에 '부정' 답변 확인, 타결 지연으로 기업 피해 실태 제시 및 피해 최소화 주문, 자동차·철강업계 등 타결 지연 관련 손실 비판 및 산업부·무보·코트라 등의 대응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
 - 웨스팅하우스 매국계약 주장과 관세협상의 이중성 성격 비교, 정부 협상력, 여권의 속도전 아닌 지연전, 협상 내용과 속도 등 대비로 합리적 대응 주문
- 관세협상 관련 이념공세·국론분열 여론 차단하며 친중노선 의혹에 대한 경계와 국익 확대 차원으로 산업분야 대응 중요성 강조
 - 총리 등 여권인사의 국론분열·대미 자극·반기업 발언 자제 요청, 울산 구청장의 선동, 협상 지연의 미타 친중 노선화 의구심 등 협상 태도와 분위기 문제 지적하며 국익 차원의 대책 필요성 강조와 주문
 - 中 인버터 등 국산제품화 실태 부각, 中 일변도 수입구조 다변화 강조 등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홀해진 한중 무역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 점검
 - 마스가 프로젝트 전반 점검과 조선업의 한미동맹과 번영 측면에 상세한 조명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10.29 합의 관련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점검, 관련법 발굴 및 처리 주도
 -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의 초당적 공동대응
 - 관세협상 피해 예상 산업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발굴 및 추진
 -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업 등 관련법 보완 및 통과 추진에 역점
- 대미 의원 통상외교 활동 강화, 글로벌 무역지도 다변화 활동 확대

중소벤처기업 분야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중기부 제2차관 공석 상태 지속 및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 부각

-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중기부 제2차관 직제가 신설된 지 두 달이 되었으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마저 제기
 - 그럼에도 소관 부처 장관은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만 강조하면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빈축

● 공영홈쇼핑 문제점 집중 부각

- 공영홈쇼핑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추궁
- 여성 쇼호스트 불법 촬영 사건 및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부실 대응 질책
- 내부 운영 비리 및 부실한 상품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

●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및 정부 측 동의

- 온라인 플랫폼 성장 이면에 가려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대응 방안 제시
-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특성을 살려 조화롭게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 환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
-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 방안을 제안

● 약자의 어려운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

- 벤처 대기업 출신의 중기부 장관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활동 약자의 어려움에 적극 관심 갖고 실태를 파악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

중기부 제2차관 임명 관련 중기부 제2차관 공석 상태 지속 및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

주요 내용 및 성과

● 제2차관 공석 상태 지속에도 장관은 수수방관 자세 질책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기부 제2차관 직제가 신설된 지 두 달이 되었으나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책임자를 추천했는지 질의
 - 한 장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만 강조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답변
 -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는 자세로 일관
- ※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소통 및 역할의 부재를 지적하고 질책함

●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 및 문제점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지낸 인태연 前비서관이 제2차관에 내정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하여 장관은 기사를 통해 알았고 개별 인사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
- 인태연 前비서관은 ①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인 김어준의 처남이며 ② 과거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우회 전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희망살림' 단체의 공동대표였고 ③ 자영업 비서관 재직시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를 받음
- ※ 그럼에도 임명된다면 처음부터 특정인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에 불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중기부 제2차관 임명 과정

- 인태연 前비서관 실제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적의 대응

공영홈쇼핑 문제점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의혹 및 부실 운영 실태

주요 내용 및 성과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의혹

- 신주를 발행한 뒤 자사주로 취득해 공공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 제기
 - 중기부 장관은 공영홈쇼핑 민영화 계획은 사실이 아니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았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
 - ※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수백억 원 규모의 단기 상품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T커머스 참여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신주 발행은 지분 축소를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의심된다고 지적

여성 쇼호스트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사건

- 여성 쇼호스트 대상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의 배우자(동료 쇼호스트)에 의한 2차 가해 발생에 대하여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

운영 비리 및 부실 관리 실태

- 과거 젓소 불고기를 한우 불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사기 판매 적발
- '방송상품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정작 상품이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검증이 미흡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개척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미 대형 쇼핑몰이나 온라인 몰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자주 방송해 수익 창출에만 열중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여부

-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 지분을 가진 '한국 중소벤처기업 유동원'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결과를 확인

정책 대안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및 정부 측 동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배달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편입

-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한 운영과 동반성장 평가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
 -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 평가 참여 의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인식

-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두 개 상품권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 조화롭게 활성화 할 것을 촉구
 - 중기부 장관은 두 가지 모두 상권 활성화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

특별재난지역 환급 예산 대책

- 산불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20% 환급하는 행사가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것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
 - 중기부 장관은 정책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심각성을 강조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촉구
 - 중기부 장관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 여부

- 배달 플랫폼 동반성장평가 참여 의무 방안 마련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환급 예산 마련
-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제활동 약자 배려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심과 대응 모색

주요 내용 및 성과

다이소 매장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대응

-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점포를 일정 규모 미만으로 운영해 규제를 회피하며 판매 품목을 확장하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

- 젊은 층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대기업과의 보수 격차라고 지적하고 격차 해소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돕는 핵심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 촉구

현장 목소리 경청

- 노란봉투법 시행을 비롯해 주4.5일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상공인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

온누리 상품권 환급 시스템 개선

- 추석 동행 축제 당시 2만 원 환급을 받기 위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긴 줄을 서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장 내 무인 환급기 설치 등 '즉시 환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관리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부담 경감 크레딧'이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는 사례 발생을 지적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대책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경제활동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대응 방안

-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소관 부처의 정책과 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 모색

보건복지
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미래세대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책임 국감

-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안 해소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크레딧 확대, 세대간 형평 도모하는 진짜 연금개혁 등 재정 안정 방안 마련 촉구
-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기금 운용 원칙과 전문성·정치적 독립성 강조
- 민주당의 혐종 프레임 매도에 맞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필요성 입증 위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
-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위한 현금 복지 문제 제기 및 현 정부 아동수당 지급의 지자체 차등 지원 문제 등 지적

• 국민안전·약자동행·민생 위한 대안 제시 정책 국감

- 필수 의료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촉구
- 국가책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실태 점검 및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안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난적 복지서비스 마비 사태 지적 및 복구 상황 철저 점검
-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위한 현장 반영 실효적 정책 마련 촉구
- 식품안전,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안전상비약 제도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촉구
- 경로당 부식비 예산 마련, 마약·약물 오남용 문제 등 정부 안일한 대응 질타 및 대책 촉구

• 대통령실 보건복지 인사검증 실패·내로남불 고발 국감

-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 불법 검직 징계 받았던 인물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핵심 자리에 앉힌 것은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 검증 과정 전면 공개와 인사시스템 재정비 촉구
- 윤성찬 대통령 한방주치의, 정치 편향 논란 중심에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이며 현직 협회장 임명은 명백한 정책 결정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로 즉각 정리 요구

• 팀플레이로 조직적 대응력이 돋보인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 국감 전 사전 회의에서 당일 핵심 이슈를 사전에 공유하고, 간사 의원 중심으로 자료를 적극 공유하여 핵심 이슈에 대한 화력 집중. 여당의 무차별 정치공세에도 신속한 대응 위해 발언 순서까지 변경하며 적극 반박하여 언론에 다수 보도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기금 운용 효율화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청년층의 제도 불신, 사모펀드 투자 손실, 외국인 추납제도 악용, 내부 윤리 문제까지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

- 2030세대 연금 불신, 수익비 감소 지적과 세대 간 형평성 논의 부족,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크레딧 확대 마련 촉구
- 정부 코스피 5000만 집착, 구조개혁 및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외면 비판
- 외국인의 추납 신청 급증(20배 증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제기
- 약 9,000억 원 규모의 훔플러스 투자 손실 등 부실투자, 운용사 선정 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
-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연기금 운용 원칙과 전문성·정치적 독립성 강조
 - 전문성을 담보한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기금을 '국민 쌈짓돈'처럼 이래라저래라 임의로 운용.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 국민연금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 보장과 장애연금 제도 수급요건 개선
- 기금 운영 해외 주재원들의 연속적 이탈과 고위직 성비위 등 내부 윤리 문제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청년층 신뢰 회복 및 세대 간 형평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및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청년층 국민연금 불신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할 소통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구조개혁이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크레딧 확대 포함한 연금개혁 로드맵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조속히 논의, 확정하고 추진
- 외국인 추납제도 등 연금 제도 불합리한 부분 개선
- 투자 운용사 선정 기준 강화 및 부실 투자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 국내 주식투자 확대 논의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종합 고려, 신중 검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 계층 지원 방안**
 -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재정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및 중앙정부의 지원책 모색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 공공병원 중 성공적인 '지자체 소유-공단 위탁운영' 모델을 부산 침례병원에 적용하여 지역 필수의료 거점 강화 필요성 강조
 - 성남의료원은 낮은 병상 가동률과 전문의 부족 등 심각한 운영 비효율을 겪고 있으며, 복지부의 부적절한 지원금 지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
 - 의료사고 책임 해소와 수련계획 개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시급성 강조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확보율 저조 지적
 - '필수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과목 확대 및 국가 배상 지원 명확화 요구(전공의 추가 책임 오해 방지)
 -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방치되므로, 장애 분류와 무관하게 보호와 지원 필요성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 대안 모색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보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 마련 추진**
 -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역 격차 해결 위한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 및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 경계선지능인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 '무약촌' 해소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강화 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위해
근본적 제도개선 주문 및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주당의 무차별 혐종 프레임 매도에 맞서 '혐종'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임을 강조하며 반박 근거자료 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이고,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임을 밝힘
 -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중국인 건강보험은 2016년 이후 4,300억원의 적자를 누적했고, 2018년 한 해에만 1,509억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점 지적
 - 다행히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 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분노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하고, 입국 직후 고액 진료 후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한 결과이나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개선 과제가 있음을 강조
- **국민이 내는 혈세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차단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근본적 정책 대안 제시**
 -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필요성 강조
 - 외국인 건강보험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된 제도에서 한국 국민이 납득 할만한 공정한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 제도화
 - 건강보험제도 전반 구조적 개선 과제 단계적으로 추진
 - ▲ 첫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무 교육 제도화 ▲ 둘째, 실시간 자격 검증 시스템 보완 ▲ 셋째,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제 도입 ▲ 넷째, 국가별 위험등급제·보건안전 사전 평가제 도입 검토 등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위한 국민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법(국민건강보험법) 적극 추진**
 -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책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실태 점검 및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정책 대안 제시

- 지난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 전달
 - 공적입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실상은 담당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급기야 내년 정부 예산까지 삭감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박약 강하게 비판
- 아동 분야 전문공무원 제도 도입 등 인력 운영 방안 전면 재검토 등 촉구
- 해외입양인들의 숙원인 입양기록관 건립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인력 총원 필요성 강조
 -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중인 입양기록 관리체계 문제점 지적
 - 단순 기록이 아닌 당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할 전문 인력 필요성 등 강조

• 아동 최우선 이익을 위한 가정위탁 활성화 필요성 강조

- 현재 저조한 가정형 보호 비율 지적하며 가정형 보호체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양육보조금 권고기준 미준수 개선, 위탁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위탁부모 모집에 있어 지역별 칸막이 해소, 위탁부모 일상대리권 등 현장 목소리 반영 강조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확대 촉구

-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90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대로 9,71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422명의 생명을 살림. 어떤 저출생 대책보다 효과가 큰 제도임을 입증
- 상담인력 총원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 부산 덕성원 사건 책임회피 보건복지부 질타하며 진화위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진화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사과, 피해자 회복조치, 전수조사 통한 추가 피해자 확인을 권고하였음을 지적하며 즉각적 이행 촉구
 -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피해자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 공개, 긴급 지원체계 수립 및 가동,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 및 환수조치 등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적극 추진

- 공적입양체계 확립,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가정위탁 활성화 등 위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규탄 대통령실 보건복지 인사검증 실패 및 내로남불 규탄

주요 내용 및 성과

• 불법 겸직 중징계 전력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 사퇴 촉구

-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인사를 공공의료 정책 정점에 앉히는 것은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이자,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
 -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교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수령했고, 이후 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용 기준의 두 배 이상을 근무하며, 약 3억 원의 급여를 챙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6조 겸직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겸직이자 공직기강 위반임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은 전형적 보은 인사

- 원칙 없는 내로남불 대통령실 인사시스템 규탄하며 이해충돌 인사 정리 촉구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민주당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에 섰던 인물
 -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산하 직능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해당사자로 현직 협회장을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것은 정책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대통령실 보건복지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촉구 및 철저 감시

- 불법 겸직 징계 받았던 인물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핵심 자리에 앉힌 것은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로 즉각 사퇴시키고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 전면 공개와 인사시스템 재정비할 것을 촉구
- 윤성찬 대통령 한방주치의, 정치 편향 논란 중심에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이며 현직 협회장 임명은 명백한 정책결정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이기에 즉각 정리 요구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 강행으로 국정감사 직전 불안전 출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전환·환경보존 정책간 혼선·충돌 우려 집중 점검**
 - 10월 국정감사 직전인 9월 25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통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전반의 정책 혼선 우려를 맹렬히 지적
 - 4대강 재자연화, 기후대응담 추진계획 백지화 등 이념과 정권의 편향으로 점철된 정책 뒤집기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함몰된 편향적 에너지믹스가 내포한 위험성을 부각시켰고, 정부 핵심 공약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개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확보·주민 수용성 확보·재정 건전성 회복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촉구
 -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무턱대고 '싸다'는 주장만 늘어놓는 정부 주장의 허상을 짚어내 날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숨은 비용(System Costs)이 존재하고, 계통안정화나 예비전력,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비판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기상예보 정확성을 토대로 한 재난안전 강화 등 민생과 생활안전 개선에 힘을 쏟아 민생국감·정책국감 주도**
 -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확대 추진
 - 종이빨대,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됐던 생활속 실천과제들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과정도 국민 생활편의 증진과 실질적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감성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효과 분석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기후행동을 견인할 것을 촉구
 -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대구 취수원 확보, 강릉 극한가뭄 이후의 정책적 대비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전방위 개선방안 제시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노동시장 안정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문제 진단 등 민생국감 주도**
 - 노조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 준비사항 점검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 대책 촉구
 -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및 보완 대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장애인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 산업재해 및 직장내 괴롭힘 등 현장에서 계속되는 문제들의 지적과 개선촉구**
 -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공공분야 산재과다 문제 등 유형별·산업별 과학적 산재예방 대책의 필요성 지적
 -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 지적
- 노동복지 지원하는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모순 지적/캄보디아 취업사기 효과적 단속 촉구**
 - 고용노동부 배치 국가직 9급 공무원 과다임용포기자 발생, 중노위 조사관 업무 과중, 근로복지공단 직원 이탈을 과다 문제 등 고용노동부 내 반노동적 근무 환경문제 지적과 대책마련 촉구
 - 고용정보원의 해외취업 사기광고 모니터링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촉구

졸속 정부조직개편 강행 문제점 정책 목표와 이행 수단이 모호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혼선 우려를 공론화하고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탈원전-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인상 우려 및 산업계 위기 고조, 국가 경쟁력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예측과 불투명한 답변으로 일관한 정부의 무사안일 질타**
 -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가 관할해 오던 업무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끌어오면서, 환경부 고유 영역까지 허물며 급속한 탈원전-재생에너지 일변도로 정책이 경도될 것을 우려
 - 4대강 재자연화나 기후대응담 추진계획과 같은 국가 물관리 기본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변석개식으로 번복해서는 안되며,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당위성 제시
 -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의 폐기나 기후대응담 추진 번복은 최초 보나 제방 등 인프라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치수·수자원 확보·농업용수 등의 목표했던 효과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폭우·가뭄·폭염 등)이 뉴노멀이 된 현실을 배제한 채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정책 번복은 예정된 기후 재난임을 경고**
 - 기후·에너지·노동·환경 정책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목표와 전략의 즉각적인 수립이 필요조건임을 전제로 야당, 지자체, 주민, 기업과 산업현장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촉구
 - 정책 번복으로 인해 추가될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판단. 지속 모니터링과 검증 필요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기후보험 도입 추진과 생활속 기후행동 실천과제 점검과 개선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실천의지 부족을 질타**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폭우·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건강·생활·소득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생계현장을 떠날 수 없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
 - 종이빨대와 일회용컵 보증제에서와 같이 좋은 취지였음에도 회수율은 낮고 부담은 컸던 일방적 플라스틱 줄이기의 부작용에서처럼 감성 캠페인보다는 정교한 정책설계를 통해 각종 포장재나 배달용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속 다배출 분야의 감축에 환경부의 정책목표를 실효성을 중심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
 - 환경부는 2021년 플라스틱 빨대 규제 추진하면서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영향평가) 실시하면서 제조 과정만 검증하고, 정작 폐기·배출 단계의 환경 부담은 누락, 이후 2024년 LCA에서는 종이빨대가 더 해롭다는 결과에도 국내 생산 종이빨대는 안전하다고 해명해 논란 자초 질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생활안전,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과제 제시**
 - 기후 재난의 발생 후 피해보상 개념에 앞서 예방·보장·회복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목표로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더 큰 재정부담을 막고, 기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코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9)
 - 국민편의성은 줄고 현장·기업들의 피해는 컸음을 데이터로 밝힘. 기후행동과 자원순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통해 환경정책의 목표 재설정을 제안

노동시장 안정과 활력 대안 제시 노동시장의 안정과 활력을 위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조법개정, 임금체불,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노동현안과 민생챙기기**
 - 내년 노조법개정에 따른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보완입법의 필요성 지적
 - 대우위니아 사주 일가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증인에 대한 효과적 질의
 - 시각장애인 등의 내일배움카드 사용의 어려움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실효성 위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세분화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내년 3월 시행예정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지속 점검**
 - 노동쟁의 범위판정 별도기구 설립 및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동현장 모니터링 강화, 보완입법 “공정노사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추진 노력
- **임금체불 관련, 대지급금 현황 및 회수율 지속 점검**
 - 대우위니아 일가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논의
-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점검**
 - 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전반적 점검

산업재해의 과학적 예방과 직장내 괴롭힘 개선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노동현안에 대해 행정과 입법차원의 해결책 모색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동안전종합대책, spc산재사고 등 노동현안 민생챙기기**
 - 9월 15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중대재해발생 기업의 영업이익 5% 과징금의 문제점, 공공분야 산재 과다문제 지적
 - 기업의 처벌외에 현장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유도에 대한 엄격한 처리로 산재 예방
 -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찢어지는 작업복으로의 교체의 필요성 지적 등 과학적 산재예방대책 필요성 촉구
-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 촉구**
 -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MBC조사 미흡과 태안발전본부 고 김충현씨 직장내 괴롭힘 재조사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유형별 산업재해에 대한 과학적 매뉴얼 준비 및 예산 점검**
 - 산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과 과학적 행정 대응 촉구
 -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노사정 공동노력 의무와 함께 근로자의 엄격한 안전준수 의무 강화
-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법안 처리 노력**
 -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 여론환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안<제정>”의 처리 노력

**노동친화에 역행하는 고용노동부
노동복지 지원하는 노동부와 기관의 모순 시정 지적
/ 캄보디아 취업사기 효과적 단속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동친화적이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지적

- 올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249명중 97명(38.9%)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업무과다 및 승진적체 등의 이유로 기피현상 지적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 과중과 과소 수당 등의 문제 지적하고 주 4.5일제 주창하는 국민주권 정부 모순 질타
-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총 855명에 달하는 등 직원 이탈율 과다 문제 지적

•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 관련, 고용24 등 취업사기 광고 근절 대책 수립촉구

- 고용정보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근로기준법에 맞는 내부 직원 운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처우 문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근로복지공단의 복지 문제 등 점검

•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사기 광고 단속

- 고용정보원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점검

**국토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이재명 정권 7大 부동산 실정 지적과 정책 전환 촉구 등 정책국감 전개

주요 내용

부동산 실정 지적 및 정책 전환 촉구

- 6·27 대출 규제 및 10·15 수요억제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지적
- 국민 수요 무시한 미분양 발생한 외곽 중심의 공공 물량 공급 계획 비판
- 재초환 폐지 및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촉구
- 이상경 국토부 차관 등 정책 신뢰 훼손 및 국민 분노 '부동산 내로남불 5인방' 사퇴 촉구
- 규제 중심의 정책 실패로 결국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할 경우 과거 좌파정권의 실패 답습하게 될 것 경고
-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실수요 청년 서민 피해 및 내국인 역차별 지적
-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이념 편향적 정책들로 인한 건설 산업의 위기 강조 및 제도개선 촉구

외국인 부동산 증가에 따른 내국인 피해방지대책 촉구

- 증가하는 외국인 부동산의 관리 통합 및 고도화 필요
- 외국인 임대인이 내국인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급증.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먹튀 및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철도역 열차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보여주기식 행정 및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사회적 손실 지적
- 열차접근경보장치 성능·관리 부실 행태 확인 및 질타
- 열차접근경보장치 성능 개선 등 철도 현장 안전 강화 계기 마련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제한 제재 실효성 부족 지적

-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시 타 부처까지 효력이 확장되나, 공공기관은 이를 명시한 근거가 없어 제재 효력 공백 발생
- 부정당업자 제재 '기관 간 확장·일원화' 법 개정 및 연계 고도화 필요

부동산 실정 - ① 공공·규제 중심 대책

이재명 정권의 공공·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문제점 지적 및 정책 전환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서울 도심 아닌 외곽 중심의 공공 물량 공급 계획

- 정부가 9·7 공급대책 통해 제시한 수도권 개발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주택 지구는 서울 도심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 대거 포진
- 반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지 중심으로 진행
- 미분양 발생 지역인 경기 지역에 공급 계획 발표한 점과 공공주도 사업의 느린 속도 및 비효율성 지적

6·27 대출 규제 및 10·15 수요억제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 잇따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발생 및 실수요자 피해 지적
- 신생아특례대출 지방 일괄 적용, 전세 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오락가락 '땀질 처방'식 정책 변동성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재초환 폐지 여·야 합의 신속 통과

-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조세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통해 김은혜 의원 안 신속 처리 촉구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확대

-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민간의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안의 합리적 보완 필요

**부동산 실정 - ② 정책책임자의 망언 및 내로남불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 신뢰 없는 대책은 '백약이 무효'
'부동산 내로남불 5인방' 사퇴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핵심 지적사항

- 현 정권 부동산 대책(6·27 대출규제, 9·7 공급확대)의 실효성 문제 제기
- “정책 신뢰 상실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
- “정책의 신뢰는 내용보다 사람에서 나온다”는 메시지 전달

주요 비판내용

- 부동산 내로남불 5인방. 정책 담당자들의 다주택, 투기, 편법 논란 지적
 - ▲이상경 국토부 차관 갭투자 시세차익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재건축 딱지 ▲구윤철 부총리 재건축 매매 수십억 시세차익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출과 갭투자 ▲이찬진 금감원장 억지 처분 호가 22억
- 규제 중심 정책이 서민과 청년의 주거 기회를 막고 있음
-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비판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지속적인 감시활동

- 현 정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계속 추적
- 투명한 검증과 공개를 통한 정치적 압박 유지

정책 효과 분석

-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의 실제 효과 점검 (자료제출요구권 활용)
-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국민들에 상세히 설명 (보도자료 배포)
- 현행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공급정책 전환 법안 발의 검토
- 시장 불안요인 완화 및 국민 주거안정 법안 발의 검토

**부동산 실정 - ③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괴롭히는 10·15 대책의 문제점 집중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지적

- 이재명 정권의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지적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보전 조치는 외면하고 규제 강화에만 집중. 이로 인해 서울시 정비사업 상당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전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부동산 정책 핵심 책임자들의 부동산 세제 개편 거론에 대한 비판

- 실효세율의 정확한 정의와 산출 방식,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 등을 제시하며 OECD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지금도 높은 수준임을 지적
-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며, 부동산 세제 카드를 쓰려면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정당당한 자세라고 질타

부동산 감독기구의 문제점 지적과 국민들의 입장 대변

- 국민들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불만사항들을 직접 제시하며, 해외에도 없는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심 자극하는 정부에 부동산 정책 방향의 수정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응하는 심도있는 상임위 활동, 입법 등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주력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민생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부동산 실정 - ④ 중대재해처벌법

이재명 정권의 이념 편향 부동산 대책과 처벌 중심 건설안전 대책, 주택시장 붕괴와 건설업 위기 초래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이념에 치우친 현 정권 부동산 대책의 비현실성과 시장 왜곡 문제 비판

- 현 정권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직접 공급 정책이 L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채 증가 위험을 초래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 유인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시장 위축과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풍선효과, 실수요자 피해 등 부동산 시장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어, 입주 예정이던 물량 43만 401호가 증발하는 등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현재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책임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현장을 외면한 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건설 안전 대책 비판

-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 규제·처벌 일변도의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건설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
-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10대 건설사가 한 해에 진행한 점검·평가 건이 총 6만 523회에 달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비용이 1,445억원, 추가된 법정 전문인력 2만 176명의 인건비가 총 6,914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으며, 중소건설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정부 부동산 정책 지속 모니터링

- 정부의 이념 편향적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작용 지속 점검 및 제도개선 촉구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덜고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점검·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 실정 - ⑤ 내국인 역차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실수요 서민 피해 파악 및 내국인 역차별 문제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실수요 서민 옥죄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의 민낯 확인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이상경 前 차관 등 이재명 정권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포착
- 대출 규제 이후 서민의 월세화, 현금 부자들의 증여·현금 거래 급증 현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재’ 등 구멍 뚫린 외국인 토허제 사각지대 발굴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긴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당론 추진 필요
- 현재 미공개 상태인 이재명 정권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에 대한 면밀 검토 및 투기 행태 적발 필요
- 외국인 토허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 상호주의 관련 제도 강화 필요

**부동산 실정 - ⑥ 외국인 부동산 통계 생산·관리 혼선
외국인 부동산 통계 체계적 관리
통계 생산체계 개선 및 관리 일원화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 외국인 보유 급증 대응, 주택·토지 분리 통계 통합·고도화

-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최근 2년간 약 20% 증가했고, 수도권 집중 비중은 약 72%로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주택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토지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생산하여 국적 분류 및 작성방식이 상이함
- 이로 인해 정책 수립, 모니터링, 시장 실태 분석 시 통계 불일치로 인한 혼선과 분석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주택·토지 분리 통계 해소: 외국인 보유 통계 일원화 법제화

-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 생산 및 공표 주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국적 분류·자료 연계방식 통일 및 지역·유형·거주형태 등 교차통계 항목 확대
- 국가승인통계 개선계획(KPI) 반영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으로 항목 세분화·품질관리 상시체계화

**부동산 실정 - ⑦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먹튀 및 투기성 토지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정책 대안 및 근절 대책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급증

- '21년 3건(5억원)→ '24년 53건(140억원), 최근 5년간('21~'25.8) 103건, 243억원

• 대위변제 급증 대비 회수율 저조, HUG의 안일한 대응 지적

- 대위변제 회수액 55억(26%) 불과, 43명(미회수 156억) 중 22명은 연락두절
- HUG 「채권관리 규정」 있으나 외국인 채무자 재산조사 부실 등 소극 대응

• 외국인 토지보유현황과 연계한 전략적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 환기

- ①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4년 새 20% 증가, 중국인이 최다 필지 보유 보도(10.9)
- ②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및 연락두절 보도(10.1, 10.23)
- 단계적 연속 보도를 통해 중국인 등 외국인 임대인 집중관리 필요성 여론환기
- ※ KBS,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다수 언론매체 보도

• HUG,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대위변제가 1건이라도 발생 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 준하여 채권관리
- 임차인이 HUG에 보증신청 후 전세금 잔금 납부 전 해당 주택이 보증가입이 가능한(임대인 채무 등)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청도 열차사고 - ① 보여주기식 행정 청도역 사고 후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해소 및 국민피해 최소화

주요 내용 및 성과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열차지연 및 국민피해 극심

- 과거 작업중지 명령과는 달리 이번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장소를 넘어서 코레일 대구본부 관리 노선인 300km가 넘는 전체 노선에 대해 작업을 중지한 유례없는 행정 조치, 선로와 관련된 작업 일체를 모두 중지시킨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 이로 인해, 사고 전후 한 달 기준 전체 노선 고속열차 정시율은 12.4%p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상도권을 중심으로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이 15.5%p 가량 급감하였고, 코레일 역시 30억 이상의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물게 됨. 국민 전체적으로는 50만 시간 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음
- 코레일은 코레일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것과 더불어 영향력이 강해진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선불리 해제 신청을 못하였음

언론 활동 및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해결

- 국정감사 기간 관련 인터뷰·뉴스·기사 다수 보도(50건 이상) 및 공론화
-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10.13) 장관을 상대로 문제 제기 및 APEC 정상회의 전 종합감사 때까지 해제 여부 보고하도록 주문, 이에 코레일은 작업중지 일부해제 신청(10.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부해제 승인(10.16)
- 일부 해제에 대한 입장문 발표(10.16, 페이스북, 국민피해 최소화 및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면해제 필요성 제기)
- 국토부 종합감사(10.29)에서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 코레일은 작업중지 해제 신청(10.29)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제 승인 완료(10.31)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이재명 정권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건설사고, 철도사고 등 주요 사고 발생 시 이재명 정권의 대처방식 지적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기준 정립,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 방안 마련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주택도시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가입·대위변제 외에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 의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전세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채무자의 출국 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시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중과세율(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 적용, 20%) 적용,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 근절

청도 열차사고 - ② 경보장치 성능·관리 부실 청도 열차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분석 및 열차접근경보장치 성능 개선 등 철도 현장 안전 강화 계기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열차접근경보장치 성능·관리 부실 행태 확인 및 질타

- 국토부, 2019년부터 열차접근경보장치의 보급을 확대 추진했지만 형식적 관리, 성능 미흡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온 점 밝혀내
- 현장 작업자들에게 열차의 접근을 사전에 경고하는 핵심 안전장치임에도 음소거 기능과 조명 OFF 기능 존재, 열차 표시 혼선 등 다수의 설계·운용상 문제점을 직접 시연 및 지적
- 작업계획서 상 기재된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 관리 실태의 허술함 질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실질적인 철도 안전 대책 마련 및 사고 재발 방지책 강구

- 국토부·한국철도공사 열차접근경보장치 성능 개선 의지 확인
 - 음소거, 조명 OFF 기능 보완, 열차접근 화면 개선 등
- 작업 투입 인원들의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및 작업계획서의 철저한 작성 및 이행 등 행정적 관리 체계 강화
- 기관사의 전방 주의 의무 강화 및 철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법적 근거 부재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제한 제재 실효성 강화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부정당업자 제재 공백 해소: 공공기관까지 '전 기관 적용' 명문화

- 현재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시 타 중앙관서까지 효력이 확장되나, 공공기관은 이를 명시한 근거가 없어 제재 효력 공백 발생
- 이로 인해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가 LH 등 공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공정경쟁 질서 약화 및 부패·담합 방지 취지가 훼손됨
- 과거 정권에서도 공운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폐기된 사례가 있어 입법적 정비 필요성이 재확인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기관 간 확장·일원화' 법 개정 및 연계 고도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의 기관 간 확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개정 추진
-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계약규칙 간 제재 일원화 체계 정립
- 법률 개정 추진, 이후 전자조달 통보체계 및 부정당업자 DB 연계 강화를 통한 사후 관리 지속

**국토교통부의 경상환자(12~14급) 치료 '8주'로 제한
의학적 근거 없는 '8주 치료제한' 규정 철회 촉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문제점 지적

-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경상환자(12~14급)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치료 필요성은 의료전문가의 판단 영역인데, 보험사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비판
-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피해자 치료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제출한 9개 단체 중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 7곳이 “보험사 중심의 불공정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
- 이에,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향후 조치 및 지속 점검 방향

- 질의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함으로써 제도 추진의 방향 전환을 약속
- 국토부는 의료계·소비자단체·보험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 치료권 보장과 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법안 재입법 시에는 치료제한의 의학적 근거, 보험사 심사권한의 법적 정당성,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지속 점검할 필요 있음

**성평등
가족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업무추진 계획 미흡**
 - 부처 약칭을 '성평등부'로 정해, '가족' 기능의 중요성 반영 못함
 - '성평등' 개념이 젠더갈등 심화 및 사회적 논쟁 유발 가능성 높음
 - 고용부로부터 기능 이관된 사업 역시 형식적·제한적, 정책효과 기대 어려움
 - APEC 경주선언문에서 '성평등' 용어 누락 등, 양성평등 추진력 미흡
 - ※ 지난 5년간 APEC 선언문에서 '성평등' 항상 언급함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조사 절차가 동일기관 내에서 이뤄져 객관성·공정성 저하. 사건 통계의 불일치, 기관별 신고센터 중복 등 관리체계 혼선
- 전반적 국감 준비부실 및 장관의 준비되지 못한 답변, 질의 위원별 편향된 태도**
 -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피해자 식별 판단기준 및 경찰과의 협조체계 미비 지적 과정에서 장관의 업무 파악 부족 및 부정확한 보고로 인한 혼선 야기
 - 현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여성의 건강권 등 사회적 합의 필요성 촉구 과정에서, 장관은 모호하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 성범죄 피해 대응체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청소년 지원체계 점검**
 - AI시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공백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미비 지적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체계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 전무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및 제도 정착 준비 필요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필요
 - 학교밖청소년·은둔·고립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필요

성범죄 피해 대응체계 AI시대 청소년 보호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공백 및 피해자 보호대책 미비 지적**
 - 생성형 AI 확산으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급증에도, 탐지·삭제 기술·법제 미비
 -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발표에도 실질적 해소 방안 부재
 - 방미심위 공백 기간 불법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0건
 - 방미심위·성평등가족부 간 정보공유·삭제 협업체계 부재
 -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차단 실적 저조, 피해자 지원체계 미흡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체계 공백 우려**
 - 여당발 입법으로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 복잡화, 비용 증가, 법률지원 공백 등 가중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지적
 - 피해자 법률지원 예산 이미 8~9월 소진된 상황, 사전 검토·시뮬레이션 부재
 -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비율 높아, 폐지시 부실수사·무죄판결 증가 우려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성평등가족부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 이행 및 대책 재정비 필요**
 - 불법 촬영물 등 명백한 성착취물은 방심위 심의 없이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방미심위·성평등가족부·경찰청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이첩 절차 단축
 - AI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 보호 대응책 마련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유해정보 차단 강화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공공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 사업 관리체계 강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및 제도 정착 준비 필요

- 올해 4월, 우리당 주도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 아이돌봄 인력의 자격관리 강화·수급 여건 개선, 돌봄사 처우 개선 등
- 성가부 저출생 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및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
-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준비 필요
 -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이용자 대기 기간 단축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등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80건 발생, 개선 미흡 지적
- 자격정지·자격취소 건수만 관리해 복귀자 현황·재학대 여부 파악 불가
- 자격정지자 복귀시 단기교육 후 재배치 가능 등 검증 절차 부재로 제도상 허점 존재
- 복귀자 통계 및 재학대 모니터링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체계 전반의 부실 드러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아동학대 전력자 관리와 복귀 점검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학대 이력자 복귀 심사제 도입 및 재학대 모니터링 관련 제도 정비

• 돌봄 종사자 안전·인권 교육 강화 및 지속 점검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 학교밖청소년·은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청소년 지원사업 지속성 및 효율성 문제 제기

-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연계사업의 필요성 강조
-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단가가 복지부 유사사업보다 낮아 지원 격차 발생
- 부처 간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문제
- 청소년 지원사업이 외부 공모에 의존해 사업 지속성 위협

•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필요

- AI 기반 채팅앱 확산으로 청소년 고립감 심화, 사회적 단절 위험 증가
- 은둔·고립형 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체계 부재로 맞춤형 지원 한계
-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심리·사회적 개입 강화 필요
-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도 현행 대응체계 실효성 부족 지적

• 청소년 보호체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강화 필요
-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필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 절차 복잡하여 접근성 저하 지적

• 청소년 보호정책과 디지털성범죄 및 유해정보 대응체계 연계 강화 필요

-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정보 심의 관련, 방미심위 출범후 운영 난항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내 방미심위 파견 인력 운영 실효성 미흡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및 예산 확대 추진

- 학교밖청소년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건강검진 연계사업 및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확대 검토
-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심리상담·아웃리치 활동을 통합한 안전망 강화 추진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
위원회**

사무처의 부당한 운영 및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월권과 부정 규탄

국회운영위원회 유상범 의원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적법절차 준수' 권고를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한 시민단체 행태 지적**
 - 인권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적법절차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를 주문했을 뿐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 옹호로 왜곡하며 인권위 등급 하락과 특별심사를 요구한 일부 단체들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
- (국회사무처)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방침 철회 및 투명한 공개 검토 촉구**
 - 국가가 정부의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국회 특활비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강력히 지적
- (국회사무처)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 즉각 시정 요구**
 - 사무처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야당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군사·외교·대북기밀 외에는 직무상 비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국회사무처) 상임위 회의장 내 경위의 과도한 개입 중단 요구**
 - 최근 회의장에서 경위들이 의원들을 제지하거나 감싸는 등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에 대해 질서유지권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
- (국회미래연구원) 김기식 원장의 '취임 4일 만의 해외출장' 지적**
 - 과거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는 인물인 김기식 원장이 취임 4일 만에 미래연구원 일정도 아닌 CES 출장에 참석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의장 지시를 명분으로 한 출장은 공공기관 책임자답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
- (대통령비서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개입 의혹·국감 불출석 논란 등 지적**
 -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오전까지만 참석' 조건을 제시한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대통령실이 출석 준비 지시를 내렸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불출석한 점을 강하게 비판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지휘라인 조사 필요**
 -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급자 또는 비서실 차원의 지시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

국회 중립성 확보, 대북 정책 재정립, 국가안보 리스크 진단

국회운영위원회 강선영 의원

주요 내용

- 국회 운영 및 중립성 확보**
 - 국회사무처 직원의 정당 활동 무단 촬영 및 편향적 문제 지적 제지 및 국회의 엄격한 중립성 확보 요구
- 예산 및 행정 투명성 확보**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추경 예산 세부 집행내역 제출 거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자료 제출과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
 - 국회사무처의 관서운영경비 집행내역 제출 거부는 운영위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 대북 정책 및 북한 인권 문제**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 문제에 대한 조기 해소 촉구
 -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북한인권 전담 기능 약화 및 대북 유화 정책 기조로 회귀함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강경한 정책 요구
 - 대통령의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게시글에 대해 정치적 선동 행위 중단 촉구
- 국가안보 및 외교 리스크 진단**
 -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과 관련하여 핵연료, 경제성, 서해 작전 수행 등 주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 촉구
 -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및 교란 가능성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촉구
 -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위협 진단 및 국가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엄호 및 국회의 폐쇄적 운영 질타

국회운영위원회 광규택 의원

주요 내용

-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통령 엄호 엇박자 지적**
 -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배임죄 폐지 등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취소·면소하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종결되며,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됨
 - 그런데 여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퇴임 후 본인에게 제기된 사법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대통령실이 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고 한 점의 핵심을 지적
- **(국회)특활비·업추비 공개 필요성 및 의장의 개인 정치 목적 사용 의혹 제기**
 - 우원식 의장이 특활비 등을 직무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민주당 정당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 지적
 - 국회사무처가 주장하는 특활비 비공개 이유는 법원 판결(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게 맞는 국회 예산 집행 당부
- **(국가인권위)민중기 특검으로 인한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정치수사에 극단적 선택에 이른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직권조사 촉구
 - 법제사법위원회도, 대통령실과 국회운영위원회도 지적할 수 없는 특검의 무소불위한 지위에 대한 문제 비판
- **(대통령경호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유출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책 보좌관의 경호 차장급 인사에 대한 위험성 지적**

우리 국민 재산을 박탈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법성 지적

국회운영위원회 김은혜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고발**
 - 9월 부동산 통계 누락으로 수도권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된 사실 검증
 - ‘대책 발표 시기에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증 확인
 - 8월 부동산 통계 근거한 규제지역 또한 2개 지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재명 정부 10·15 대책의 무능, 무도, 무익함을 증명
- **과방위원장의 직장 내 갑질, 사적 노무 등 부당 행위 관련 국회사무처 근절 노력 촉구**
 - 과방위원장 무리한 상임위 운영 등으로 인해 쓰러진 사무처 직원들 관련 국회사무처의 소극적 태도 지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 촉구
 -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전달, 축의금 관리 등 부당한 사적 노무 요구 가능성에 대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 제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문제점 집중 점검

국회운영위원회 박수민 의원

주요 내용

• 관세협상,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때 아냐

- 한국, 일본, EU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압박하는 핵심 대상국임. 대미 주력 수출 품목도 겹침. 한국으로선 이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는지 여부가 대미 협상 성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됨
- 전문가들은 우리가 EU 협상 모델을 고수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해왔음. 기업 중심 투자 방식의 EU모델을 따르지 못한 아쉬운 협상임
- 8월 회담을 마치고, 한국은 투자액 3,500억달러 가운데 현금 투자가 5% 미만(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unfront)라고 주장했음
- 투자협상 관련, 현금은 5% 정도일 것이라는 언급과 달리 미국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모양새가 되버림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시 수갑 사용, 비례성 원칙 없는 공권력

- 인권위는 과거 경찰이 무리하게 수갑을 채운 사건들에서 모두 '도주나 저항이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음. 이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가?
- 인권위가 10년 넘게 수갑 사용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인권위 진상 규명 필요

- 인권위는 10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하고, 23일 직권조사 개시 통보
- 핵심은 '진술 강요'와 '회유'임. 수사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이번 사건이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있게 조사해주기 바람

김현지 부속실장 의혹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실·민주당의 행태 최민희 과방위원장 폭주에 쓰러져가는 과방위 직원들

국회운영위원회 박충권 의원

주요 내용

• '비서실세' 김현지 부속실장 의혹과 이를 덮기 급급한 대통령실·민주당

-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9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증인 채택 거부한 민주당
 - ①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정집행 ②김일성추종세력인 경기도부연합과 교류 이력 의혹 ③경기도청 공무원 자격으로 대선 비용 개입 논란 ④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의회 점거사건 연루 의혹 ⑤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이재명 시장 정적 공격 위해 허위사실 유포 의혹 ⑥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총용 의혹 ⑦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⑧설주환 변호사 질책하고 교체한 대북송금 재판 개입 의혹 ⑨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의혹

• '내로남불·전정부탕·정치보복' 선봉장이 된 대통령실

- 국정자원 화재 발생에도 JTBC 예능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의 내로남불 행태 지적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추석 연휴 앞두고 긴급체포한 '정치보복' 행태 지적
-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로 기자 사이버폭력 심각...도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목인
- 국가안보 위협하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 레이더 차폐 문제 대응 필요

• 북한 인권 내팽개친 민주당·최민희 위원장 폭주에 실신하는 과방위 직원들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국립북한인권센터 좌초...북한 인권 외면하는 민주당 행태 지적
- 과방위 사무처 직원들 국감 도중 3명 실신...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 우원식 국회의장 치적 쌓기에 눈 멀어 독립기억광장 공사 무리하게 진행 지적
- 의원회관 화장실에 너클, 손도끼 발견...허술해진 국회 보안 강화 필요
- 1년마다 실직위기 국회 수어 통역사, 직접고용 등 개선 필요

‘애지중지현지 꼭꼭숨어라 쇼’, 화재 관련 9.27 대통령 대면보고 부재 등 무책임과 불통으로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낱알이 드러낸 이재명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서지영 의원

주요 내용

• ‘반중 시위’, ‘반미 시위 관련’ 특정 국가·인종 대상 시위, 차별적 대응 비판

- 경찰이 중국대사 얼굴 훼손 사건 관련 3명을 수사 중이며, 정부·여당은 반중 시위에 대해 ‘혐오·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
- 또, 인권위가 ‘중국인 사절’ 카페 진정을 조사하는 등 국가별로 인권이 다르게 보호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편향된 인권 보호 비판

• 국회사무처의 야당 정보보고 관련, 허위 답변(위증)에 강한 유감 표명

- 지난 9월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국회사무처가 ‘야당 의총 정보보고’를 이어오며 사실상 정치사찰을 해온 것에 대해 강력 유감 표명
- 사무처가 “정보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 비판하며, 국회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함

•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는 ‘내로남불’ 지적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휴대전화 변경은 문제 삼으면서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대통령실 김현지 1부속실장에 대한 진상 규명은 막아서는 정부여당의 이중 잣대 비판
-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 법 앞의 평등을 저버린 것

•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 출석 거부 논란, ‘숨바꼭질 쇼’로 전락한 국정감사

-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지시쇼’, 실장의 ‘대기쇼’, 여당의 ‘거부쇼’라는 ‘3단계 꼭꼭숨겨라 쇼’가 벌어졌음
- ‘배치기’ 사태를 초래하며, ‘대국민 사기쇼’까지 불사한 ‘별이 33개’ ‘전(과)자정부’인 이재명 정부여당의 국민 기만, 오만 방자함 강조

• 9월 27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면보고·지시 전무

-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기관 증인 전원이 9월 27일 ‘국자원 화재 사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 국가 주요 사건에 대한 기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위기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임을 지적

국민 기만하는 정부, 내로남불 일삼으며 개인 치적만 챙기는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송언석 의원

주요 내용

• 정부는 안되지만, 국회는 괜찮다? 국회의 특활비 내로남불 질타!

- 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회 예비금 65억 원 중 63%(40억8천만 원)를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없이 불법 집행한 사실을 지적함.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예비금 집행 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의로 집행한 후 1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규모만 보고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었음
- 또한, 국회사무처가 예비금 편성시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함.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단일비목이 예비금 배정신청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2020년~2024년까지 2023년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전 집행한 예비금 전체의 절반 이상이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함
- 이에 국회사무처에 정부의 특활비를 비판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불법 집행을 일삼고 있던 ‘내로남불식’ 행태를 지적하고, 특활비를 포함한 예비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국회의장 치적 쌓기를 위해 졸속 추진하는 세종의사당

-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가 2019년 1,166억 원에서 2024년 5조 6,42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1조 4,000억 원은 국회의장 소속 자문기구 의결만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이전 대상은 상임위와 국회기관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문기구가 국민주권공간·박물관·체육관 등 비필수 시설을 임의로 추가 반영함
- 이는 국회규칙 개정과 국회운영위원회 보고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국회의장 개인 치적을 위한 무리한 사업 확대이며, 초대형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지적함

• 韓美 관세협상 발표 엇갈려... 국민 기만한 협상 실패 질타

-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없고, 반도체는 대만과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美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부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됨
- 이에 질의를 통해 협상 결과에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반도체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초기 발표와 달라진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성급하고 부정확한 발표를 강하게 질타함

‘김홍주’의 정체를 밝히고, 민주당의 국민 탄압 행태를 지적하다.

국회운영위원회 주진우 의원

주요 내용

● 김현지가 김용 불법 대선자금 6억원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냄

- 김용은 박지민·서은주에게 “김홍주와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 김현지는 박지민·서은주와 경기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음
- 위증교사 재판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서은주는 직책도 없이 국정기획위원으로 근무하였고, 박지민은 민주당 5급 비서관에 등록됨을 확인함
-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김홍주’는 김현지 부속실장밖에 없음을 근거로 하여,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김홍주’가 김현지라는 점을 확인함

● 이찬진 땅 투기에 문제가 있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을 이끌어냄

- 이찬진이 재건축 지역에 알박기한 도로 지분을 알아내 비서실장에게 질의
- 이 도로가 이찬진 소유라는 것을 몰랐던 비서실장은 “문제 있다”고 답변
- 이재명 정부는 ‘국민은 부동산감독원으로 감독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고위직들은 땅투기·갭투기하는 모순점 지적

● 최민희가 ‘결혼식 취소분’을 확보해 자녀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냄

- 최민희는 결혼식 날짜도 몰랐으며, 양자역학 발언 등으로 국민 공분 샀음
- 그러나 예약은 의원 명의로 해야하므로, 몰랐다면 보좌진 갑질 자인한 것
- 국회사무처장은 취소분 날짜에 결혼한 것이라고 답변 → 새로운 갑질 정황
- 장소도 시기도 부적절함. 유관단체가 결혼식 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임
- 이러한 국회의원 특혜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주파출소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직권 조사를 촉구함

-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20만 건 가까운 제보를 받고 국민을 고소함
- 커뮤니티·법률상담 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글이 다수 발견됨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기관이 국민 고발. 인권위에 직권 조사 촉구

헌정질서 유린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꼬집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조지연 의원

주요 내용

● 헌정질서 훼손하고 사법정의 왜곡하는 정권 규탄

- 재판중지법·법왜곡죄 등 사법리스크 방탄 입법 중단 촉구

●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정책 혼선 우려

- 원전산업 육성과 수출 전담 부처의 이원화로 정책 혼선 불가피
- 원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없이 ‘AI 3대 강국’ 실현 불가능

●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

-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16대 인권과제에서 ‘북한 인권 개선’ 누락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 추진 필요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 국회사무처의 ‘정당 사찰’ 규탄

- 국회사무처의 ‘정당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재발 방지 촉구

● 순국선열·호국영령 위한 기념광장 조성 필요

- 제70회 현충일 계기 기념광장 조성 검토 필요성

●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 보좌직원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 3급 보좌직원 신설 검토 필요
-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법제사법
위원회**

이재명 정부의 헌정질서·법치주의·삼권분립 파괴행위 지적·규탄

법제사법위원회 광규택 의원

주요 내용

- **(법무부·경찰) 검찰해체에도 민생수사 방어선인 '보완수사권' 지켜야 할 것**
 -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사건들의 증가, 검찰 해체 이후 발생할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한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강조
- **(대법원)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 행위 지적, 재판소원제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 지적**
 - 가짜뉴스에 휘둘린 민주당의 독단적인 사법권 침탈 행위 규탄
 -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와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헌법재판소) 사실상 4심제인 재판 소원에 대한 현실성 부족 문제 질타**
 - 사건 폭증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기본권 심각히 훼손
- **(법제처) 4년 연임제로의 개헌 시에도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적용 확인**
 - 4년 연임제 개헌의 현 대통령 적용여부에 대해 '국민 결단문제'라는 법제처장의 헌법 인식 문제 지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무능한 실적과 방만한 예산운영실적 지적, 폐지 타당 주장**
 - 예산 252억인데 수사성과 6건, 기소 0% 성과부진에 따른 존폐여부 지적
 - 3,000만원 예산 유용으로 최고급 안마의자 4대를 렌탈하여 사용
-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과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지적**
- **(군사법원) 특검의 SOFA 규정 위반한 오송 군사지역 압수수색 문제 제적**

이재명 정부의 국가해체 프로젝트(내란몰이·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인설법/의혹부풀리기/판검사공격), 전체주의 장악 시도 비판·규탄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

주요 내용

- **추미애 쇼츠공장,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된 편파적 법사위 국정감사**
 - 야당 간사 고의 미임명으로 인한 유례없는 위법적 국정감사 강행 지적
 - 秋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타 위원 평균 3배 이상이나 야당 위원 퇴장 및 발언권 제한 남용. 야당 요구 (의사진행발언, 현장검증, 증인출석 등) 묵살
- **이재명 정부·민주당 삼권분립 해체 시도 규탄, 이재명 재판 속행 촉구**
 - 거짓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4심제, 법왜곡죄, 법관평가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배임죄 폐지, 국민참여 영장심사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형사사법시스템 파괴에 대한 법원/검찰 자료 입수 및 지적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 '7만쪽 기록, 이틀만에 재판' 허위 프레임화 지적, 기록 접수부터 선고까지 35일 경과한 것으로 확인
 - 이재명 5개 범죄 재판 중지 결정 근거 헌법 제84조 관련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함을 밝히고, 재판 즉각 재개 요구
 - 이재명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 '대통령 무죄 선언' 관련 정권 방어용 유권해석 생산 지적. "법왜곡처·법왜곡처장"
- **역사상 최대 예산·인원 민주당 하명 정치특검, 이재명 정권 앞잡이 검찰청, 성역화 지적**
 - 민중기 특검 관련 부당주식거래 의혹 집중 추궁 및 양평군 공무원 심야 15시간 조사 및 '답정너' 진술 강요 등 강압수사 지적 및 현장검증 요구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편파 진행으로 무산
 - "고문치사에 준하는 인권침해, 제왕적 특검. 내란몰이로 인한 공무원 희생"
 - 조은석 특검, 평택 오산 미군기지 사전 협의 없는 압수수색, SOFA 위반 소지 및 한미동맹 외교안보 기반 훼손 지적 및 현장검증 요구
 - 대규모 검사 및 수사관 유출로 인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 공백 지적
 - 역대 최대 인원 및 국민 혈세 예산(약 400억원 이상) 소요되나, 정작 자료 미제출 및 회계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화된 특검 지적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우리 국민 위협하는 범죄는 단호한 엄벌주의 필요!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의 사법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대응

-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4심제 도입, 일방적인 대법원 기습 현장검증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한 부당성 지적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정부여당의 수사기관 사유화 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판·검사들이 정치권·광장 등에서의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과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의 노력 당부
- 3개 특검 출범에 따른 검사인력 파견으로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진행 촉구
- 민중기 특검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 강압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 수사·재판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각 기관 노력 당부
- 46개 범죄군 중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74.4%로 가장 낮음을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해 양형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 재판중지법 관련 우려 표명

-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함
-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리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국민 여론 또한 법제처장 의견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함

• 국민 안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적극 대응 촉구

- 철저한 마약 수사 위해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도입 촉구
- 불법취업·대포폰·대포차·불법송금 등 고도화되는 불법체류자 범죄에 기민한 대응 요구
- 2016년 이후 선고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 확정 판결에 대한 관심 환기

• 이재명 사건 뒤처리 전문가 '존엄현지' 김현지 부속실장 의혹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사임, 성남시의회 난동·허위문자사건과 친형 강제입원, 대선 자금, 김용·정진상 재판 등 개입 의혹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 "누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대통령 곁에서 모든 뒤처리 맡아온 영화 아수라의 한도경"
-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 및 증거인멸 관여 가능성 제기

• 무너져버린 국가 안전망, 국가 기관의 범죄 대응 촉구

- 대비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일주일만에 불법체류 2명 발생 발견) 및 불법체류 범죄, '범죄자만 송환'한 캄보디아 납치사건과 늘어나는 마약범죄 및 청소년 마약, 보이스피싱, 유괴·납치 등 강력 범죄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지적 및 대응 촉구

민주당 주도 유권무죄 사법개악 즉각 중단하라!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 사법부 장악 시도와 유권무죄·내편무죄 사법개악 실상 지적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 답변 도출
- 민주당 특별재판부 위헌성·법왜곡죄 위헌성 공론화(조선일보)
- 사실심 부실화 시급한데, 상고심 강화하겠다는 대법관 증원 허구성 지적(조선일보)

• 3대 특검을 특검하라

- 특검 특활비 내역 미공개 문제 지적 (한국경제)
- 특검 수사 중 발생한 양평공무원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행위 등 위법수사 지적

• 검찰해체로 인한 내부조직 와해 사태 및 민생범죄 피해 지적

- 검찰 줄 퇴사로 인력 공백 심각 사태
- 외국인범죄(문화일보), 공중협박죄(연합뉴스), 기술유출범죄(한국경제) 지적
- 검경수사권 조정 후 무죄 보상금 증가 등 검찰 폐지 후 민생 피해 지적(문화일보)
- 임은정 검사장 근태 기록 미공개 관련, 세관 마약수사 대통령 불법 지시 지적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성남FC·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편파성 폭로

- 법제처장 편파성 지적 및 공론화(5개혐의 무죄, 연임가능성, 재판소원 합헌 등)

• 4심제 도입은 이재명 방탄용 입법에 불과

- 현재 장기미제 사건 증가·재판지연문제 등 지적

• 제 기능 못하는 ‘0’수처

- 검찰 해체 논리와 모순되는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 전부 부여 지적
- 통계 도출도 못하는 90억 예산 공수처 전산시스템 지적(조선일보)
- 인력난으로 수사이첩만 3.3배 늘어난 공수처(문화일보)
-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율 현저히 낮은 공수처 무능지적 및 공론화(경향)

• 민주당 하청업체 노릇하는 감사원

- 정책감사 폐지하자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 감사 강요하는 정치 보복 행태 지적
- 전산망 재난 감사 요청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감사 검토” 감사원장 답변 도출

이재명 범죄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신동욱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재판 결과 불복, 선출권력 우위론에 입각한 사법내란 지적

- 이재명 범죄지우고 판결 뒤집기위한 민주당 행태 : 대법원 로그기록 요구, 재판중지법, 재판소원(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 대법원장 감금하고 대법정 휘젓고 다니며 기념사진 찍는 민주당 의원들, 나치 히틀러 점령군과 오버랩.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 국민 대다수(64%)의견, 2017년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헌법84조 ‘재판 진행해야 한다’ 의견

• 민주당의 졸속 검찰폐지로 인한 부작용 지적

- 이재명·문재인·조국 등 자신의 범죄 혐의 외면하고 재판 뒤집기 목적 검찰 악마화. 또한, 법무·사법 분야 주요 공직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 출신 임명
-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국민 안전 위협되는데 검찰 폐지로 수십년간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 등과 맺어온 약 50여건 협약 사장 우려
- 정부여당의 검찰 공세로 망상 수준 의혹제기자 백해룡에 찢찢매는 검찰 수장 노만석의 무능 지적

• 유령 TF를 동원해 전 정부 감사를 뒤집으려는 위법적 행태 지적

- 검찰관 패싱, 감사위원회 의결 생략 등 법률 절차를 위반한 ‘운영쇄신TF’의 위법성 지적
- ‘운영쇄신TF’의 서해공무원 피살, 국가통계 조작 등 전 정부 감사 뒤집기 시도 비판

•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행태 지적

-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조원철 처장의 ‘이 대통령 범죄 옹호’ 질타
- 민주당으로부터 청탁받은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관련 유권해석의 비정상적, 특혜성 해석 질타

“이재명 무죄만들기” 민주당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

주요 내용

• 사법부 위에 민주당, 삼권분립 무시한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정감사

-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원칙 정면 침해 문제점 제기
- 헌법기관장 지위의 대법원장 이석 불허·증언 강제 등 문제점 제기 지속

• 헌정사 최악의 ‘이재명 방탄(무죄 만들기)’ 국정감사

- 재판중지법 발의·배임죄 폐지·법원행정처 폐지 등 ‘與 사법개악안’ 비판
- 이재명 판결 관련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 압박 문제점 제기
-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검찰개혁 문제점 제기 지속

• 졸속 추진, 민주당표 검찰 해체의 문제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및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제기
- 조직사기·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 사건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검찰해체 부작용 신중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국민 신뢰 잃은 사법·수사·감사 기관 문제점 지적 및 질타

- 정책감사 폐지·운영혁신TF 등 현정부 감사 포기·전정부 표적감사 문제점 제기
- 공정성 잃은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 발언 문제 제기
-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관련 문제 제기
- 수사 실적 없이 다수 출장과 통신조회를 반복한 공수처 운영 실태 지적

이재명의 사법 저항을 지적하고,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다.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

주요 내용

•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시기의 변호인을 교체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냄

- 제보를 통해 김현지가 설주완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박상용 증인의 증언으로 이를 확인함
- 이재명의 공범 사건에서 이재명의 보좌관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시기의 변호인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이자 위증교사에 해당

•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함

- 선거법은 원래 1년 안에 끝내야 함. 1심만 2년 2개월을 끌며 재판 지연
- 이재명 측은 위험심판 제청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끌었음
- 그 공로로 이재명 변호인 다수가 의원, 대통령실 등으로 영전 혜택을 받음
- 이러한 편법적 재판 지연을 바로잡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정상적인 판결로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임을 지적함

• 민주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재판에 개입하는 문제를 지적함

-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 세비를 받으면서 피고인 이재명 변호에만 급급
- 이재명 피고는 안 나오고, 이재명 변호인들만 나와 이재명 재판 뒤집기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함

•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러 범죄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함

- 수사기관의 주 업무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생범죄를 살피는 데 있음
- 캄보디아·미성년자 납치유인·마약 사건 등 강력범죄 대응능력 약화됨
- 캄보디아 건은 대포통장·납치 유인 글 차단, 납치유인 건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함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경제 망치는 반시장·반기업 폭주,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결국 역풍·왜곡 초래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주요 내용

- 사회주의·시장원리 부정 논란 확산,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
 - 대규모 빚 탕감, 신용사면 등 금융 포퓰리즘 남발 경고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등 금융위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대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지적
 - 수수료 상한제, 가격 조정 명령, 가맹점주 종합 대책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역행하는 공정위 정책 질타
- 정부 출범 4개월간 대책만 3번, 규제 중독에 빠진 망국적 부동산 정책**
 - 정책 입안자 본인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놓고, 이제 와서 청년과 중산층·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내로남불' 행태 질책
 - 공급 없이 수요만 욕되는 초강력 대출 억제로 정작 실수요자만 피해 보는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재검토 요청
 - 부처 간 엇박자와 오락가락 땀질 처방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아마추어식 행정 지적, 무너진 정책 신뢰 회복 필요성 강조
- 반기업·반고용 정책 폭주하며 '일자리 창출' 외치는 정부·여당의 모순**
 - 청년층·고령층 간 고용률 역전,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에도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친노조 과제만 우선시하며 고용 정책은 외면
 - 재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은 강행하고, 기업 핑계 삼아 대통령 면소를 위한 '배임죄 폐지' 추진
 - 규제혁신·노동개혁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 및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요구
- 고쳐지지 않는 내로남불·가짜뉴스 고질병**
 -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촉구
 - '후쿠시마 괴담'에 쓰인 혈세만 2.3조원, 방류 2년간 10만 번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에 근접한 결과는 전무했음을 확인

범죄자 돈은 지키고, 국민의 집은 막았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

주요 내용

- 캄보디아 불법 사기 센터 운영 범죄조직 프린스 그룹 거래 국내 금융사 5곳! 현재 4개 은행 약 912억 예금 중!**
 -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제재받는 상황에서도 국내 5개 금융사가 총 52건, 약 912억 원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 금융사의 위험 거래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
 - 프린스 그룹 관련 자금의 동결·압류 및 FIU의 즉각적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
 -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 그룹과 국내 금융사 거래 약 2,147억! 이자 지급 14.5억에 달해! 후이원과 거래 국내 은행 有!
- 6년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2.6조원! 고객 돈으로 투자 등 이자 수입 400억원인데 금융당국 감독 안 받아!**
-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용제한에 부동산 쏠림 막겠다 주장은 누구? 금감원장! 정작 본인은 강남 고가 아파트 2채 보유, 내로남불!**
-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공정위는 26년째 방관만? 불확실한 경제 속, 순환출자 해소 작업 마무리 해야!**
 - 현대차그룹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26년째 유지하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 현대제철 등 계열사의 경영 악화가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그룹 전체·협력 생태계·국민경제로 위험이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
 - 공정위가 단순 공시·자발적 유도에 그치지 말고, 순환출자 해소 인센티브 및 미해소 불이익 등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거래소는 주식 2주 보유에 대주주는 조세회피처 소재 기업! 국내 투자자 보호 빨간불!**
 - 빗썸이 해외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처 연계·AML 부실·영세기업 이용 등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내 투자자 개인정보 해외 이전 및 자금세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
 - FIU가 실태조사 후 위법 사항 확인 시 즉시 서비스 중단 및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요구

금융·첨단산업 발전에 동력을, 불법·부당 행위에 철퇴를!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

주요 내용

•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위한 산업GP 허용 등 금산분리 합리화 필요

- 하이닉스 반도체 팹(FAB) 1기 짓는데 30조원 필요, 지난해 일반지주사 CVC 프로젝트 당 평균 투자액 20억원 불과
- 벤처 투자 한정된 CVC 금산분리 완화로는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AI, 반도체 투자 자금 조달 불가능
- 전략산업 투자법인, 산업GP 등 산업·금융 협력형 첨단산업 투자모델 허용 절실

• 진화 멈춘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갈라파고스의 경고

- 국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금 최근 4년간 99.9% 감소
- 자금세탁 방지도 중요하지만 외국 자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등 가상자산 시장 진흥 이끌 정책 마련 절실
- 아울러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든만삭스처럼 국내도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법인 참여를 허용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필요

• ‘붕이 김선달’ 기업사냥꾼 사모펀드 MBK 질타

- 단기수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우리 국가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연금·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악성 사모펀드 수탈 행위 지적
- 특히,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중국 등 외국자본이 펀드레이징 된 MBK에 인수될 경우 해외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 우려
-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가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근절하고, 과도한 차입 매수 및 수탈 행위 규제하는 ‘MBK 방지법’ 발의 예정

• 보험사기·은행 금융사고·제2금융권 해킹 등 국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 돌파,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주문
- 대규모 친인척 부당대출, 쏠은행권 가족DB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요청
- 연이은 제2금융권 해킹,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위한 금융당국 관리·감독 요구

국민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국감!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

주요 내용

•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행정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 KT 무단 소액결제·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무책임 대응을 질타하고 통신망 보안 강화 촉구 (개보위)
- ‘월드코인’ 과징금 후 불법 생체정보 모집 확산 지적, 데이터 삭제·수집 중단 등 강제조치 요구 (개보위)
- 트립닷컴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험 제기, 철저한 조사 및 이용자 보호대책 필요 (개보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응 실패 경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조실)
-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사 배제·준비 부실 지적, 전문성·형평성 갖춘 운영체계 마련 요구 (국조실)

• 국민 피해 예방과 금융·소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면역증강제 남용·허위 청구로 보험재정 위협, 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근절 촉구 (금감원)
- 검사 사칭형 보이스피싱 확산, 피해자 구제 기준 및 감독지침 마련 요청 (금감원)
- 서민 빚 탕감 재단의 부실성과 새도약기금 인사 논란 제기 (금융위)
- 민생소비쿠폰 사업 구조적 한계와 예산 낭비 지적 (금융위)
- 6·27 대책으로 청년·서민 정책대출 급감, 주거 기회 위축 우려 (금융위)
- 바이낸스 고박스 인수 승인 특혜 의혹 제기, 철저한 검증 요구 (금융위)
- 소비자분쟁조정 처리 지연(평균 122.8일) 등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소비자위)

• 도덕성과 예산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성비위·음주운전 직원에 성과급 지급, 징계·평가 연동 제도 개선 요구 (신보)
- 장기연체자지원재단이 성과 없이 1,061억 인건비 소모, 해산 및 재원 재활용 제안 (캠코)
- 보훈부 산하기관 의무고용 미이행, 자율점검·감독 강화 촉구 (보훈부)
-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외국인 반복 수주·성과 부재 지적 (보훈부)
- ‘국가보훈돌’ 등 홍보사업의 부적절성과 보훈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 요구 (보훈부)

오직 국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

주요 내용

• ‘부동산 철책’으로 다가온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을 꾸짖었습니다.

-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전세의 월세 가속화에 대한 우려 제기
- 뚝뚝한 한 채를 강요하는 다주택 규제로 지방 부동산 침체 경고
- 과도한 대출규제로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 차단 지적
- 주거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마련 촉구

• 우격다짐식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검찰해체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1% 특수부 수사 폐지를 위한 99% 일반형사 수사 무력화 비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시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피해자 구제 불가 지적
- 경찰의 수사종결 남용 방지하기 위한 전건송치 부활과 보완수사를 통한 안전장치 필요성 강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 시스템 마비 12시간만의 중대본 설치, 오락가락한 정부발표 등 총체적 부실대응
- 대통령의 묘연한 행적, 총리의 소극적 조치 등 국가재난의 안일한 대응 비판
-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 제외, EMP 방호능력 부재 등 국가중요시설 관리미흡 지적
- 액티브-액티브 완전 이중화 구축, 재난 대응 메뉴얼 재확립, 국가 주요시설 전수조사 및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

•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에 대한 차별적인 국가유공자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 기준 ‘직업적·사회적 제약’을 요건심사 단계에 부적절한 적용 비판
- 고려되지 못한 지연성 PTSD, 심사과정에서의 2차가해, 타 사건과 차별적용 지적
- 보훈부 차관의 제1연평해전 및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 질타
-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보훈심사 촉구

이외 ▲MBK 약탈적 사모펀드 규탄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문제점 ▲예금보험공사 검사권한 확대 필요성 ▲웅동학원 채권 회수지연 지적 ▲빅테크 끼워팔기 조사 촉구 ▲안장수요에 부합하는 국립묘지 사업 관리 필요성 등

민생·공정·책임, 현장 기반 정책 실행과 제도 신뢰 회복 촉구!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

주요 내용

• 시장·금융 공정성 강화 및 민생 보호

- 민중기 특검 추가차익 의혹... 공소시효 관련 당시 조사자료 공개 요구
- 금감원장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정책 실패 질타... 공직자 다주택 소유 비판
- 캄보디아-한국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급증... 불법 자금 차단 대책 제안
-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 재연체... 성실상환자 역차별 보완 필요
- 불안심리로 인한 마이너스 통장 급증... 상반기 1조원 증가 대책 촉구
- 보험금 청구 감감무소식... 상반기 약1조원 보험지급 지연 대안 모색
- 해마다 늘어나는 휴면금융자산 18兆원, 즉각 반환노력 촉구
- 은행 정보보안 예산 격차 14배... 지역금융소비자 위험 방지 대책 제안
- 홈쇼핑 정액수수료 비중 과다... 납품업체 리스크 완화 구조 개편 촉구
- 대기업 간판값 2년째 2조 넘어... 사익편취 도구 방지 우려 개선 제안
- 공정위 지난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1300억원 넘어 개선 촉구
- 공정위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포상금 0원..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 제안
- 해외이주 채무자 자산 회수 0.8%... 채권 회수 절차 개선 필요
- 캄코 무단 점용 국유지 광범위... 변상금 수납 강화 요구
- 수도권 비해 열악한 지역은행 특별출연 협약 보증 지원 확대 필요

•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제도 신뢰 회복

- 인구감소 대응, 부처별 분절 심화... 국무조정실 내 전담조직 필요
- 군소음보상 기준 불합리... 지역별 차등 보완 요구
- 강원 보훈병원·요양병원 부재...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 부모 사망 실종에도 신고없이 46년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 개선 요구
- 연평해전 참전수병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보훈부 차관 인식 질타
- 중범죄자의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가능... 심사 기준 강화 요구
- 부패예방추진단, 10년째 한시조직 유지... 존속타당성 점검 필요
- 청년DB, 지방 청년 참여 배제... 운영 체계 재정립 필요
- 국책연구기관 외부활동·사례금 편차 심화... 윤리·보상 기준 통일 필요
- 권익위 행정심판, 조세심판원 법정기한 초과 다수... 처리 역량 보완 필요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체... 문화유산 보존 대책 요구

무능 · 무책임 · 무감각, 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이재명 정부!!

정무위원회 이현승 의원

주요 내용

• 서민 외식물가 인상에 손놓고 있는 이재명 정부!

- 7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최근 동일 가격 유지하되, 중량 감축 및 값싼 원료로 대체
- 분석 결과, 홈페이지 및 배달앱 등에 명확한 고지 없었으며, 값싼 원료로 변경시 점포 기준 영업이익률이 기존 대비 최대 56% 이상 개선
-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영업행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 미비 사유로 미조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감독 촉구
- 본 건 지적 이후 대통령실, “슈링크플레이션 막을 방안 강구” 지시, 해당 업체 종전대로 판매하기로 결정
- 추후 슈링크플레이션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은행업 도덕적 해이 심각, 사고 발생시 임원 성과급 환수 제도 도입 필요

- 2025년 1월~8월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건수 전년대비 20% 증가, 금융사고 액수 전년대비 45% 증가에도 임원 성과급은 대폭 증가
- 사고가 생기면 임원 성과급 환수하는 방안 도입해, 은행업 도덕적 해이 통제 필요

• 의료대란 종료 선언에도 보훈의료체계 '심각'

- 전국 보훈병원 핵심 진료과 전문의 부재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80개월 장기 휴진, 채용공고 10회 이상에도 지원 전무
- 전공의 총원율 서울 94% vs 지방(부산·광주·대구·대전) 23%, 지방 전공의 붕괴 수준
- 추후 전문의·전공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필요

100일 만에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난맥상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주요 내용

• 관치를 넘어선 통치, 정치 금융, 끝없는 엇박자 정책

- 이재명 정부의 졸속 부동산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지방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 비판
- 관치 금융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정치·통치 금융 행태 비판
-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당정간 엇박자 비판
- 새도약기금(빛 탕감) 심사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지연 지적
-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의 부실 위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신용보증기금 중징계 직원에게 성과급, 정직 직원에게 급여 지급 지적

• 시장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을 '사금고'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할부거래법상 통제장치가 없는 문제 지적,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조사단계 협조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주고도 과징금 처분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문제 지적, 규정 정비 촉구
-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장치 부족 문제 지적

• 국내외, 사이버 세상 곳곳에서 위협 받는 국민 안전

-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과거 사례에 비해 총리실의 역할이 부족한점 지적
- 개인정보위원회 의결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제 지적, 미 FCC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솔루션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다크웹, SNS 등 블랙마켓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위원회의 차단 조치가 미흡한 문제 지적, 대책 마련 촉구
-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이 주적이라도 답변 못한 보훈부 장관의 '올림픽 메달도 보훈 대상'과 같은 안일한 인식 비판
-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반복되는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에도 금융감독원의 대응 부족 문제 지적

• 대구경북의 숙원 군 공항 이전, 국방은 국가 사무!

-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조정실에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를 국무조정실에 촉구



기획재정
위원회

국가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의원

주요 내용

• 포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한 'K-스틸법' 조속 제정 필요

- 포항 철강산업 심각한 위기 속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했지만, 대책 마련 부재
- 자금지원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포항시 현장의 요구 반영한 'K-스틸법' 신속 제정 촉구

• 농업인 대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 연장 촉구

- 정부안의 소득기준 도입 시 농협 예탁금 약 2조 7,498억 원 이탈 예상
- 농업인 지원사업 위축 및 시중은행 ISA에는 소득 기준 없어 과세 형평성 저해, 현행 수준의 연장 필요

• 고액상습채납자 징수 실패 및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세입 누수 지적

- 최근 5년간 징수 실패·부실 과세로 약 33조 원 세입 누수, 징수역량 부재 지적
- 체납세금 32조 원 소멸·환급가산금 1조 원 발생, 국민 세부담 악순환 초래
- 세입 기반 안정화를 위한 국세청 세정개혁을 강력 촉구

• Post-APEC 성공 위해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지원 강화 필요

- '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종합대책 시행했지만, 경주 APEC에는 기념주화만 발행
- 광역단체에 경제·금융정책 자문을 위한 직원 파견 가능, 최근 10년간 경북도청에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음을 지적
- 지역경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 우회수출 급증 속 무역통계 관리 부실 시정 요구

-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고율 관세 이후, 한국 경유한 미국행 우회수출 급증
- 관세청의 관련 통계 부실관리로 우회수출 규모와 경로 파악 부정확
- 국가별 위험도 평가와 산업별 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통계관리체계' 전면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산업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대미 관세협상 자화자찬? 한국 총 부담은 \$6000억 수준

- 이재명 대통령의 늦장 대응으로 쫓기듯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의 민낯
- 최초 정부 제시액(1500억 달러) 및 이재명 대통령의 방관적 태도 지적
- 자동차, 철강 등 수출 기업이 받은 피해 등 국민 부담만 가중
-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계획에 대한 기업 위축 및 세수 저하 우려 지적

• (기획재정부)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등 서민 올리는 부동산 정책

- 이한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의 갭투자·다주택 등 내로남불 실패
- 연이은 '폭망' 부동산 대책, 아파트 매매 폭등, 최악의 전·월세난 지적

•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평가편람 수정 통한 '꼼수' 기관장 물갈이 시도

- 공공기관 평가편람 내 기관장 평가 신설 통한 편법 기관장 교체 시도 고발
- 기관 재정건전성과 성과 대신 정부 코드와 노조 중심 꼼수 평가 시스템

• (국세청)5대 거래소 조사결과 가상자산 해외유출 124조원, 과세 시스템 구멍

- 올해(1~9월)가상자산 해외 유출 124조원, 거래규모 2년간 3배 폭증
- 가상자산 이용 불법 범죄 이용 자금 돈세탁, 탈세 등 사각지대화
- 국세청 대응 인력 및 방안(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역부족 실패

• (관세청)중국인 가상자산이용 불법 환치기 3.7조원, 서울 부동산 취득까지

- 외국인전용 무인환전기 관리 및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관리 부실 실패
-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범죄 9.6조원 규모, 89%가 중국인 소행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재단 청산 후 신규 채용 등 혈세 낭비 실패

- 남북관계 단절이후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1.2조원(~23년)편성, 집행률은 3%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17억원 예산 집행(25년까지 예산편성)
- 개성공단재단 24년 청산 이후 신규직원 채용, 법카 남용 등 혈세 낭비 실패

• (한국은행) 부족한 외환보유고 현황 지적 및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 대만, 일본 대비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실패 및 보강 제언
- 우리나라 국가채무 실패 지적 및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필요성 인정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의 잠재적 위험 선제 점검, 국가채무 관리와 국민 부담 완화 방안 제시!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 의원

주요 내용

•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펀드의 경제적 리스크

- 대미 투자 펀드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우리 외환보유고의 80%를 초과하는 수준임. 기업 투자 규모(약 6,0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국내외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며, 조달 비용 증가, 환율·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대규모 대외 투자에 따른 재정정책·통화정책 여력 축소 및 유효성 약화, 산업공동화 우려를 경고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
- 지난 7월 말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 입장 변화가 한국은행과 적시에 공유되지 않아 통화정책 결정이 왜곡된 점 지적,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강조

• 확장 재정 정책의 위험성

- 정부는 확장 재정 기반의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으나, 명확한 성과목표는커녕 국정과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조차 없는 무책임한 정책 운용 질타
- 특히, 한은 총재를 통해 국가채무 임계수준이 GDP의 80~90%이며,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기준 제시

•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 그간 쌓여온 저출산·고령화, 양질 일자리 부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새 정부 역시 단기 부양책에만 의존하며 구조개혁을 미루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태임을 지적하며, 노동·산업·에너지·인구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 비효율적 국가 행정 시스템 개선 시급

-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관리단 계획이 졸속 추진되어 실효성이 의심되며, 체납자의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재검토 촉구
-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가 처리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답변 기한 예측 제고, 질의 유형별 표준화 등 납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촉구
- 관세협상에 따라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새롭게 분류, 적응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의 역량 강화 주문
- 예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조달행정에 안전의 원칙을 추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촉구

'전(全)부처 결혼패널티 전수조사 관철' '文통계조작 기록 통계시스템에 반영'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 바로세우기 성과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의원

주요 내용

• 미래세대·성실한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정책 '송곳 지적' 및 대책 요구

- '결혼하면 되레 미혼보다 불리' 전(全)부처 결혼패널티 전수 조사 요구 및 관철(11월~)
- 흡수저 자수성가 청년 동기부여 꺾는 천편일률적 소득·대출규제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적
- (지니계수)자산 격차 12년만 최악... 계층 사다리 끊은 LTV규제, 양극화 심화 지적
- '성실납부자 이자 올려 저신용자 지급', '체납세금 탕감', '빚 탕감'... 성실한 국민 의욕 꺾는 모럴헤저드
- 미래세대 부담할 국가부채 1400조 돌파... 최소한의 안전장치, '재정준칙' 도입 요구

• "전 정부 때는 육하더니"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지적

- 이재명 정권 끝어다 쓴 '한국은행 마통' 일시차입금 3분기 70.9조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 '깜깜이라며尹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니' 이재명 특활비 깜깜이 공개... 공개한 부분도 '지침 위반'
- "1400원 환율 국가경제위기"라더니 現 1440원...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더니, 세금 인상 만지작

• 대(對)중국 상호주의 원칙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 지적 및 개선 촉구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중국 국영기업' 진출 시도 우려...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지적
- 중국산 전기버스 한국 수출 6천여대, 반면 한국산 전기버스 중국 수출은 '0대' 비대칭
- 게임, KPOP, 문화컨텐츠... 중국은 무역장벽 등으로 차단하고 한국엔 중국기업 자유롭게 진출
- 연 3천억원대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 국적별 집계 안 한 관세청... 시스템 개선 요구

• '美 관세 직격탄' 경남 등 지역 산업 살리기 위한 핀셋 지원책 요구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 세수 18조원인 인천청은 23명, 43조원 부산청은 14명
- '진해신항 건설사업' 경남지역 기업 참여 확대 위한 기재부 고시 개정 요구
- 경남 미래먹거리 '12대 국가전략기술' 우주항공 기술의 조특법 상 세제 지원 필요
- '호우피해 7천억' 경남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단 '1건'... 경남 피해주민 세무홍보 강화 필요

• '민생 밀착형' 국민·기업 불편사항 지적 및 시스템 개선 등

- '된장은 면세, 청국장만 과세, 계장은 면세, 새우장은 과세? 미가공 식료품 면세 기준 '재정립 필요'
- 'hwp 파일'만 올려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확장자 다변화 필요성 지적 후 '개선 계획 수립'
- 文 가계소득 통계조작 '가중값 무단 변경'... 8년간 미반영됐으나 지적 후 '시스템 반영 완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경제 정책 비판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주요 내용

- 실패한 한·미 관세협상, 연간 200억 달러 어디서 어떻게 마련합니까?**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며 연 200억 달러 조달 부담 발생
 - 외환보유액 훼손 없이 조달 가능한 여력은 연 150~200억 달러 수준, 환율 대응 여력 축소 우려
 - 현금 2,000억 달러 투자 의사결정권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보유,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하며 손실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농산물 개방 등 한·미간 협상 결과 발표 불일치에 대해 합의 내용 공개와 국회 비준 동의 필요
- 세금으로 장난치는 아마추어 정부, 시장 신뢰만 무너집니다**
 - 이재명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46일 만에 번복, 세제 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
 - 배당 분리과세 요건 과도해 적용 기업 극히 제한 → 보여주기식 세제
 -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더 높아 지배주주 배당 유인 없음
 - 단기 세수 목적이 아닌, 실질적 주주환원·투자 활성화 세제 필요
- 부총리의 '1% 보유세' 발언, 시장 불안 자초**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매·전월세 불안 지속, 정책 신뢰 하락
 - 구윤철 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은 보유세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 심리 악화
 -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전가, 은퇴세대·1주택 중산층 부담 증가
 - 한국 보유세는 이미 GDP 대비 OECD 평균 이상, 추가 인상은 조세 저항·주거 불평등 심화

외교·재정·금융·부동산 전선의 붕괴

기획재정위원회 유상범 의원

주요 내용

- (기재부) 한·미 관세협상 부실과 반미 선동으로 인한 외교·경제 리스크 야기**
 -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역이 미국 측 설명과 상반되는 등 문안 검증이 부실했고, 민주당이 협상 교착 국면에서 반미 선동성 발언으로 외교 신뢰와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킨 점을 지적
 - 성과 부풀리기와 정파적 선동이 결합된 행태가 외환시장 불안·신용등급 하락 등 실물경제로의 파급되는 만큼, 감정 대응 자제 및 실리외교 복원 촉구
- (기재부) 교육세 인상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계 등 명분 없는 증세와 설계 부재가 부른 재정 만능주의 지적**
 -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 교육세율을 0.5%→1.0%로 인상하며 '교육재정 확충'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교육세는 이미 내국세 연동 구조로 자동 증가해, 세수 확보용 증세라는 점을 지적
 - 확보될 재원 3조 1,326억 원을 근거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성과지표·평가체계 없어 전면 재검토 촉구
- (한국은행)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힘입어 미 트럼프 정부도 지니어스법을 제정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 역행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나 원화코인 도입에는 여전히 신중해야 할 요소가 존재**
 - 전 세계적인 달러에 대한 압도적 수요에 비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미미하다는 점,
 - 사실상의 통화로 자리매김하므로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 현재의 외환규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비자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할 필요
- (국세청) '문재인 정부 시즌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력 비판**
 -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투기 탓으로만 돌리고,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식 규제로는 집값 안정도, 서민 보호도 어렵다고 비판
- (한국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 존속 필요성 재검토, 비특혜원산지 규정 대응 위한 사전컨설팅 및 교육 강화 필요**

국가 재정·경제 구조개선 및 민생안정 종합대책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국채이자 폭증 2029년 국채이자비용 49조원 육박**
 - 최근 5년간 국채 이자비용 18.6조원에서 28.2조원으로 증가
 - 국채이자비용이 고정지출화 되어 재정여력 및 국가 신인도 문제 우려
- 조세감면의 수도권 편중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조세제도 재설계 필요**
 - 조세감면액 49조 4천억 중 33조5천억(67.8%)이 수도권 감면 혜택
 - 조세지출 성과평과제 도입해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한 정기평가 필요
- 부산항, 화물 컨테이너 마약유통 통로, 화물 컨테이너 스캐너 확충 시급**
 - 2025년 5월 부산신항 코카인 600KG 적발, 국내 마약 적발 사상 최대규모
 - 다양·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최신화 필요
- 중부세 과세기준의 소급적용·무리한 적용으로 중부세 폭탄 예고**
 - 국세청의 업종코드 해석 변경으로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에 중부세 부과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백한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를 유지하고, 국세청은 신뢰보호와 조세법 원칙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필요
- 소득 역진적인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해 제도 개편 필요**
 - 총급여 한도가 있으나 세액공제 대상자 간 소득 역진성 발생
 - 자동신청·환급형구조로 전환 및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 높일 필요가 있음
-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장기재정위기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주요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 적자, 국가채무비율 악화로 재정위험 가시화
 -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의 구조개혁, 재정준칙 도입 등 근본적 재정개혁 필요

거짓말 대잔치 이재명 정부의 자기당착(自家撞着) 경제정책 대해부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의 빚잔치 지적, “재정폭주기관차 막아 달라!” 경제부총리에게 주문**
 - 인플레이션에 5배 더 취약한 재정우위로 향하는 이재명 정부에 옐로카드!
 - 소비쿠폰 효과, 단발성에 그치고 의식주 물가 끌어올릴 것 분석하여 지적
 - 민주당 말만 믿다간 폭동 난 프랑스 꼴 난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
- 국민들 간만 보며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정부 조세정책의 이중성 질타!**
 - 월급쟁이 지킨다더니 입꼭단 정부! 머뭇하는 근로소득세 개편 약속 받아!
 - 기업 살린다며 법인세 인상, 개미 돕는다며 거래세 인상하는 모순점 지적
 - 세금 안 늘린다며 보유세 만지작, 文정부 데칼코마니 부동산 정책 질타!
- 민주당의 ‘아님 말고식 거짓선동’, 이번에도 아니면 책임은 누가?**
 - 文정부때 시작된 민관협력전대차관에 대한 민주당 거짓선동에 적극 반박
 - “검토하겠다”만 반복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 국가가 주도하라 강력 주문!
 - 관세협상 지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알리고, 자화자찬을 자중할 것 당부
- 기재위 소관 기관들의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
 - 해외진출하라고 만든 조달청 G-PASS, 수출은 안하고 국내조달시장 특혜
 - 20%가 공정위 제재 받은 수는 히든챔피언, 불공정기업에 국책금융 지원?
 - 마약, 짝퉁, 위해물품 등 늘어나는 중국발 통관 리스크 대응 시급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난맥상, 국정 파탄의 메커니즘을 해부하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의원

주요 내용

• F학점!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정책(ABCDE 평가)

- 집권 5개월,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은 아마추어식(Amateur) 국정운영의 연속
 - 사탕발린 포퓰리즘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결과는 명백한 국정파탄
- 도박적 재정운영(Bankrupt)으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마구잡이식 정책들은 서로 충돌하며 심각한 혼선과 딜레마(Chaos)를 초래
-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을 가리기 위해 반미 여론을 부추기고(Dangerous), 실력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은 연쇄적인 정책 오류(Error)로 귀결

• 'Master Plan'이 없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

- 말만 앞선 미래 전략산업 육성
 - 근로시간 제약과 저조한 노동생산성,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인 전력 규모와 안정성 외면
- 무너져내리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자동차·철강·석유화학)
- '인재부국'에서 '인재빈국'이 된 대한민국, 우리 기업들의 악전고투(노란봉투법, 상법, 법인세 인상 등)
- 현재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인재·기업 정책은 유기적 연계 없이 제각각
 - 우리나라 핵심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Master Plan',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절실

• 혼란의 10·15 대책, 책임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보유세 강화, 집값은 못 잡고 불만 불인 실패한 정책 재탕
 - * 공시가격 10% 상승 시, 주택은 1~1.4%, 전세는 1~1.3% 동반 가격 상승(조세연구)
-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원에 달하는데, 서울 가구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고작 6억 5천만 원에 불과
 -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4억 원 대출 한도'로는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4억 5천만 원이 부족해, 사실상 내집 마련은 '그림의 떡'
-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경우와 적금만 들며 월세를 전전한 경우를 비교하면, 現 부동산 시세와 대출 금리 기준 최소 9억 7천만 원의 자산 격차 발생
 - 10·15 대책은 국민에 대한 경제적 약탈 행정



이재명 정부, 전교조 장관의 '교육의 정치화' 점검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

주요 내용

• 간판뿐인 국정과제 —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 부재

-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근거·효과 분석 없이 제시된 구호 중심 정책임을 지적하며, 국가 교육 전략의 부재를 문제 삼음
- 특히 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차별화할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대와 국립대 체제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강조함
- 서울대는 국가 예산을 타 대학의 10배 가까이 지원받고도 성적·경쟁력 지표가 하락하는 반면, 연세대 등 사립대는 오히려 성취도가 오른 상황을 제시해 국가 교육정책의 비효율성과 기초 체력 약화를 질의함

• 위법·불공정 구조의 방치 — 전교조 협약, 입시비리, 카르텔의 시스템화

- 다수 교육청이 법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위법성을 지적함
-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개별 성적 미취합, 교실 내 정치적 행동 방치 등 학력 확인·지도 기능 자체를 없애는 조항을 집중 추궁함
- 조민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소송 등 부산대 입학취소 논란, 예체능계 카르텔은 모두 "불공정 구조를 방치한 교육행정"이라는 축으로 묶여 있음을 질타함

• 교실의 정치화·이념화 —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파괴

-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실 근처 시위, 정치적 발언, 교사의 정치적 표현 방치 사례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전달한 대화 사례 등을 종합해 학교가 정치적 논쟁과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현실을 질타

교육투자·연구제도 전면 재설계 촉구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

주요 내용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족이기 정책될 것 우려

- 역량 있는 사립대학들을 배제한 채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구상은 또 다른 공정하지 못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 지적
- 이에 교육부 장관은 지방 사립대학교 소외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 OECD 평균의 70% 수준인 대한민국 고등교육 교육비 위기 지적

- 반려견 유치원 비용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현실 확인과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투자 달성 로드맵 주문
- 이에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을 확인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과 교육세 전입구조 개편 등을 향후 계획으로 밝힘

• 전기료를 연구비 집행 항목에 포함하는 유연한 기준 마련 촉구

- AI 연구 확대에 따라 전력 사용량과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연구비에서 충분히 집행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
-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연구 제반 비용의 직접비 집행 여건 마련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과기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교실 내 정치적 중립 관리 강화 필요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

주요 내용

- **교실 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 지적,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 요청**
 - 경기 성남시 고교생의 <교사의 수업중 정치편향 발언, SNS게재> 제보 공개
 - 교사들의 수업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 사례 지적 (부산, 서울 등)
 - 세종시 모 중학교 <북한체제 선전가요 받아적기> 교육활동지 사례 지적
- **“같은 성취라도 모두 다르게 기록” 과도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원의 업무부담 관련 제도개선 촉구**
 - 교육부, 향후 교육청 및 현장교사들 의견 수렴 후 기재요령 개정 진행 약속
- **한국형 표준 LMS 구축과 AI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촉구**
 - 초·중·고 LMS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부가 통합 LMS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도록 요구함
 - 주요국 대비 낮은 AI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필요**
 -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 요강,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에서 특목고 및 자사고를 배제하여 역차별 문제 발생
- **대학원생 ‘빚 의존 구조’ 해소 위한 학자금대출·장학제도 개선 촉구**
 - 최근 5년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 4,969억(21) → 7,011억(25.8월)으로 41.1% 급증, 대학원생 ‘빚 의존 학업 구조’ 심화 문제를 제기
 - 전체 대출의 90%가 일반상환, 졸업 직후 상환 부담이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ICL)’ 제도 및 이자 면제 등 제도 개선 촉구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교권침해 문제 등 지적**
 -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확대 강화

학교에서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강조, 의사과학자, 조선해운,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 방안 제시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

주요 내용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에 대한 비현실성 문제 제기**
 -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보이텔스바흐 정신 등 교실 내 정치적 중립 명분의 비현실성 지적, 정파적·선동적·극단적 정치문화의 교실 침투 가능성 제기
 - 교실 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사연수 등 안전장치 확보 필요성 공유
- **의사과학·공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계획 마련 요청**
 - 의사과학·공학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치 검토 필요성 제기
- **한미조선협력에 따른 국립해양대 등 조선해운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요구**
 - 교육부 차원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이주배경학생 언어교육 현장의 어려움 지적, 제도개선 요구**
 - 이주배경학생 일반학교 편입 전 한국어 선이수제도 의무화 필요성 강조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다문화언어 강사 활용 등 지원 인프라 강화, 다국어 사용환경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과정 자율화 요구 (경기교육청과 한국어 선이수 의무화 입법 협력 예정)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 과정에서 교육연구 역량 강화방안 마련 촉구**
 -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재정난 해결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
- **전남교육청 등 교육청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정책 지적**
 - 방만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패널티 기준과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요구
- **인천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특수교사 배치 법령 위반 지적**

영화 한편으로 중단된 원전 정책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 한권 보고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

주요 내용

- 대통령의 말에는 그 어떤 말도 못 하겠다는 대한민국 교육 투톱**
 -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초등생도 배우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언급조차 못 하는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을 질타하고, 헌법의 가치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
- 미성년자 유괴 사건엔 미온적 대응, 반중 시위 중단에 진심인 서울시 교육감**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중 시위는 깡판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에 득달같이 ‘혐오 시위 중단’ 캠페인에 나선 서울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함
- 공자학원의 운영 실태와 공산주의 미화·선전 문제 지적**
 - 대학과 중·고교에 파고든 공자학원이 아이들에게 중국 공산주의를 미화하여 선전하는 채널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수조사와 퇴출 조치를 촉구함
- 지선을 앞둔 교육감들의 대표성 홍보 예산으로 전락한 교부금 집행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부실 지적**
 - 작년과 올해 1,390억 원이 투입된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대표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
 -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촉구함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효성 지적**
 - 구체적 목표와 평가지표 없이 재정 투입만을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듣기에만 좋은 이 정책이 도리어 지역대학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섬세한 평가지표 마련 촉구

“교육의 이름으로 공정성과 책임을 묻다”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시행 1년, 지역간 교육격차 (양극화) 유발 문제점 지적**
 -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 최소성취수준의 미도달률, 미이수율이 높아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객관적 수치로 지적
 - AI 관련 수업도 그 종류와 질에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생
 -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학습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에 대한 촉구
- 글로벌 대학, 사업 선정결과 사전 유출 문제점 지적**
 - 정부 공식발표 전, 선정 결과 유출에 대한 경위 조사와 책임자 징계 통한 재발방지대책 및 공정성 강화 요구
- 현장서 여전히 진행 중인 교권침해. 사각지대를 메우다**
 -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 ‘이어드림’ 서비스가 ‘상담을 가장한 민원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요구
 -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재 필요성에 대한 강조 및 교육부, 시·도교육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끔
 - 각종 업무와 당연직 참여로 인한 교감(관리직)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 비리·비위로 얼룩진 국립대학교, 각종 문제 해결을 촉구**
 - 한체대, 주먹구구식 실기 심사에 따른 입시 공정성 문제 지적
 -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관련 불공정성, 공익제보 무마 질타
 - 전남대, 대학원생 자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편파적 구성 지적
-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촉구**
 - 용돈기입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교육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 마련할 것을 당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

주요 내용

- 디지털 서비스 수출 전략 강화와 국가 디지털 경쟁력 재정비**
 - 세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국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의 수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 데이터·AI 기반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수출 경쟁력 극대화
 -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 기능 강화 및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우주시계 재설계**
 - 발사체·위성·지상체 전 주기 평가를 통한 한국 우주산업의 경쟁력 점검
 -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정책 실행력 보완 및 민간 중심 생태계 강화 요구
 - 국제 경쟁에 대응하는 중장기 국가 우주 로드맵(우주시계) 재정립 필요성 강조
- 국가 사이버안보 3축체제 구축과 기반시설 보호 강화**
 - 통신·기간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보안투자 확대 필요
 - 국내 침해사태 즉시 공유·확산 차단 체계 등 민·관 공조시스템 구축 제안
 - 적성국 배후 공격 대응을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3축체제(탐지-방어-대응) 마련 촉구
- 과학기술 R&D 시스템 개혁과 연구자·인재 경쟁력 강화**
 - 국가 R&D 중복·칸막이 문제 개선을 통한 도전형 연구개발 체계 전환 추진
 - 연구자의 행정 부담 축소와 물입 연구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제시
 -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정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 AI·양자·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패권 경쟁 대응 전략**
 - 초거대 AI와 클라우드를 위한 국가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 양자기술 패권 시대에 대비한 장기 투자·인재 양성·기초기술 확보 전략 제안
 - SMR 국제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및 국내 규제 혁신 필요성 강조

AI부터 통신까지... 국민안전 민생 보안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

주요 내용

- AI 딥페이크의 '현실적 위협' 현장에서 경고**
 - AI 딥페이크 음성을 직접 재생하며 가짜뉴스 위험성 경고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사례 선제 대응 필요성 제기
- 간판 교체에 4억, 발령도 무경험자... 방미통위 졸속 출범 지적**
 -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에 '미디어' 추가하는데 약 4억 2300만원 투입 비판
 - OTT 정책 제외된 '택달이' 조직개편과 방송 무경험자 발령 질타
-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과 자료도용으로 위원장 사퇴 촉구**
 - 국감 기간 자녀 결혼식 피감기관 축의금·화환 수령 문제 지속 제기
 - 타 의원실 자료 무단 복사·도용 문제 제기하며 위원장 도덕성 문제 지적
- 펨토셀·기지국 등 불법통신장비, 해외직구 '프리패스' 문제 지적**
 - 직구 플랫폼 경우 불법 통신장비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는 문제 지적
 - 관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 협력으로 HS코드 세분화 등 대책 촉구
- 썬양 증언을 통한 사이버렉카 심각성 환기 및 종합대책 동력 확보**
 - 사이버렉카(악성 루머 조작·양산으로 협박금 요구)의 심각한 피해 실태 환기
 - 플랫폼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투명성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아이폰 위치정보 제공 시간 '5분 → 30분' 연장 추동**
 - 제한된 위치정보 제공으로 긴급 대응 지연 문제 지적
 -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위치정보 제공시간 30분으로 연장 합의
- 방미심위 마비로 캄보디아 불법 게시물 삭제 불가능 실태 고발**
 - 이메일 협조 수준을 국제공조로 포장하며 플랫폼 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지
 - 지속되는 불법 구인 광고...신속 대응 가능한 통합대응 체계 마련 주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의혹 제기하며 이슈 메이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의원

주요 내용

-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상임위 독재 운영 문제 지적하며 위원장 사퇴 촉구로 이슈 메이킹**
-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관련 거짓 해명 및 이해충돌 규탄, 위원장 사퇴 촉구**
 -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화환·축의금 등을 받은 사실 밝혀내며 이해충돌 문제 제기
 - ‘양자역학 공부 중이라 몰랐다’, ‘딸이 유튜브 보고 날짜 정했다’ 등 비상식적 해명한 것에 대해, 본인 명의로 국회 대관을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며 거짓 해명 책임 추궁
- **언론탄압 및 직권남용 문제 지적**
 - MBC 비공개 회의자리에서, 보도본부장에게 본인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원하는 답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한 것 관련, 언론의 자유와 보도 독립 위반 문제 지적하며 위원장 사퇴 촉구
 - 보도 개입 직권 남용 판례 제시하며, 언론 자유 침해 문제 처벌 필요성 제기
- **AI 시대에,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한전부채·산업경쟁력 악화 등 국민 부담 수습조원
 -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려 태양광 등 재생E를 활용해 전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
 - 또한, 민주당이 미래 원전 핵심 사업인 SMR 연구개발 예산을 1/10으로 삭감한 것을 밝혀내며, 에너지 자립과 AI 전력 기반 약화 시킨 책임 추궁

‘AI 가짜뉴스 살포’, ‘정치 보복’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KT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 민생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

주요 내용

- **‘가짜뉴스 살포’·‘정치 보복’·‘국익 훼손’ 민주당·이재명 정부 실정 바로잡기**
 - 민주당·열린공감TV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AI 음성 가짜뉴스 폐해 지적
 -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영향 AI 범주 확대 및 제재 근거 마련 등 대책 촉구
 -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 AI 100조 투자 계획, 국민 노후 위협 질타
 - 후쿠시마에는 분노, 북한 핵폐수에는 침묵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이중성 지적
 - 국가안보 위협하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 레이더 차폐 문제 대응 필요
- **KT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해결 등 민생 이슈 앞장**
 -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2천명 위약금 923만원 내고 해지...위약금 면제 조치 이끌어 냄
 - 불법 펌토셀 작년 10월부터 접속, 1년 동안 보안 무방비 KT...예고된 보안 참사
 - LG U+는 해킹 정황 공유에도 ‘침해 사실 없다’며 신고 거부...기업 이기주의 지적
 - 외주 보안업체는 같은 정황에 신고한 사실 밝혀내며 LGU+ 최종 신고 이끌어 냄
 - 해킹 심각한데...이재명 정부, 내년 해킹대응 예산 736억→488억 33% 삭감 질타
- **AI 인재 확보 등 이공계 지원, 불법콘텐츠 판치는 플랫폼 등 과방위 현안 주도**
 - AI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도입 지연...AI 인재 분야 기준 명확화 필요
 - 쿠팡, 소비자 권리 강탈하는 납치광고 문제를 파트너스 회원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
 - ‘사제총기’ 더 없게... 플랫폼에 제작법 ‘즉시삭제 의무화’ 추진 필요
 - “박찬욱 영화가 공짜?”...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 방미심위 마비 지적
- **‘방송장악’, ‘이진숙 축출’ 무너지고 있는 방미통위·공영방송, 정상화 시급**
 -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 통과에 이어 추석 연휴 앞두고 무리한 경찰 체포 질타
 - 위험 소지 다분한 방송4법, KBS 사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속처리 필요
 - 민주당 홍보채널로 전략한 공영방송 지역MBC 유튜브...엠티타카 등 관리 소홀
 - 유시춘 EBS 이사장, 대선 때 유시민 망언 비호하려고 해명 문자...정치 중립 위반 해임사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AI·인재유치등)·사이버안보 주도권 다툼 해소 방안 집중 지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 'AI투자규모 적절성 문제'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기계적 배분 → AI 100조 공약 후퇴 시그널
- AI 3대 강국도약을 위해 정부재정투입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투자 유인 필요

● 이재명 정부 영터리 국정과제, 시작부터 흔들!

- 국정과제 '해외 인재 유치'에 앞서, 국내 우수인재 유출 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 국정과제 'R&D 투자시스템 혁신', 기재부와 이견으로 시작부터 삐걱

● 대규모 해킹사고 대응시 과기부-국정원 주도권 다툼 지적

- skt 해킹사건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시 과기부 → 국정원 배제 지적
- 중국 배후 해킹조직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부처간 협력 부재로 인한 대응 미흡

● 정부출연연구원 직원 처우개선 및 보안 강화 필요!

- 매년 늘어나는 출연연 연구원 이직 대책 마련 시급
- 출연연, shadow AI 방지위한 보안대책 마련과 공식 구독 확대 촉구

● 유튜브발 사이버 폭력,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의 보호 책임 필요 지적

- 유튜브발 허위·자극 영상 지역 명예훼손과 청소년 범죄 확산 등 사회적 피해 초래
-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 발생
- OTT·유튜브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사전적 책임 부과 및 방미통위 권한 강화 필요

● 재난정보는 골든타임, IPTV 지역채널 공적책무 강화 지적

- 지역 단위 재난 빈번한데, IPTV는 지역 재난방송 채널이 없어 정보 사각지대 발생
- IPTV도 지역채널 편성 의무와 재난방송 송출·지역기여금 제도를 도입

● 이재명 정부, 대선 후 말바뀌 탈원전 시즌2로 가나?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영터리 근거로 원전 정책 말바뀌 문제
- 신규 원전부지 선정절차 중단,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 지연 탈원전 현실화 우려

●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 운영 확대해야!

- 안전성 확보된 고리 2호기 연장 운전, 조속히 결론 내야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대비 선제적 우라늄 농축·재처리 준비 필요
- APEC 대비 불법드론 대응장비, 행사 끝나고 설치하겠다는 한수원 문제 지적

● 우주항공청 출범 1년 6개월 종합평가!

- 지역 이기주의 버리고, 연구·산업·행정 기능 통합으로 우주항공청 시너지 높여야
- 성공적인 누리호 4차 발사 통해 발사체기술 민간이전 우수사례 남겨야
- 우주항공청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간 이견과 갈등 조정 필요

AI·사이버 시대, 통제 잃은 기술의 위협에 대한 국가의 답을 묻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주요 내용

• (과기부) AI정책, 예방보다 투자 집중... 디지털 괴벨스 우려

- 최근 AI 기술, 얼굴·음성까지 합성 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히 발전
- 정부 정책은 투자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 부작용 대응체계 미비
- 법사위에서도 AI 조작 녹취 논란 발생(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前총리 회동)
- 박장범 KBS 사장 모델로 '모달AI' 제작·시연 통해 AI 가짜뉴스 심각성 지적

• (과기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부재

- AI를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범죄 지능화·고도화 지속
- 해커 역시 AI를 공격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
- 해킹 대응기관 다수로 분산... 범부처 통합대응체계 부재
-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

• (과기부) LGU+, 이미 4월에 해킹 당했다?

- 내부망 침입 정황 확인에도 "피해 없다"는 보고
- 거짓 보고 가능성 제기... 정밀조사 및 재점검 필요

• (방미통위) 마약장터된 SNS, 총괄 조정기구 부재

- SNS에서 마약 은어 검색 시 불법거래로 손쉽게 연결되는 상황
- 불법 게시물 처리 절차가 '국민 신고 → 방미심위 심의 → 방미통위 이행'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행정 지연 및 제도적 사각지대 다수 발생
- 방미통위 산하 불법정보 통합대응센터 구축 필요성 지적

• (방미통위) 가짜뉴스 발원지 TBS, 김어준 복귀 논란

- TBS, 특정 프로그램 중심 반복 제재 및 고액 출연료로 재정 악화
- 김어준, "3년 6개월 뒤 돌아오겠다" 발언 이후 복귀설 확산
- 행안부 장관의 'TBS 부활' 언급으로 정치적 악속 논란 촉발
- 공영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제기

중국 '천인계획' 변종 포섭 시도 첫 실증 확인, 연구보안을 국가안보 의제로 부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

주요 내용

• (현황) 중국발 기술 포섭, 현실로 드러나다

- 2024년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 정부 지원' 명목의 동일 이메일을 동시에 수신한 사실을 의원실이 확보
- 연 200만 위안 급여, 주택·자녀 학비 등 고액 조건이 명시된 실질적 기술 포섭 시도
- 국정원은 이를 중국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의 변종으로 판단

• (문제점) 대응 권한 없는 연구보안, 매뉴얼·제도·기능 모두 부재

- 연구보안조직은 강제조사·포렌식 권한이 없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
- 위험기관 리스트·통합 기준이 없어 현장 판단과 차단이 사실상 불가
- 연구보안이 기관 자율에 머물러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부재

• (지적) 'KAIST 단독 체제'가 드러낸 구조적 무력화

- 전국 대학·출연연 중 연구보안 전담조직은 KAIST 한 곳뿐이며, 인력과 조직은 갖추고 있으나 전국 단위 표준 매뉴얼과 법적 권한은 전무
- 교수들은 의심 메일을 개별 문의로 대응하는 수준이며, 예방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 최근에는 학회·세미나 등에서 연구자를 접촉한 뒤, 별도의 포섭 제안을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됨
- '천인계획'은 이름만 바꾼 다수 공정으로 활동 중이며, 제재리스트 기관과 접촉 시 국내 연구자도 국제 제재 위험에 노출

• (성과) 국내 최초 실증 확인, 연구보안을 국가안보의 축으로

- 의원실이 외국 정부의 조직적 기술포섭 정황을 최초로 실증 확인하며, 연구보안을 국가안보 차원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안)을 2025년 2월 발의, 전담조직 설치·보안등급 세분화 등 제도 기반 마련 추진
- 과기정통부에 ▲연구보안조직의 초동대응 권한 부여 ▲위험기관 대응 매뉴얼 마련 ▲연구보안 인증제 강화·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 부처 차원의 검토 및 후속 이행 약속을 받아냄
- 의원실 주도로 정부출연연 전반의 중국발 인재유출 실태와 대응 공백을 종합 점검하고 있음



외교통일
위원회

외교부 및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주요 내용

•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전담 수사 데스크 '코리아 전담반' 설치 지연 지적
- 장관의 캄보디아 현장시찰 필요성 강조 및 촉구

• 해외 공관(아주반) 국정감사 질의

- 필리핀 : 국외도피사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대규모 시위로 인한 자국민 피해 예방 촉구,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 독려, 자연재해로부터 자국민 보호 방안 마련
- 일본 : 신임 총리에 대한 대일외교정책, 조총련계 조선학교 접촉 실태 파악, 일본에서의 대북 유입 물류 및 자금 제재, 재일동포 및 국외부재자 선거 불편사항 해결방안 수립
- 중국 : 탈북자 인신매매 근절,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 어선 서해 침범, 양안지역 평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베트남 : 서기장 방북에 따른 대책 수립
- 태국 : 태국-캄보디아 총돌로부터 자국민 보호 필요
- 캄보디아 : 한국인 납치·감금사태 대응방안 촉구, ODA 규모에 맞는 대응 필요
- 라오스 : 해외 탈북자 지원 및 문제개선, ODA 규모에 맞는 대응 필요
- 공통 : 한국인 대상 범죄 및 불법체류자 증가,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

•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 북한에 대한 장관의 부적절한 주적관 및 '두 국가론'에 대한 문제 제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외교, 헌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

주요 내용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태 등 재외국민 보호 미흡

- 20대 대학생 사망, 국민 300명 이상 감금 신고 있었지만, 골든타임 상실
- 작년 국정감사 지적 및 재외공관 보고가 있었지만 미온적 대응
- 코리아데스크 설치 무산 등 사후 약방문식 대응 지적

•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으로 인한 외교 공백초래

- 173개 공관 중 43개 공관 대사 및 총영사 임명 지연
- 조지아·캄보디아 사태 발생 했지만 현장 대응의 주체 대사 부재
- 주유엔대사로 외교 경험 없는 대통령 변호인 출신 코드인사 임명 문제

• E.N.D 이티셔티브의 한계와 한반도정책 현실 인식 촉구

- 미국과의 조율 부족, 동맹국지지 없는 대북정책 메시지 효용성 없어
- 미북, 남북 대화는 비핵화 원칙 준수 촉구

•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주장의 문제점 지적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 주장
- 헌법에 명시된 통일 사명에 배치, 분단 고착화 및 통일의 당위성 훼손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문제

- 2023~2024년 공개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비공개 결정
-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이유로 보고서 발간 취소
-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정부 북한인권 개선 의지에 근본적 의구심 제기

•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논란

-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 추진 시도
- 용어 변경 설문 조사 구조상 특정 답변 유도 가능성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 의원

주요 내용

- 조지아 한국인 317명 구금 사태 대통령실·외교부 초기 대응 문제, 정책 대안 제시**
 -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조지아 구금 사태의 심각성을 늦게 파악, 초기 대응이 지연된 문제에 대해 조기 대응체계 강화 촉구
 - 사태 초기 대통령의 무관심과 뒤늦은 메시지 전달, 사건과 무관한 일정 소화로 인한 대응 지연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신속한 메시지 체계 구축 강조
 - 안보·홍보·비서 라인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총체적 조율 실패와 초기 대응 혼선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안보실 내 대변인 기능 신설 필요성 제시
- 두 국가론 발언 문제점 지적과 대북정책 성공 전략 제시**
 -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두 국가론의 불필요한 논쟁 확산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북정책 추진력과 신뢰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지적
 - 북한의 단기적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협상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대북 저자세와 구걸적 태도를 지양하고, 대통령실 중심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지지와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
-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대응 문제점과 안전 대응체계 강화 촉구**
 - 외교부장관, 영사안전국장의 사태 초기 보고 시점 및 발언 불일치 등 사건 심각성 경시 문제 지적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층의 협조 요청 부재 및 구체적 지시 전무, 주캄보디아대사 미임명 문제 등으로 인한 대응 지연 지적
 -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시스템 구축 제시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무능, 국민 기만하고 국익 저버려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의 재외공관 공석 방치, 캄보디아 사태 자초**
 - 현재 대사가 공석인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급증. 7월 피해 신고에도 방치
 - 171개 공관 중 43곳 공석 상태. 후임 없이 대사 소환, 국민 안전은 뒷전
 - 보은 인사·사상 검증에만 몰두. 직무유기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려
-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대통령의 동기 챙기기. 국익보다 보은이 먼저**
 - 91년도 유엔 가입 후 첫 비외교관 대사 임명. 자격심사 자료는 제출 거부
 - 친북 활동 이력, 김현지 성공보수 삼각 커넥션 의혹 해소 필요에도 증인 출석 거부
- “극적 타결” 자화자찬한 외교부, 문서 없는 대미 외교로 국민 기만**
 - 자동차 관세 “합의 완료” 발표했으나 실상은 백지. 한국만 25% 고율 적용
 - 대미 투자, “출자·보증 형식”이라더니 미국은 “이익·투자처 미국이 결정”
 - 전액 현금 투자 사실 알면서도 “극적 타결” 자화자찬. 고의적 국민 기만
- 북한 눈치 보며 북한 인권 내팽개친 이재명 정부**
 -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거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발간
 - 효율적인 조직개편 한다더니, 북한인권인도실, 납북자대책팀 폐지!
 -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 문제’ 외면. 국제사회 비판 자초
- 논란 자초하는 통일부 장관. 정작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은 어디에?**
 - 북한 주장 그대로 답습한, 선부른 ‘두 국가론’. 통일 당위성 깎아내려
 - 통일부 장관의 북한 짝사랑에도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비난
 - 대통령은 미완성, 통일부 장관은 핵 보유 인정. 정부의 오락가락 기초

이재명 정부의 양치기 소년외교 저격!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

주요 내용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명확한 외교 원칙 확립 촉구

- 이재명 정부 외교라인 내에서 발생하는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 고조로 인한 대미·대북 메시지 관리 실패 지적
- 대미협상 과정에서의 이재명 정부 말 바꾸기 '양치기 외교'로 인한 국민 불안 및 혼란 가중 질타
- 세력, 이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국익을 위한 외교적 맵 구축 강조

•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 요구

- 정동영 장관의 헌법에 위반된 두 국가론 인정 관련, 국가안보실장 및 외교부장관, 주UN대사 등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부정하는 입장차 발생에 대한 명확한 남북 관계 설정 요구
- 개성공단 내 정부 자산 피해액이 3,000억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UN대북 제재 및 미국의 북한제재 등에 대한 해법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실질적 해법 제시 요구

• 차지훈 UN대사 임명은 다자외교 포기

- 외교무대 경험이 없는 '보은인사' 차지훈 변호사를 다자외교의 정점인 UN대사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다자외교 포기 선언'
-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관장 임명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별도 적격 여부 기록하지 않은 채 차지훈 UN대사를 임명한 점을 지적

•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발급창구 설치 촉구

-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발급창구 부재로 연간 2,8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경남·부산·울산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 지적
- 대한민국 제2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창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

은폐된 진실, 낭비된 세금 - 외교·통일행정을 바로잡다

외교통일위원회 송언석 의원

주요 내용

•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은폐·위증 의혹, 외교부 강력 질타!

- 우리 대학생 박모 씨가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고문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으나,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두 달이 지난 10월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초유의 외교참사가 발생함
- 이에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건 인지 시점을 추궁했고, 장관은 "지난주에 알았다"고 답변했으나, 현지 국정감사 중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8월에 이미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외교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함
- 이는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종합감사에서 외교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강하게 질책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함. 해당 내용은 연합뉴스, KBS 라디오, MBN 등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도되며 외교부의 부실 대응과 위증 의혹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킴

• 북한에 퍼주는 비공개 경험예산, 전면 공개 및 전액 삭감 요구!

-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과 철도·도로 연결 등 대북 경험 인프라 사업에 무상 지원하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배 늘린 1,789억원으로 편성함
- 그러나 최근 9년간 사업 집행률은 1.4%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편성 내역조차 '대북정책 노출 우려'라는 이유로 비공개 상태임. 또한, 북한은 우리 자금으로 지은 도로·철도를 폭파하고 대북차관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세금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대북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전면 공개와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불투명한 대북 경험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사업 예산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함

• 북한 저작권료 보내지도 못하며 수수료만 챙기는 경문협 방치한 통일부 규탄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설립하고 통일부가 허가한 법인으로, 국내 방송사·출판사의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관리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 송금이 중단되자 법원 공탁으로 돌려막기를 이어왔고, 올해 8월까지 2억 6,937만 원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경문협은 징수액의 20~35%를 수수료로 취득하며 최소 10억~최대 22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정됨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에 줄 수도, 쥐서도 안 되는 국민의 돈을 민간단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통일부의 관리 책임을 강력히 질타함

보은 인사 외유의 전형,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

주요 내용

• 정상외교 못한 특사

- 11개국 중 정상외교 성사는 4개국(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불과
- 서방 주요국(캐나다·프랑스·영국·폴란드·독일·호주) 모두 정상 면담 실패
- 대다수 외교안보보좌관 또는 장·차관급 수준의 면담에 그침
- 대통령 친서 전달의 특사가 정상 접견에 실패한 이례적 사례 다수

• 외교적 메시지 혼선

- 중국 특사단(단장: 민주당 전 국회의장), 시진핑 주석 면담 못 하고 귀국
- '전방위 외교'를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 주요국 신뢰 확보 실패

• 전문성 부족 인선 및 보은 인사

- 외교 전문가보다는 정치권 보은 인사 중심의 특사 인선
- 특사단 다수가 대선 공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외유성' 특사
- 대미 특사단은 여당 최고위원과 특사단장 내정자 간 갈등으로 무산
- 일본 특사단 또한 대통령의 방일 일정 선행으로 파견 취소

• 고비용 저효율의 혈세 낭비

- 11개국 평균 지출액: 약 4,100만 원(전체 지출 총액: 약 4억 5천만 원)
- 정상 면담이 성사된 아시아 4개국의 평균 비용(약 2,000만 원 미만) 대비 서방국가 파견 특사단이 평균 두 배 이상 평균 지출(약 5,000만 원 이상)
- 실질 외교성과 대비 비용 현저히 낮은 효율성

미·중 갈등, 북핵 등 세계질서 재편에 경제·안보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

주요 내용

• (외교부) 대미 투자 1위에도 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 트럼프식으로 해결해야

-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마무리해야
- 커진 북핵 위협에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 무장해야
- '상시 발생하는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부재 지적

• (통일부) 남북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일 없어야!

- 북미대화를 앞두고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북한의 두국가론에 호응하는 듯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함을 지적
- 북 핵보유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대칭 전력을 극복할 방안 마련토록 지적

• (아주반 재외공관) 한국인 대상 범죄 만연한 캄보디아, 한국 정부가 나서야

- (필리핀) 경제·안보분야 협력 강화해야. 대규모 반정부 시위, 한인 피해 없어야
- (일본) 크우 다카이치 총리 유력에 한일관계 불확실성 줄일 외교책 주문
- (중국) 양안문제, 북·중·러공조 강화, 서해 구조물에 한국 입장 전달토록 지적
-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사관의 소극 대처 지적

• (외교부·통일부) 미·중 갈등, 북핵 위협에 경제·안보 철저히 대응해야

- 주한미군 압수수색은 명백한 SOFA 협정 위반 지적
- 해외공관 영사인력 감축에 따라 교민 안전 공백이 커짐을 지적
- 북한만 바라보는 현 정부, 여야 협치 등 국민통합이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
- 한국교류재단, 수입 다각화 노력 부족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한 안보태세 점검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주요 내용

- 국방부의 '내란' 용어사용 및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출범,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정치 이용 중단하라!**
 - 국방부는 엄연한 정부 부처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안규백 장관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함
 - 또한 민관군 합동 자문위에는 군과 공무원까지 포함되었기에, 국방부는 당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군인과 공무원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하는 것을 멈출 것
-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표현과 위협천만한 한미동맹 인식**
 -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굴종적 사고'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굴종적 관계로 묘사
 -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넣어 북핵 대응과 감시자산의 미비한 현실 속 졸속 전작권 전환으로 국민 우려를 가중시키는 중임
 -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도 '회복'이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반미감정을 선동, 대통령과 국방부는 졸속 전작권 전환을 멈추고 현실적인 북핵 및 전작권 전환 비용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 군무원 처우개선 필요**
 - 준 군인신분의 대우를 받는 군무원은 군형법 적용, 당직근무 투입, 관사 미제공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책임만 지고 있음
 - 이에 군무원 면직자 중 90%가 자연차 군무원으로, 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방부는 군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군무원을 외무공무원과 같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명확히 하여 군무원 근무 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병영제도 개선 종합점검 - "국민의 눈으로, 장병의 마음으로! 새로운 국방을 설계하다!"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

주요 내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된 상황
 -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금융비용은 공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국방부는 협의체)하여 본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 군 급식 부실해 민간위탁 했더니, 중국산 김치, 가짜 원산지 축산물 수량도 속여**
 - '24년 12월 기준 민간위탁급식 시행 25개 부대 중 13개 부대 중국산 김치 사용
 - '국방부 급식 방침'상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고, 수입산 사용 제제할 강제조항 부재
 - 한 위탁업체는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 수량마저 부풀려 조작
 - 민간위탁업체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추진시 군 관련 제약사항 사전 확인 필요**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광명 시흥 공공택지지구 부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군사용 철도문제로 4년째 개발 지연
 -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 지정을 서둘렀지만 군사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
 - 향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시 국방부와 국토부가 사전 협의하도록 제도 보완 촉구
- 동원지정자에게 너무 가혹한 병력동원소집 규정 완화 필요**
 - 동원훈련 유형별 무단불참시 고발 기준 상이
 - * I형 대상자 즉시고발, II형 대상자 3차까지 무단불참시 고발
 - 고의적, 반복적 행위가 아님에도 상당수 청년들이 전과자로 내몰리는 상황
 - 동원훈련 I형 1회 무단불참시 과태료 부과, 2회부터 고발조치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육군 '24년 하달된 소령 경력관리모델 지침, GOP대대 소령은 피해자**
 - 육군은 우수한 소령들을 창끝부대에 보직시키기 위해 경력관리모델 개선지침 하달
 - 그러나 '25년 진급선발결과 최전방 창끝부대에서 근무하는 소령 진급 전원 미선발
 - 또한, 최근 5년간 야전부대 보다 정책부서 근무 소령이 진급 선발률이 약 3배 높은 상황
 - 최전방·야전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인사 우대와 진급 평가 기준의 개선을 촉구

국방 시스템 혁신 및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질의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

주요 내용

• 국가안보 및 전력 시스템 진단

- 인터넷상 군사지리정보 유출 대응 및 방첩사 해체 문제 신중 검토 필요
- 경계용 드론 640여 대 도입에도 불구하고 운용인력 부족, 교육 부실, 부대별 성능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이 심각하여, 드론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 요구
- 비행장 제1구역에 군용기 운항 지원 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 촉구

• 군 인력 운영 및 제도 운영 개선

- 장기복무 전환율과 ADD 재취업률이 낮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역할 강화 요구
- 직책·병과별 수당 기준의 불합리성 및 수당 장기 동결로 인한 군 사기 저하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당 지급 체계 재정립 촉구
-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적법한 명령 이행' 판단기준 명확화 마련 촉구
- 해군 부사관 총 지원율 하락과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1직군의 임관율 하락으로 장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촉구

• 장병 복무 환경 및 복지 증진

- 육군 로카우스(용사의집) 육군의 소유권 상실 및 장병 복지 증진이 미흡하여 과도한 비용 상환 및 높은 이용료 문제 해결 요구
- 재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에서 위생 문제가 심각하여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방독면을 개인관리물자로 변경 검토 제언
- 피복비 예산은 남으나 병사 만족도가 낮아, 간부처럼 보충피복 '쿠폰(e-money) 지급' 하여 병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체계 도입 검토 요구
- 전쟁기념관 내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현역 장병 및 군 가족을 위한 저렴한 '전쟁기념관 야외 예식장' 마련하여 복지 혜택 제공 제언

• 국방 행정 및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

- 육군 중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시효만료된 불납결손 채권 발생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 관리 실태에 대한 심층 진단 촉구
- 국정감사·조사 권한 오용 방지 및 한계 인식 제고 촉구

• 국방 문화 및 인식 제고

- 전쟁기념관 여군 전시 부스가 면적 및 자료면에서 협소·허술하여 보강 요구

북한 위협 고도화, 軍 초급·중견간부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

주요 내용

• 북한 열병식 '화성-20형' ICBM 공개 등 군사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책 질의

- 국방부 및 합참의 공식 평가와 我軍의 대응방안 및 능력 보유 촉구
- 사업타당성 부재로 인해 중지된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의 조속한 재검토
- 북방한계선 부근 北 대전차 방벽 및 DMZ 토양 스펠지 현상에 따른 우리 군 극복방안 및 유사시 복진 위한 작계 수정 검토 촉구

• 軍 초급·중견간부 이탈 가속화에 따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대책 질의

- 육군 자주포, 기갑부대 및 해군 함정 부사관 보직률 급감에 따른 軍 대책
- 서북도서 해병부대 열악한 급수시설 및 복무환경 적극 개선 촉구
- 군무원층 이탈 가속 및 모집률 저하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필요 지적

• 안전한 선진 병영문화조성 관련 질의

- 대통령 경호처 파견 군부대, 17사단 등 실탄 재고 불일치 등 軍의 허술한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 최근 5년 육군항공전력 예방착륙 횟수 증가에 따른 정비체계 강화 주문
- 軍 의료헬기 '메디온' 활용 저조에 따른 우려 표명 및 관련 개선책 촉구
- 병무청에 의한 병역면탈자 관리 및 감독 강화 촉구

• 유사시 즉각 대응 위한 軍 전력증강 및 기존전력 보강 관련 질의

-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사업방식, 사업개요 등에 관한 현안 질의
- MASGA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K-방산 수출 활성화 및 한미 해군력 강화 등에도 기여 촉구
- K-1E1 전력증강 사업 예산 미반영의 부적절성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대형산불 발생시 공군 수송기 활용 공중화재진압체계 도입 촉구
- 군용 갤럭시 도입, 볼드퀘스트 훈련 참가 등 소프트웨어 기반 軍 암호체계 전환 및 군 지휘통신 체계 혁신 주문

군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혁 촉구 : 경계작전·식자재 안전·휴가제도·보훈 오류 바로잡기!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주요 내용

• 70년간 유지한 軍 경계작전 개념 전환 가속화 촉구

- 2013년부터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을 지적
- ▲GP, GOP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 개념 적용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 통합운영으로 병력 절약 ▲경계전담여단 또는 PMC 편성·운영 ▲상비사단을 축선 중심에 배치해 평시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대비태세 유지, 경계작전 개념 전환 촉구에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사사령관 등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냄

• 軍 식자재 검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 충청지역 군부대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검사 결과가 48시간이나 걸리는 현행 부식 검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함
-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각 부대단위에서 즉시 식자재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검사키트와 휴대용 장비 도입을 촉구함

• 국군 장병의 각종 휴가 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 제기 및 개선 촉구

- 휴가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포상 및 위로 휴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공정성과 운영 정상화를 요구함
- 육·해·공군 간 미래도전휴가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 지휘권 침해 요소를 제거해 형평성과 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 구직휴가가 허위 상담·수료증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 증빙 기준 마련과 사후점검 체계구축을 촉구함

• 국방부 행정오류로 상이연금 박탈당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건 진상규명 촉구

- 나형윤 예비역 중사는 군 복무 중 양팔을 잃었지만, 의무사령부의 잘못된 신체등급 판정과 허위·오류 문서 작성 문제를 지적하며 의무사령관으로부터 실수 인정을 이끌어 냈고, 안일한 후속조치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나형윤 선수에 대한 재수속과 보상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허위 문서 작성 경위 규명을 촉구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의 대답을 이끌어 냄

국군을 敵으로 생각하지 말라!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

주요 내용

• 12·3 비상계엄에 경미한 가담자도 엄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 대통령은 계엄에 경미한 가담자도 엄격하게 선별하여 진급대상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장관은 복창 중임
- 그러나 군인은 흔히들“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령의 준엄함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에는 명령권자의 준법 의무와 함께 제25조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가 명시
-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안을 자의적 해석으로 수명 여부를 결정한다면‘지휘계통’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는‘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로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의하여 수행한 군인들을 경미한 가담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국군은 무너지고 군령은 허공에 흩날리는 한낱 낙엽에 불과할 것

• 상급지휘관의 공석을 방지하는 국방부장관

- 현재 군단장급 지휘관은 75%가 비어 있으며, 사단장급 지휘관은 과반수가 임기 만료 후인데도, 연장 근무를 하는 상태임
- 그러나 현재 대령에서 준장 진급심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장군 인사는 언제 할지 기약조차 없는 현실임.
- 군은 지휘관의 위치가 군 전체의 사활을 결정하나, 현재 軍은 레임덕을 넘어서 사망 판정을 받는 데드덕이 된 지 오래임
- 이러니 軍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軍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안전
위원회

국민 안전 확보 미흡과 부실 행정을 지적하고, 공직사회 신뢰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주요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및 후속조치 촉구

- 국정자원 화재 발생 직후 대통령 행적 논란 및 후속조치 미비
- 화재 피해 상황 파악 미흡 및 일관성 없는 행안부 대책 질타

• 참사 유발하는 유사명칭 지하차도 등 시설물, 제개정은 부처간 떠넘기기

- 오송참사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된 유사명칭 지하차도 전국 약 96개소
- 참사 이후 2년간 개선 안되는데 담당 부처(행안,국토)는 서로 떠넘기기만
→ 국정감사 지적 후 후속조치로 개선 대책 발표(행안부, '25.10.28.(화))

• 인사혁신처장의 국정 인사 평가

- 이재명 정부 측근 인사 및 변호인단 고위직 임명 논란
- 성취예측모형을 인사혁신처의 업무에 적용하지 말아야

• 캄보디아 發 국제 범죄, 한국 거점도 조사 필요

- 미영,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자산(21조원) 동결 및 추적
- 국내 지사 확인, 조속한 자산동결 필요

• 임기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조성?

- 재임 중 대통령 생가 조성 사례 없어
- 정치적 중립성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 이진숙 체포 무리수는 외압인가? 예정된 시나리오인가

- 불출석사유서도 냈는데 무작정 소환 요구
- 체포영장 신청한 수사2과장은 징계도 아닌 영전 인사

• 공무원 재해보상 신속처리 및 인용률 높여야

•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증가, 대책 마련 시급

• 김현지 부속실장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조사 필요

- 경기도 재직시 대선 자금 관여 의혹
- 선관위의 신뢰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

• 국정자원 화재 순직 공무원, 과연 누구 때문인가

- 한창 복구가 진행 중인데, 핵심 부서의 담당 국장 대기발령
-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 중

행안부 등 산하 기관, 정치공세 멈추고 민생에 초점 맞춰야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의원

주요 내용

• (행안부) 부당한 정치공세 및 안일한 공직 시스템 지적

- 지자체를 향한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은 부당한 정치공세 지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관련 재발 방지 촉구
- 배터리 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등록 비율 30% 미만 지적, 등록 독려 및 활용 촉구

• (인사혁신처) 인재발굴을 가로막는 백지신탁제도의 현실을 지적

• (선관위)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필요성 촉구

• (진화위) 인민군·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제3자 배상 방안 마련 촉구

• (경찰청) 정권 눈치보는 경찰행태 질타, 민생 우선 수사 촉구

- 반중 집회만 과도한 대응, 반미나 반일에도 동일 잣대로 수사 촉구
- 마약 전담수사 및 캄보디아 수사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 지적
- 태양광발전소 등 무분별한 검직허가는 공직사회의 혼란 발생을 지적
- 아동유괴 피의자의 적극적인 신상공개 검토 요청
- PM(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및 이용자 교육제도 마련 촉구

• (지자체) <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계획', <경기도> '판교 팍리스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 '10·15 부동산정책, 수도권 전역 외국인 부동산 문제', <대전> '국정화재 불법 하도급 문제', <충남>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문제', <전북> '태양광 과잉 설비 및 송전망 부족, ESS 정책 검토' 등 지역 현안 집중점검 및 경제·정책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정부 어당의 실책과 권력 남용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지연과 원인 불명, 대책 미흡으로 국가 전산망 관리 부실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지적
- (풍수해재해보험) 민간보험사 중심 수익 발생으로, 수익 구조 개선 촉구.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의 '온실' 가입과 중복 문제 지적 및 부처 간 협의 촉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외국인 선거권) 특정 국적 쏠림으로 국민 주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 지적
- (전산장비 관리 부실) 지난 해 총선 당시, 선관위 전산망 관리 업체 교체 문제 지적 및 보안체계 전면 강화 필요성 강조

• 소방청

- (심신안정실 운영 실태) 안마의자만 비치한 형식적 복지시설에 그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

• 경찰청

- (이진숙 체포사건) 이진숙 전 위원장 과잉 체포 논란 관련하여 수사권 남용소지 지적 및 수사 공정성 확보 요구
-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노력 필요성 강조
- (고소·고발 사건) 불송치 건수 및 각하 건수 급증 추세가 수사 기간 장기화 우려를 의식한 '밀어내기식 수사'의 결과는 아닌지 검토 요구
- (중국인 운전면허) 중국인 운전면허 허용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청

• 경찰공제회

- (사적 주식거래) 임직원 29,373회 거래누적액 522억 원 규모의 사적주식거래에 대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 여부 재조사 필요성 제기
- (임원 공석 장기화) 주요 임원 공석 장기화를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 안정성 확보 요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문제점 집중 점검

행정안전위원회 박수민 의원

주요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관련 대통령 행정 48시간 미스터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일인 9월 26일 오후 8시15분경부터 직접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30분까지 이재명 대통령 행적 불분명
-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없다'고 답변함
- 화재 발생 18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복구중. 국민 생활에 어떤 불편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체감 복구는 깜깜이 상태임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작전

- 필리버스터 대리출석 관련 법률검토 한다고 했으나, 양당 원내대표 서명과 국회의장 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락함
- 8~9월 출석을 성실히 협의중이었음. 그러나 6차례 출석 요구서 발송은 횡수 누적용. 8월 실무협의 진행했으나 '무응답'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작위적으로 적용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

-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함. (서울시는 25%, 그 외 지자체는 10%의 지방비 부담)
- 25%, 10%라는 비율이 작아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의미함
-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사업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지자체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상황임

경찰 위법적 수사·체포, 선관위 서버 보안, 소방 인건비 등 전방위적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주요 내용

• (행안부) 무늬만 국가직 소방. 가중되는 지자체 부담 경감 대책 마련 필요

- 문재인 정권 때 소방공무원 2만명 총원('17~'22년)과 국가직 전환('20년)이 이루어졌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약 9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지적
-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비는 담배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부담 있는데, 세수에 따라 교부세가 들쭉날쭉하여 17개 시도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분석하여 제시
- 국가공무원에 걸맞게 소방인건비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담배세 중 일몰되는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 자원 확보 방안 검토를 행안부에 요구

• (선관위) 선관위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4,400만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신뢰의 기초임을 피력
-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점검 필요성 주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 언급하며 재난 대비 체계적 관리 촉구

• (경찰청)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정치경찰의 서막을 알린 이진숙 위원장 체포사건 비판

- 출석요구 규정상 요구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지만, 계속된 일정에도 일방적인 6차례 출석 요구와 3차례 체포영장 신청
- 「경찰직무집행법」에는 현행범 또는 도주·자살 우려 등의 경우에 수갑을 채우도록 명시,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수갑 채워 체포
- 정권의 말 안 듣는 사람을 길들이기 위한 ▲막무가내 체포영장집행 ▲위법한 수갑 채우기 등의 행위를 비판하며 사법개편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생길 문제점들에 대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

국정자원 화재 원인 밝히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경찰 셀프 수사 철회 관철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

주요 내용

• 국정자원 화재 원인 최초로 밝혀

- 화재 당일 배터리 이설 작업자 중 국정자원 미계약 업체 직원의 불법 출입 및 비숙련자인 해당 직원 실수로 화재 발생 최초 주장 (10.14 행안부 국감)
→ 경찰 수사 통해 사실로 확인

•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주체 변경

- 양평경찰서장 출신 특검 수사팀의 '강압수사'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를 양평경찰서가 맡으며 '셀프 수사' 논란 처음 문제 제기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수사주체 변경 검토' 답변 받아냄(10.17 경찰청 국감)
→ 행안부 종합감사(10.30) 통해 수사 주체 '서울 종로서' 변경 확인

• 민주당 하명으로 행안부의 국민의힘 광역단체 '표적감사' 밝혀내

-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 '청부'로 행안부가 부산시와 일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에 대해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이유로 진상 조사를 진행
- 부산시는 12·3 당일 행안부의 청사 폐쇄와 출입통제 지침을 정상적으로 이행, 행안부의 진상 조사가 '표적감사'였음을 확인(10.13 행안부 국감)
※ [채널A 단독] "행안부 지시 받고 청사 폐쇄"...부산시 녹취 공개

• 지방재정 악화, 지방자치 역행, 정당 차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부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25%, 경기도 10% 부담하며 지역·정당 차별 지적
- 이재명 대통령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강원(김진태), 부산(박형준) 발언권 박탈, 대전(이장우)초청 조차 안하며 정당차별 지적

헌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지역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의원

주요 내용

• 졸속·위헌적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 헌 정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검찰청의 존폐에 직결되는 정부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단순 행정부 조직 조정이 아닌 헌법상 기관의 위헌적 폐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위헌성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사전 법리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

• 경찰의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지적

-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주요 수사 사건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현행 체계는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
-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제기

-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주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 군 공항 이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안보시설 이전임.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정부의 소비쿠폰 강제매칭에 따른, 지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제기

- 소비쿠폰 사업의 지자체 강제매칭 방식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함. 재난 안전·필수복지 등 핵심 사업 재원 배분 여력이 축소되는 위험 발생
- 단기 선심성 소비 진작보다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된 재난대응·예방에 대한 재정의 우선 배분을 요구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실체 없이 외친 'K-컬처 300조 시대', 비전 실현 역량·계획 모두 부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주요 내용

- 실체·대책 없는 'K-컬처 300조원 시대' 허구 지적**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의 불분명한 개념과 K-컬처의 범위, 300조원 추산 근거 등 지적
 -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내 공식 계획서·추진 로드맵 부재 사실 밝혀냄
 - 정책을 책임져야 할 문체부가 실권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신뢰도 저하 비판
- 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 거론 논란 제기**
 - 정치적 친분 인사 우려 제기하며, 신임 사장에 경험과 전문성 갖춘 인물 임명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사 검증 촉구
-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 '풍수' 근거로 삼청동 안가 권유 사실 밝혀**
 - 유홍준 관장이 '청와대 관저 터 음습' 운운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삼청동 안가 이용을 권유한 사실 밝힘
- 무비자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관리 부실 비판**
 -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과거 무단이탈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받은 업체 34곳이 포함된 사실 밝힘.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지적
 -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기준 재검토, 이탈 방지 대책과 사후 관리 절차 보완 강조
- 지역별 수요 인프라 검토 없이 추진된 할인쿠폰 사업 졸속 편성 지적**
 - 추경 통해 49억원 투입된 '미술전시 할인쿠폰'의 실제 사용률이 2.4%에 그친 사실 밝힘
 - 할인쿠폰 사용 가능 시설조차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함을 밝힘. 문화예술 인프라와 수요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 예산 편성 문제 지적

비선실세 및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 지적, 행정·회계 붕괴 민낯 밝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주요 내용

- 비선실세 및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 지적, 행정·회계 붕괴 민낯 밝혀내**
 -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우중, 이동연 등 친여 중심 인사라인 문제 집중 추궁, 보은성 인사와 직무능력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 폐해 지적
 - 문체부 장관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인사는 부적절" 답변 받아
 -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과정에서 행정절차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등 불법·편법 사례 지적을 통해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 요구
- 국가데이터센터 화재 허위보고 폭로, 장관 사과와 후속조치 받아내**
 - 문체부, 중대본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 보고 적발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난관리 인식 및 정부의 대응체계 붕괴 지적, 문체부 장관에게 사과 받아
- 국민 혈세로 북한 찬양도서 지원 및 공영채널의 친북 콘텐츠 게재 지적**
 - 북한 김정은 찬양도서를 해외번역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문학번역원에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 지적
 - 연합뉴스 유튜브 'KOREA NOW' 채널에 '김정은' 콘텐츠 최다 게재 지적
- 영화·웹툰·뮤지컬 등 대표 콘텐츠 불공정 관행 지적 및 대안 제시**
 - 참고인 김덕영 감독을 통해 영진위 '건국전쟁2' 독립영화 불인정 논란에 대한 정치편향적 심사 지적, 독립영화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주문
 - 웹툰 분야, 플랫폼 독점 구조로 인한 작가 수익배분 불공정 사례 지적
 - 뮤지컬 분야,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 강조 및 지역 간 문화인프라 격차 해소 촉구
- 축구를 비롯한 체육계 적폐 청산과 청소년 e스포츠 육성 지원**
 - 대한축구협회 심판 오심 문제와 솜방망이 징계 집중 지적, 전국의 수많은 축구팬들로부터 압도적 지지 이끌어
 - e스포츠의 2026년 전국소년체전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 공개로 청소년 세대의 스포츠 다양화에 기여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는 정책대안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

주요 내용

• 인기 절정 한국알림 1등 공신 ‘뫓즈’ 중국 짝퉁에 몸살 앓아

- 우리 전통문화를 활용한 ‘뫓즈(뮤지엄+굿즈)’상품 2022년 브랜드 개편 후 올해 연매출 300억원 돌파하며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으나, 중국쇼핑몰에서 불법카피한 ‘짝퉁 뫓즈’ 판매가 증가하며 제작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문화로 둔갑하는 문화공정이 이뤄지고 있음
- 일례로 우리나라 ‘단청’ 문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문체부 공식 뫓즈인 ‘단청키보드’는 중국쇼핑몰에서 ‘중국 고대 건축’이라는 설명과 함께 헐값에 팔리고 있음
- 뫓즈 제작 및 저작권 보호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모니터링, 피해방지 실적 전무를 지적하고 대책 및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가치 제고 방안을 당부

• “일본 무조건 항복” 광복 알린 첫 한국어 방송 주인공 찾아 서훈 전달

- 1945년 8월 15일, 일왕 항복 발표 전 ‘미국의 소리(VOA)’에서 광복 알린 첫 한국어 방송 송출. 해당 목소리 주인공은 미주 독립운동가 ‘이진목’ 선생임을 밝혀냄
- 이진목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으로 2020년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에 추서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서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의원실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후손을 찾아 서훈을 전달함. 문체부 및 역사박물관에 정부부처간 역사자료 연구 공유 및 보존 협력 당부

• 나랏돈을 눈먼돈으로 취급, 부정·특혜남발 감감이 수의계약

- 한국관광공사가 연간 800억원 규모 막대한 수의계약 진행하며 특정 업체 감감이 특혜, 전반적 관리 해태 문제 지적
- 한국관광공사, 지난 3년간 수의계약 필수 첨부서류인 ‘현장실사결과보고서’의 95%(906건, 933억원)를 출장기록 없이 허위 조작으로 작성한 것을 밝혀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
- 관광공사 출신자 일감 몰아주기, 허위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특혜, 쪼개기계약, 총량제 위반 등 한국관광공사의 부정 수의계약 사례를 밝혀내고 문체부의 감사 진행 및 수사의뢰 요구

구호만 요란한 무계획·복불,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K-컬처 300조·K-관광 3,000만’ 복불 정책과 허상뿐

-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K-관광 3,000만’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정책을 재포장한 구호에 불과함
- 전 정부 정책의 포장 높음보다 실질성과 산업기반 강화가 시급

• 세계유산위원회 유치했지만 예산은 0원… 국감 지적 뒤에야 움직인 뒷북행정

-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가 확정됐지만, 유산청은 예산 편성 없이 3개월째 손 놓은 상태
- 내년 1월 유네스코 실사단 방문을 두 달 앞두고도 예산은 ‘0원’, 실무비용 5억 2천만 원 전액을 부산시가 부담 중

• 프로야구 티켓이 999만 원? ‘암표 단속 손 놓은 정부’

-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까지 폭등하며 국민스포츠 프로야구가 ‘암표 천국’으로 전락
- 문체부는 “여력이 없다,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감독기관의 책임을 방기

• 2036 전북올림픽, 계획만 있고 준비는 없다

-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연장·계획서 미비·IOC 기준 미이해로 올림픽 유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음
- IOC는 ‘2036 연도 표기 자체’를 요청했음에도, 체육회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 신뢰 훼손 우려가 큼

• 엔터사 도덕적 해이, K팝 산업의 전반을 흔든다

- 글로벌 한류의 중심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음.
- 문체부는 기업 자율을 이유로 방관하기보다, 책임 있는 감독과 윤리 기준 제시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함

무용계 입시·병역비리 카르텔-구조적 폐단 공론화 및 이재명 정부 극찬한 ‘반값여행’의 실제 검증 등 정책현안 집중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

주요 내용

- 무용계 뿌리깊은 입시카르텔 폐단 집중질타...문체부 “감사착수, 엄정관리”**
 - 지난 6월, 브니엘 예고생 3명의 비극적 선택 이면에 고착화된 ‘무용계 폐쇄적 카르텔구조’에 대해 14일(문체부), 20일(한예중), 29일(종합감사) 집중조명
 - ▲대한무용협회 소속 한예중 무용원장·교수진의 겸직금지 위반 및 무단강습
 - ▲입시비리 전통예고 학부모 제보 수집...“관행화된 접대, 청탁 행태” 질타
 - ▲한예중 교수들이 개인무용단에 학생들 출연시키는 등 개인실적-사익 동원
 - ▲특정단체 중심 문예기금 편중지원 및 “무용계 안전관리 의무 위반, 보험 미가입” 등 기득권 카르텔 구조화에 따른 문제점, 능력감사 지적
 - 문체부 “입시비리의혹 엄정관리”, “한예중 겸직 사실관계 확인, 감사할것”
- 예술요원 제도 관련, 병역특례 창구로 악용된 ‘무니만 국제대회’ 질타**
 - 대체복무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무니만 국제대회’를 통해 사실상 병역면제 수준의 특혜 창구로 악용되는 실태 지적.(‘국제대회’ 명칭과 달리, 한국인 참가비중이 84%에 이르는 등)
 - 복무과정에서도 허위 인증사진 제출, 부실복무, 허술한 관리실태 질타. 책임을 다하는 청년·예술인 자긍심에 상처주는 불공정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 문체부장관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대폭축소 및 엄격한 복무관리체계 전환”
- 이재명 대통령 극찬, 전국확산 앞둔 ‘강진반값여행’, 실체는 성과 부풀린 강동정책**
 - 관광객 유도 성과? 실상은 인근 주민 반값외식·쇼핑...성과왜곡 질타
 - 올해 예산 20억(24년比) 늘었는데, 관광객수는 15%(25만명) 축소
 - 별도 운영비 10억까지 지역화폐로 집행...수십억 혈세 허공 낭비
- 현행 콘텐츠진흥원의 단기·분절적 콘텐츠 공모사업의 한계 지적 및 출연금 구조 전환 통한 성과환류-재투자형 지원체계 당부 → 문체부 “긍정 검토”**
- 국내 대표 박물관·미술관 관련, 외부기획사 대관 해외특별전만 흥행하는 실태 지적 및 ‘대관 전시관’ 오명 탈피 위한 자체기획역량 강화 촉구**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체육행정·안전한 공연장·공정한 예술 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주요 내용

- 경기용 실탄 유출과 정부 은폐 의혹 제기, 체육행정 투명성 제고**
 - 경기용 실탄의 불법 유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함
 - 특히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탄 약 3만발의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는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함
 - 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합동 감사체계 구축 등 실탄 관리 체계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 조치를 이행함
- 공연장 방화막 안전기준 강화와 설치 의무 확대 논의 주도**
 -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가 1천석 이상 국공립 시설에 한정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및 중형형 국공립 공연장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함
 - 문체부가 27억원 들여 연구한 ‘내압성능 450Pa’ 기준이 설치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짚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 보안을 촉구함
 - 이에 문체부는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서의 설치 의무 확대와 성능 기준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공연장 화재 안전관리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이룸
- 안무가 저작권 보호 강화로 창작자 권리 제도화 기반 마련**
 - 공연 현장에서 안무가의 창작물이 정당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저작권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안무창작물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안무가의 저작권이 공연기획자나 단체에 종속되는 불공정 관행을 짚고, 독립된 창작자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촉구함
 -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안무가의 저작권 보호와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안무가 권리보호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민생·현장·정책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주요 내용

• 민생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민생국감’

- 한미관세협상, CPTPP 가입 등 농어업 분야 개방 관련 대책 촉구
-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물가상승, 쌀값 고공행진 관련 대책 촉구
- 재해보험률 개선, 농기계 보증기간 연장 및 안전강화 방안 제시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최소 지급비율 인상 필요성
- 수중전환 등 소나무재선충병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 촉구
- 숲가꾸기 사업 관련 구조적 유착 근절, 책임 강화 방안 촉구
- 갯벌, 갯바위 인명사고 및 해상사고에 대응체계 구축 촉구
- 해상 밀입국, 해상마약 대처 인력, 장비 확대 등 대응방안책 강조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장국감’

- 농어촌 기본소득, 실패사례 우려 및 지방부담 최소화 필요성
- 기초지자체 부담 경감할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 관련 규칙 개정 필요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국비지원 확대 강조
- 과수화상병, 지역특성 고려한 맞춤형 방제 전략 강구 촉구
- 철저한 수질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수리시설 현대화 촉구
- 현실성 없는 국가정원 지정 기준 적극적 완화와 기회 필요성 강조
- 해수부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해양산업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필요
- 내수면 어업 및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

•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도약계획 마련 촉구
- 판로 확보 등 장기적 K푸드, 농림수산물 수출 전략 확대 강조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및 실용화율 향상 강조
- 온실가스 탄소저감 목표 위한 국산 목재자급률 높일 실행방안 제시
- 북극항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만들어 체계적 접근 필요성 강조
- 어구보증금제 실효성 높일 방안 및 해양쓰레기 대응책 촉구
-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 비례대응할 확실한 조치 촉구
- 국가필수선박 운영 및 극지연구 전문인력 보충 필요성 강조
- 항만간 친환경 연료 공급망 위한 협력 및 중소중견기업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민생 정책 질의!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의 3無정책! 무능·무지·무책임한 정책 비판

- 외교부 장관의 “쌀 수입 쿼터 확대가 가능하다”는 무능한 발언을 비판하고, ‘관세 협상’에 대한 마찰이 쌀, 소고기 뿐만 아니라 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 ‘산림청장 인사’에 대한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을 셀프추천한 산림청장을 비판
-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잊은 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매각한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
- 이재명 정부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자 송환쇼’에 대해 비판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과도한 이전비용을 지적하고, 과거 대통령실 이전을 혈세낭비라고 하던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

• 활기 넘치는 농촌, 안전한 바다! 민생 정책 제안

- ‘소농직불금’의 농지면적 기준을 약간만 초과하여도 ‘면적직불금’으로 전환되어 지원금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
- 고온다습한 날씨로 벼 ‘깨씨무늬병’이 자주 발생해서 품종개량이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
- 지역농협별로 ‘공공형계절근로제’의 인력 배정이나 가동률 편차가 심하므로 지역 농협 서로간의 유휴 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
- 농민의 수요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고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 매년 끊이지 않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이나 농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
- 붕괴되고 있는 ‘화훼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중 드론을 활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구
- ‘해양경찰청 함정 스피커’에 대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고 향후 조치계획 보고를 요구

정부의 무책임·현장외면 정책으로 농어업인 생존 기반 위협 농어업·산림 분야 전방위 부실행정 질타 및 실질적 개선 방안 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

주요 내용

• 정부의 무능과 직무태만이 초래한 농업위기와 식량주권 훼손 지적

- 이재명 대통령만 생색내고 지방은 거덜나는 농어민기본소득 강력 비판 →
▲연령·소득·직업 불문한 포퓰리즘 정책 ▲지역 간 역차별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부담 ▲예비타당성, 적정성 검토 등 절차 무시된 전형적인 지방선거용 돈 풀기 문제 지적
- 외교부 장관의 ‘수입쌀 시장 개방 가능성’ 발언에도 농림부 무대응, 식량주권 방기 지적 →
“추가개방 절대 불가” 입장 명확히 할 것 촉구
- 정부의 쌀 수요 예측 실패로 쌀값 올랐지만 농업인은 빈손,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 지적 →
생산자 중심의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요청
- 정부와 민주당, 농업계 막대한 피해 가져올 FTA 추진 강력 질타 →
유일한 대책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즉각적 연장 요구
- 민주당 졸속입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농가 31만호에 달하나, 정부의 예방·교육 예산은 ‘0단계’ 수준 →
처벌 중심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 어업기반 회복과 해양안전 위한 구조 개혁 요구

- 남강댐 방류로 막대한 해양쓰레기·양식장 피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실태조사조차 전무 → 부처 합동 조사 및 보상체계 마련 촉구
- 해상풍력 외국자본 60% 참여, 어업 활동구역 90% 중첩 실태 지적 → ‘속도보다 신뢰’ 원칙 강조, 주민 수용성 확보 주문
- 수협중앙회 비어업인 대출 연체금액 어업인에 비해 18배 → 어업인 위한 공익금융 기능 상실 질타
- 중국 밀입국선 17시간 항해에도 해경 탐지 실패 → 국가 해상경계망 붕괴 지적 및 빈틈없는 경계 계획 마련 촉구
- 순직 해경 사건 보고 후 2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조치 없었던 대통령실·총리실 → 국가 재난 대응체계 무력화 수준의 행정 공백 질타

•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개입과 대북사업 예산 낭비, 산림행정 신뢰 추락 질타

- 정부, 인사개입·이해충돌 논란 인사를 산림청장으로 임명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관된 산림청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힘을 실은 ‘셀프 의견서’를 제안·작성·심의한 당사자로, 정부의 인사 검증 공정성 및 공직 윤리 훼손 비판
- 북한에 보내지도 못할 대북묘목사업에 국민혈세 414억 원 낭비 질타 → 실효성 없는 대북사업보다 국내 경제림 조성 예산 확대 촉구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국정 균열… 무능과 실정, 인사 참사 지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무능과 실정 강력 질타

- (한미관세협상) ‘구두’ 합의에 불과한 졸속 협상으로 농민 우려 가중 강조
- (농어촌기본소득)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인사가 시범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진으로 선정된 데 따른 공정성·편향성 의혹 제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해양수산부 1등급 핵심시스템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 복구 후에도 포털 연동 미흡으로 11일간 먹통된 사실 지적
- (故이재석 경사 순직) ‘2인 1조 출동’, ‘휴게시간 부여’ 규정 위반, 허위 근무일지 작성, ‘CCTV 설치’ 법령 위반 등 다수의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부동산 정책 실패) 6·27/10·15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은 졸속 정책임을 비판, 정부여당의 실언과 대출 규제에 따른 문제점 부각

•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지적

- (전문성 없는 산림청장 셀프 추천) 김인호 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스스로를 추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와의 친분 드러낸 사실 공론화
- (부적절 청탁으로 경질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2달간 광주·전남 등지 돌며 일선 수협 조합장 등을 11차례 만난 사실 공개, 현장방문 명분 아래 자기 정치 의혹 제기

• 제도 개선 및 정책 질의

- (농정 현안 국민 인식 설문조사) ▲한미관세협상 50.8%가 “부정적” 인식 ▲농촌기본소득 35%가 “현금 지원보다 인프라 개선” 선호 *정책자료집 발간
- (중국산으로 뒤덮인 농촌) 중국인 소유 농지 156ha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중국산 드론 177억 원 용자 지원 및 농어촌공사 태양광시설의 67%가 중국산임을 지적하고 국산화 대책 마련 촉구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늘어나는 기상재해에도 불구하고 가입률 5%대에 불과한 점을 지적, 농가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 (산림청 S-64헬기) 8,563만달러 들여 도입하고도 야간 비행 가능한 조종사 없어 야간 산불진화 ‘무용지물’ 지적

이재명 정부 실정 지적하고 주권 수호와 농어촌 발전 위한 대안 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농업 대전환 위한 '대안국감'

- (농촌인력 확보) 농가 호응 98%에 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농정당국의 지원확대 촉구와, 제도개선 위한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안 발의
- (농업의 규모화) 소규모 및 파편화된 국내 농업의 규모화 위한 공동영농 사업의 미진한 정부 추진계획을 지적하고 농업경영인 육성 시스템 마련 촉구
- (농업의 과학화) 발농업기계화 제고를 위한 농기계 수리전문가 교육체계 확충과 북한 농작물 분석을 우선시하는 농업위성 이용계획의 개선 필요성 제기

• 농업발전 백년대계 위한 '정책국감'

- (공정한 농정지원) 45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셀프 면죄부'로 얼룩진 실태를 국회 차원에서 첫 제기하고, 샤인머스켓 공급가격폭락에 대한 유통체계 개편 요구
- (상식적 정책집행) 감사원 지적에도 물 미부족지역에 1,181억 재원투자하는 무책임한 사업관리 실태와 강릉 가뭄사태에 대한 농정당국의 미온적 대응 질타
- (농업인 보호대책) 농업인 7.6%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버 보안사고 경위를 집중점검. 5년간 1,100억원의 농협 착오송금 피해액이 방치된 점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공정한 행정과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환경·안전국감'

- (공정한 인사와 행정) 김인호청장과 김현지실장과의 장기간 유착 관계를 비롯한 백현동 환경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과 보은성 인사 의혹 제기
- (재선총병 방제 실패와 제도개선)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절반 이상이 경북에 집중. 지자체별 분산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중 방제체계전환·항공방제 재도입 등 '국가책임형 방제체계' 구축 촉구

• 정부 실정 지적하고 주권 수호, 수산업 발전 강조한 '국민 우선 국감'

- (부실한 서해주권 수호와 북극항로 과대 홍보 지적 등) 현 정권 출범후 중국의 서해 무단구조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전무한 것과 국회 제출자료에 중국의 방해 행위 누락 밝혀 개선 유도, 북극항로 예산 5,500 억 추가 반영으로 자료 제출했으나 대부분 전 정부에서 해오던 계속 사업 증명,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여당의 율복 번복 의혹 제기에 청와대 중심 은폐 강조
- (김산업 한계 해소와 참다랑어 폐기 방지, 수산자원 회복) 김 산업의 불법 외국인 노동 해소를 위한 비자협약 약속, 참다랑어 폐기 방지 위한 보관시설 추진, 수산자원 회복 사업 확대 및 다양화 등 수산업 발전 강조

「2025 국정감사 백서」제작 관련 조경태 의원 국감질의 주제 모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

주요 내용

•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과제

- 이전 계획의 구체화·정착 지원 등 세밀한 준비로 '해양수도 부산' 실현해야

• 북극항로 개척, 경제성, 외교 리스크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건 위험한 도박

- 부산항 물동량 중 유럽행 5% 불과... 5,500억 투입 전에 실효성부터 따져야

•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방치... 해양주권 침해에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 비례 대응 약속했던 정부, 5년째 '연구용역만' 중국의 서해 공정 사실상 방조

• 수협 상호 금융 부실 2.8조 원... 어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 무너지고 있다

- 연체율 8.1%, 업권 최악 수준... 외형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가 시급

• 2.8조 원 투입하는 부산항 신항 개발, 하드웨어만 키우는 '속 빈 투자' 안돼

- 하역 효율성 3년째 제자리... 운영사 난립·통합 지연이 생산성 저하 불러

• 김 수출 영세 중소기업의 눈물 외면하는 오리온수협 설립

- 대기업 오리온과 합작, 수협의 김 물량·정보량을 독점적 수혜·공익 훼손

• 말 없는 영천경마장, 마사회의 돈독심이 동물학대와 부산·경남 다 죽인다

- 부산 경주마 매주 250km 강제 수송 계획 비판

• 돈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 농협중앙회는 강 건너 불구경

- 3회 선거간 55억 재선거 비용 발생... '깜깜이 통계'로 관리조차 안 해

• 2,200억 투입 '아시아 최대 수목원', 방문객은 세종의 3분의 1 '망신'

- 미래세대 외면, '지역' 홍보에 갇힌 '국립' 기관 질타

• 60대 75%... 1천억 예산 산불진화대, '실버 일자리 전략'

- 15kg 장비 멘 60대, 험준한 산악 초기진화 불가능... 청년 유입 시급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국감,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책임있는 변화 주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폭등, 농민은 소득제자리... 정부 대책 있나

- 최근 10년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집중호우와의 상관성이 높은 품목의 피해가 반복되어 농산물 가격은 급등했음에도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 농산물 가격 상승분은 유통단계에 이익이 집중되며 농민은 재파종·복구 비용 증가로 적자만 누적되고 재해보험 가입률도 절반 수준에 그치며 SSP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서 일부 농작물의 재배지 이동과 작목 소멸이 가시화되어도 정부의 종합적인 권역별 작목 전환 전략은 부재
- 품종 개발 차원이 아닌 권역별 대체작물 전략, 장기 재배지 관리, 농가 전환 지원 대책 등을 갖출 것을 주문

• (해양수산부) 언제까지 말로만 해수부 기능 강화할 것인가

-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실효성 확보에는 해수부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누락
-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식 인사들이 조선기자재·조선 기능의 해수부 이관을 공개 약속했으나 장관은 비공약 사항이라며 표명하고 해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차관 신설·조선해양플랜트 이관을 약속했음에도 취임 3개월까지 공식 협의한 내용이 없는 것을 지적
-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해양수도 부산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정책부처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 방류 이전 수준으로 축소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확대했던 예산을 정권교체 후 방류 이전 수준으로 축소 편성한 것이 정치 선동이 초래한 국가 재정 왜곡 사례로 대두되고 있음
- 후쿠시마 관련 예산에서 불용액이 해수부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고 오염수 방류 이후 2년간 바닷물·수산물·천일염 검사에서 단 한 건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음에도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강조
- 당시 괴담 정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해수부가 재정 낭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 유럽선 '발암물질' 금지 농약, 우리 밥상과 아이들 운동장엔 '평평'

- 농진청의 모순된 규제, 국민 안전 위협...클로로탈로닐 사용 실태 지적

• 길고양이 증성화 사업에 연간 237억 쓰고도... 동물은 수술대서 고통

- 농식품부, 실효성 없는 목표, 왜곡된 비용구조, 감독 부재, 동물학대 지적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난항 문제 강력 질타 및 산업·에너지·중소기업 정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주요 내용

• 한전·한수원 UAE 원전 수출 거버넌스 관련

• 자회사(한수원)와 모회사(한전) 간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문제를 두고 집안싸움에 소송비만 37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주문

• 한미 무역 협상 지연 관련

• 이재명 정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국내 주요 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촉구 및 관세협상 난항 문제 질타

• 대한석탄공사 합리적 정리방안 마련 필요

• 지난 6월 30일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며 마무리함에 따라, 폐광 이후 ▲대체 산업 조속 추진 ▲부채 정리 ▲자산 매각 등 관련 사안 점검

• 자영업 포화 및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문제 지적

• 시장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계속 창업을 유도해 자영업 시장이 방만해지는 현상 지적,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 생태계 개선 촉구
•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매년 증가, 관리비 실효성 점검

• 국내 태양광 셀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가스안전 관리체계 보완 촉구

•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매몰된 사이 태양광 셀 산업이 중국 시장에 잠식(한국 시장 점유율 95%)된 상태로,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주문
•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LPG가스 점화 행위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와 안전지침 부재, 촘촘한 가스 안전관리 체계 마련 촉구

무능과 졸속으로 얼룩진 이재명 정부 강력 규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

주요 내용

• 개악「정부조직법」 개정 강력 규탄

• 에너지 이관을 주무부처도 패싱한 대통령실 단독 결정 비판
•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후속 입법 미비한 정부조직법 처리 졸속 강행 규탄

• 산업현실 역행하는 탈원전 시즈2 강력 비판

• 체코 원전 수출 원천기술 사용료 문제 명확하게 밝혀
• ‘원전 50년 족쇄’, ‘굴욕 계약’ 악의적 왜곡 강력 비판
•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기준 전기본 무력화 하려는 이재명 정부 강력 비판

• 정부의 무능한 통상 대응 강력 비판

• 관세협상 지연으로 하루 269억원 피해, 조속한 협상 마무리 촉구!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대출 보증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피해 전가

• 위인실관 인태연 중기부 2차관 내정설 강력 비판!

• 문재인 정부 실패한 자영업 비서관, 김어준 처남 위한 차관 신설 문제

• 소상공인 피해 외면한 중기부 총체적 부실 강력 비판

•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피해 파악 및 구체적 대안 마련 촉구!
• 골목상권 잠식한 유통공룡 다이소, 실태 파악 촉구!
• 몇십 분씩 줄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문제, 시스템 개선 촉구!
• 피해 심각도, 공실률 등을 종합 고려한 선별적 폐업 지원체계 마련 촉구!

• 무임승차 걱정하다 석유화학산업 전체 침몰 시킬 위기 강력 비판!

• 무능 정부 손 놓아선 안돼, 석유화학 특별법 대안 제시

거꾸로 가는 산업계 정책을 짚어 대안 제시, 공공기관 혁신 주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주요 내용

• 비과학적인 탄소 배출 정책에 산업계 부담 가중, 발전부문 NDC 의견 적극 개진 주문

- 발전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75.2%의 탄소 감축,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50%까지 상향이라는 감당 불가한 규제를 받게 됨
-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AI반도체 전쟁에 나선 첨단제조업 기업들과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석유화학·철강업계에 관세 이상의 충격을 주게 될 것을 경고함
- 이에 발전부문 NDC와 관련, 산업부의 적극적 의견피력을 주문함

• 보톡스 균주 국가핵심기술 유지 불필요, 심의위원회 카르텔 혁파

- 보톡스 균주와 독소는 6개 부처 7개의 법령에 따라 통제 중임. 산업통상부 소관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수출 및 공장 증설, 해외 연구진과의 R&D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이를 심의하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5차례 연임 중이며,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위원회 회의록 제출 거부하는 등 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온 점을 지적함
- 이에 보톡스 균주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함

• 공영홈쇼핑 '꿈수 민영화' 저지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 제고

- 공영홈쇼핑은 주무부처인 중기부 모르게 신사업 자원 마련을 핑계로 자사주 취득과 공공기관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같은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함
- 이에 협력사와의 유착, 하도급 업체에 대한 폭언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 '내 편 지키기식' 징계 행태를 밝히고, 공공기관에 걸맞는 혁신을 주문함

우리 경제 망치는 무능·무신뢰 이재명 정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주요 내용

• 대미 관세 협상, 신뢰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

- 7월말 관세 협상 타결 발표 당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 직접 투자 비율은 5% 미만일 것이라고 했던 정부, 실제로는 절반 이상 직접 투자 결론
- 정상회담에도 합의문 나오지 않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 했던 대통령실, 며칠 만에 조지아 구금 사태로 국민들 충격, 상처
- 계속해서 바뀌는 메시지, 흔들리는 한-미 관계 등 이재명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력에 흔들리는 신뢰, 경제 문제 질타

• 재생에너지 산업, 중국산 판치는데, 무작정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

- 文정부, 중국산 잠식에도 태양광 보급 늘려 우리 산업은 후퇴
- 이재명 정권은 더욱 더 가속화 예고, 해상풍력 산업도 중국산이 잠식
- '킬 스위치' 논란 있었던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중국산이 국산으로 위장하는 택갈이 문제 지적도 있었던 바, 산업부가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질타에 장관도 시정하겠다 답변

• 온누리상품권 소진 잘 안된다고 가짜뉴스 퍼뜨린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온누리상품권 소진 잘 안되니 지역화폐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
- 실제로는 회수율(소진율) 100% 가까이 달성 중인 점 밝혀내며 대통령이 자신의 코드사업 밀기 위해 가짜뉴스 퍼뜨린 점 지적
- 전통시장 위한 온누리상품권 적정수준 지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 필요

“감시자의 눈으로, 국민의 입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정책 실행 정조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함
- 또한, 산업·통상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경력과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현업 부서 원칙’만을 적용해 환경부로 이관한 졸속 행정을 비판함

• ‘비자 철저 관리’ 외친 산업부 장관, 정작 본인은 ESTA 무단 사용

-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한 한국 국민들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작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공무 수행을 위한 미국 출장 시 동일한 ESTA를 사용해 입국한 사실을 지적함
-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제규범과 외교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의식이 결여된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함

• 청년 창업 지원의 정책적 한계점 지적

-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함
- 2016년부터 1천400억원이 투입됐지만 43곳 중 8곳이 폐장, 점포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중기부의 청년물 사업과 관련, “청년몰이 아니라 청년 무덤”이라며 보여주거식 정책의 폐해를 지적함

• 영세 사업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 지적

- 현행 소상공인 기준이 직원 수만으로 판정돼 매출 수백억 원의 기업도 혜택을 받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정부의 탈원전·통상·관세 등 산업·통상·중기 정책의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낼 실질적 대안을 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

주요 내용

• 관세·탈원전·통상정책 전반의 무능과 혼선 지적

- (산업부) 한미 관세협상 지연으로 산업 피해가 확산, 정부의 의도적 협상 지연 지적
- (산업부) 한중FTA 10년간 50조 흑자 → 23조 적자 전환과 사후약방문식 대응 지적
- (산업부) 태양광 중심 정책으로 43명 사망·1,071억 원 전력 낭비 등 탈원전 부작용에도 정부가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

• 기술보호 부실·정책심의 무력화·플랫폼 갑질 방조 지적

- (중기부) 기술탈취 제재 수단 부재로 솜방망이 대응에 그쳐,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주문
- (중기부) 쿠팡의 ‘종합갑질세트’로 입점업체 피해가 누적되는 불공정 거래 구조 지적
- (중기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50억 보증 등 정부의 졸속행정과 정책관리 부실 지적
- (중기부) 정책심의회가 대리참석과 의견개진이 미비한 ‘거수기’ 기구로 전략함을 지적

• 안전·보안 사각지대 방치, 국민 신뢰 저하 우려

- (강원랜드) 제재 부실로 카지노 내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확산, 청소년 유해 노출 방치 지적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비 소형 LPG저장탱크 6~7만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비축정보가 부실 관리로 최근까지 대외에 노출 지적

• 실적 부풀리기·외유성 출장·관리 부실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실제 투자 이행률 20% 수준에도 실적 부풀리기 행정 지적
- (한국벤처투자) 해외 출장 중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 일정으로 해외출장 실태 지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6만 건 기술이 등록된 국가기술은행의 전담 인력 부재와 관리 부실 지적

• 정책자금·운영 전반의 부실과 공영홈쇼핑 운영 목적 훼손 문제

- (중진공) 연대보증 폐지 후 법인 파산 면책으로 부실액 5,792억·회수율 9.81% 추락, 책임 공백 지적
- (소진공) 정책자금 부실 5년 새 16배(636억→1조) 급증, 채무조정비율 64%로 상환불능 심화·관리체계 부실 지적
-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판로지원 목적 훼손, 매출보장 품목 편중·판매장려금 도입 검토 등 공공성 약화 지적

조선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담고,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의원

주요 내용

• 조선산업, 협상 때는 효자 협상 후에는 모르쇠

- 조선산업이 한미협상의 핵심역할을 했지만,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조선업이 밀집된 거제, 경남 등은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나
- 중국·일본과 같은 경쟁국은 국가가 나서서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은 미비
- 최근 중국이 마스가(MASGA)프로젝트 주축인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

• 미국만 살릴거냐? 조선기자재 국산화 더 늦어서는 안돼

- 화물창 국산화 지연으로 30년간 지급된 로열티만 약 7조
- LNG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독립을 이루어내 신규인력 창출과 경쟁력 확보해야
- 중소기업자재 업체들의 RG보증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기술경쟁력 확보해야

• 한번 실패가 사업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돼

- 동해가스전 시추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 14번째 시도 끝에 발견
- 한 번의 실패로 전체 사업을 '대국민 사기'로 몰아가서는 안돼

•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공공기관 내의 제2 오오안나 사태 발생을 지적

- 배달플랫폼 높은 수수료가 이종가격제의 핵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필요
-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안일한 대처, 정규직, 프리랜서 차별 없이 기관의 보호 받아야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정책 질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

주요 내용

• 한미 관세협상 조속 타결 및 대미 수출기업 지원방안 모색

- 최악의 협상지연으로 우리기업 피해 속출 상황을 질타했습니다.
- 철강·자동차·알루미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대미지원금 2천억에 대한 사실관계를 장관답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시즌2 정책 질타 및 원전 필요성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원전 백지화 입장을 질타했습니다.
- 탈원전 정책의 전기요금 급등과 한전 적자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 탄소중립과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속성없는 지원정책 질타 및 지방기업 적극적 지원 요구

- 정부의 단기성 지원정책을 지적하고 지원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 소상공인 역대 최대 폐업률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수도권 기업 지원 집중 지적 및 지방기업 지원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산하기관의 무책임한 운영 및 관리부실 질타 및 재발방지 요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횡령문제를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 창업진흥원의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태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 신보중앙회의 늘어나는 대위변제금 문제의 해법모색을 요구했습니다.

• 우리기업 지적재산권 피해상황 지적 및 적극 보호 요구

- K-POP콘서트 짝퉁 굿즈 문제 지적 및 대책마련을 강조했습니다.
- 중소기업 상표 해외 무단선점 급증을 질타하고 적극보호를 요구했습니다.
- 지식재산처의 효과없는 대응 지적,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국민의 생명과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지역의료 강화

- 부산의료원 재정지원 및 인력확충을 통한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 마련
- 분만취약지 산모-분만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 인건비 인상 추진
- 중국 무비자 입국에 따른 결핵 유입 대비 사전예방 중심 방역 강화
- 부산혈액원 신축 및 전국 노후 혈액원 인프라 개선 추진
- 코로나19 피해보상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피해자 참여형 보상체계 마련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외국인 부정수급 근절

- 외국인 부정수급 억제를 위한 상호주의 원칙 도입 및 자격관리 강화
- 출입국·체류·건보 자격 연동 기반 실시간 자격검증 시스템 구축
-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제 도입 및 국가별 위험등급제 검토
- 외국인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역차별 해소 방안 마련

• 아동·가족 중심의 생명존중 복지

-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상담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
- 공적입양체계 인력·예산 보완 및 입양기록관 건립 추진
- 가정위탁 활성화 및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권 이행체계 강화
- 입양아동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현장 중심의 복지기반 강화

- 사회복지시설·노인일자리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지역 격차 완화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전담인력 확충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돌봄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사고예방형 관리체계 마련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 국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과 사회안전

- 위생등급제 전환에 따른 '모범업소' 연락처 지원 및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 편의점 소비기한 위반 억제를 위한 타임바코드·QR 제도 실효성 강화
- 허브오일 등 생활제품 성분·표시 기준 강화 및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
- 대통령실 복지비서관 겸직 논란 관련 공직윤리 확립 및 감사중립성 확보

• 미래세대가 동의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필요

-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화 조치 도입 및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전문가 중심 운용체계 구축
-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 연금개혁으로 촉발된 프랑스 경제 위기 반면교사

모두가 함께하는 보건복지정책,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주요 내용

• 초고령사회, 돌봄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복지체계'로

- 치매머니 논란, 치매노인 재산관리 위해 복지전문가 신규 발굴 늘려야
-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관리·감독 부실... 등급평가 및 설치기준 강화해야
-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지원금 지급, 평가 체계 전면 개편 필요

• 복지에서 인권으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장애인 정책 개선 제시

- 국내 복지시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자립지원 공백 없애야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 지원 강화 촉구
-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전수조사 및 배·보상 추진 필요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정신장애 낙인 없애고 권리중심으로 개편해야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인권침해 예방 위한 2인1조 의무화해야
- 사업지침 숙지 안한 채 부정수급 환수...현장 혼란 방지 위한 인력관리 철저히 해야
- 돌봄 아닌 당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 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 모두를 위한 환경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장애인 화장실, 당사자 욕구를 반영한 규격·규정 마련해야
- 법으로 보장된 안내견의 정당한 출입, 차별은 여전... 현실적인 대책 마련 촉구

정책의 전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현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마음·정신 건강 실태에 대한 지적

- 복지부 정원은 역주행, 휴직은 증가, 남은 인력이 주업무와 여러 부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고착으로 레드플레그 (조직경보) 선언 필요
- 기밀 보장·보복 금지·회복시간 보장·복귀 프로토콜을 갖춘 상시 운영체계 마련 필요

• 국민 생명·건강 최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강조 침례병원 정상화

- 여야를 떠나 쟁점이 없는, 국민과 부산시민이 원하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

• 환자안전의 검체 식별·추적 시스템 붕괴 지적 및 재발방지 이행

- 슬라이드 라벨 부착 오류로 잘못된 병리결과 통보로 자동바코드, 판독 등 전 공정에 대해 자동화를 도입 필요
-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수탁검사에 의존하는 만큼, 제도 변경은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

• 위장약 처방 관행처방 개선 필요

- 위장약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방이 필요하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 필요시 근거에 따라 처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 및 부실 현안 개선요구

- 짝퉁 화장품 차단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 대응 필요 및 유산균 관련 건기식·일반식품 기준 상이 체계 조정 필요
- 노인절도 생계형 범죄 우려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예산투입 급증에도 매년 늘어나는 고독사 고립계층에 대한 조기 발견·지속 지원 체계 점검 필요
- 마약류 사고 최소화, 안전한 유통·조제 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여명 발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 응급관리요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 요원 증원 필요성 강조
- 종합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들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언급. 민간의료기관이 사이버보안 체계가 마련되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장비 등 지원 필요성 강조
- 최근 5년간 마약류 ADHD 치료제 2억 7만정 처방량 현황 강조, 처방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촉구
- 증진원의 OTT 모니터링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닌 이를 활용한 흡연 예방 방안 필요함
- 액상담배 무인점포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점포 규모 파악 필요성 지적.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모색 촉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

주요 내용

- **‘성남시의료원’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혁신 필요성 강조**
 - 전공의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관련 부당 지원금 사례 지적
 - 10년째 개정되지 않는 ‘지방의료원표준운영지침’ 개정 필요성 지적
 -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성 강조
- **비급여 및 실손보험관리, 지난 정부 의료개혁특위의 논의사항 연계 강조**
 - 암면역증강제, 로봇 수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의 문제점 지적
 - 새로 출범하는 의료혁신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전공의 수련재개,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 지난 9월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했지만, 진료과별·지역별 편차가 큰 것을 지적
 - 전공의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료안전망 확보 대안 마련 촉구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지적 및 현실적인 수련병원 제재수단 강구 마련 필요성 지적
- **식약처, 마약 관리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 온라인 마약 유통 점검체계 미비 지적 및 식약처에 차단권한 부여 촉구
 - 기내식 대장균 발생 사례 지적,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강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재정 안정화 및 인력 운용 개선 필요**
 -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지적, 관리직원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 촉구
 -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이탈을 지적, 운영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직 처우 향상 강조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 촉구**
 - 국가재정 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성장-복지 선순환 가능한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체계 구축, 연금·건강보험 개혁, 사회부총리제 부활을 주문함
 - 저출생·고령화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복지제도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에 토대를 둔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 마련해야
-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정부안) 마련을 촉구함. 또한 정부가 연기금 활용에 개입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연기금 운용을 주문함
-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놓여 있는 배달앱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 배달앱 사용 증가로 홀 없는 배달전문 음식점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식약처의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함
 - 음식점 배달앱 입점 시 현장 위생점검 의무화 등 식약처-배달플랫폼 공동관리체계 필요성 주문함
-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대책 마련 촉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95.7%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권한 최소화나 주기적 점검 절차가 없어 관리 부실 심각. 이에 AI 기반 대체업무 등 총체적 구조 개혁 주문함
- **(국립중앙의료원) 치매관련 통계오류와 치매환자 구강진료 방치 현황 지적**
 - 국가 치매정책의 출발점인 국가 치매통계 전반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과 재발방지 촉구함
 - 치매환자의 건강에 중요한 구강건강 관리가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도 제5차 국가치매관리종합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함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아우르는 보건복지 현안 점검과 개선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주요 내용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복지 실현

- 장애인석 예매 시스템 개선 및 본인확인 강화 촉구
- 배리어프리(BF) 인증제도 개선방안 요구
- 사람 중심 장애인전용주차표지 개편 및 편의시설축진기금 도입 제안
- 보조기기 정책 전면 개선 및 법 전부개정 요구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 추진 주문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복지국가를 향해

-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신설 로드맵 촉구
- 장기기증 동의율 제고 실행계획 촉구
- 가정 내 방치 마약류 회수 위한 한국형 Take Back Day 도입 제안
- 오래된 의약품 금기 정보 재점검 요구
- 의약품·의약외품 명칭 구분 가이드라인 촉구

• 건강보험과 복지제도의 신뢰 회복

- 건강보험 자격상실 부정수급 개선 촉구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요구
-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 확대 및 금리 면제 검토 주문
-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비 허위집행 관리·감독 강화 요구
- 개인예산제 구조 개선 촉구

• 미래 복지·의료 혁신 기반 구축

- 복지데이터 개방 확대 및 디지털 복지 인프라 로드맵 촉구
- 병원 로봇 실증사업 국가 지원 확대 및 참여 병원 다변화 요구
-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문
- 국민성장펀드 연기금 투입 신중 접근 당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겠습니다

- 약 하나 구하기 어려운 '무약촌', 제도 개선 주문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지역 여건 반영한 24시간 판매점 기준 완화 방안 마련 촉구
- 농약 우롱차 판매, 현대백화점 관리 부재와 식약처 감독 실패
 - 불법 반입 제품 판매와 감독 부재로 국민 식품안전 위협에 따른 시스템 중심 감시체계 구축 촉구
- 성분명 처방, 의사·환자 선택권과 환자 안전 위협
 -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약효·부작용 달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 신중 검토 강력 촉구

• 보건안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키겠습니다

- 美 최혜국 약가제도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 촉구
 - 신약 공급 중단·출시 지연 시 '코리아패싱'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합성의약품,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필요성 주문
 -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 해외로 유출되는 국민 인체정보 보호 위해 「인체정보보호법」 제정
 - 인체정보 국외 반출 법적 근거 부재,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제정 필요성 주문

•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생명 직결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마비 지적
 -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인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3순위 시스템 복구 대상이었던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위기 대응 능력과 관리 시스템 한계 지적
 -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공정과 혼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성 촉구(*문제 제기 후 3일 뒤 복구 선순위로 전환)
-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불법 겸직 의혹 제기
 - 서울시립대 교수 신분이던 임준 비서관이 겸직 허가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으로 임용돼 3억 원 급여 수령
 -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과 공직윤리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질타
- 본래 취지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연금정책
 - 실직·출산 등으로 납부 중단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납제도가 외국인·고소득층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 이재명 정부는 제도 허점 보완보다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등 확대 정책에 치중하는 등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안정성 위협 지적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한 환경·노동·에너지 정책 점검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주요 내용

• 반세기 논란에 종지부,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첫 공식 답변 도출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3건의 환경법 위반, 33건의 검찰 고발, 110일의 조업정지 처분 등 국내 최악의 환경오염 사업장임을 지적
- 지속적인 환경오염과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영풍 김기호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제기 및 '노란봉투법' 후폭풍 경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째임에도 재해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제자리 수준으로, 산재 예방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
- 처벌 중심 접근이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 간 안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비판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 과중 실태를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행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인력 보강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

• 석탄화력발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선제적 대응 필요

-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노동자 고용 안정대책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확보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

•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폭등과 산업경쟁력 붕괴 우려 지적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이후 전기요금 급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된 바 있어, 한국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 제기
- 원자력 발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낮은 발전원임에도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음을 비판. 각 발전원의 탄소배출량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처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을 요구

기후부터 노동까지, '안전한 미래' 위해 실천해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주요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쁜 쓰레기'가 된 텀블러, 2035 NDC 수립 과정의 불투명성 등

- 최근 3년간 스타벅스가 948만 개 텀블러를 판매하며 '친환경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자동차 3,400대 1년 운행량에 달하는 점 지적
- 정부가 2035 NDC 수립을 위해 '18년 대비 48·53·61·65% 감축안 4가지'를 제시했는데 48%가 기술작업반 검토 당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안에서 가장 낮은 안으로 제시된 점 지적, 관련 평가자료 미제출로 절차적 투명성 논란 제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SPC 반복되는 산업재해 등

-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작성한 경위서 등 근로자성을 인정될 요소가 충분하다며 MBC 특별근로감독 재조사 요구하여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의사 밝힘. 고 김충현 씨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문자, 지인 진술 등을 제시하여 조사 실시 이끌어냄
- SPC에서 최근 3년간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책임자 처벌이 전무한 점 지적, 협력업체 외주화·안전관리 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작업복 개선과 경력직 안전관리자 확충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촉구하여 작업복 교체 등 답변 이끌어냄

• (기상청) 서울에 110대, 대구·경북에 82대... 기상 예측 지역차별?

- 관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 지적, 추경 통한 장비 확충 촉구

• (한국수자원공사) 초순수 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훼손 및 환경 리스크 우려

- 반도체 핵심소재인 초순수 시장이 일본·프랑스 기업에 사실상 독점된 만큼 국내에서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필요성 강조하고, 공업용수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수도사업자 지위 부여하여 초순수 사업 참여 허용 제안

•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장기화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 지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가 '20년 9,352건에서 '24년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 처리기간도 113일 늘어난 점 지적. 특히, 소음성 난청은 같은기간 100일 가까이 늘었는데 특진기관이 115곳에 불과해 병목현상 심화. 이에 시행령 개정 통해 의원·병원급으로 청력검사기관 확대(100곳 확대)하여 판정기간 단축안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 이끌어냄

2,900만 임금노동자 월급 찾아주기, 지켜주기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요 내용

• 정부 추진 중인 '국가 주도형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 확인

-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800명 설문조사 실시 결과, 퇴직연금 의무화 찬성 73.4%, 기금형 전환 찬성 59.3% 확인
- 그러나,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된 전문 금융기관 주도(42.8%)'가 '국민연금같은 국가 주도(38.4%)' 방식을 웃돌았음
- 특히, 젊은 층일수록 국가 주도 기금화 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기금 운용의 실패 위험성과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해결 미온적인 고용노동부 질타, 개선책 제시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위니아 사태 등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태도 질타
- 특히, 법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겐 변제금의 2차 납부 의무를 지우는 대책 제시, 연구용역 진행 중(의원실 차원 법안도 성안, 검토 단계)

•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 적극 지원

- '25.3. 영남권 대형 산불 및 '25.9. 강릉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 수시 발생 및 대처에 한계
- 인공강우 기술은 산불 위험지수가 최대 58% 감소, 가뭄의 경우 1mm의 비가 더 오게 되면 약 30만톤의 수량 확보 가능
- 현재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6시간 총 6mm 정도의 증우가 가능하기에 인공강우 및 검증 강화를 통한 항공 실험 연구 필요성 지적

• (한전·발전5사)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대참사' 시즌2?

- '38년까지 석탄화력 6기 중 3기 폐쇄 예정, 전환 협의체의 네 차례 회의에 노동계는 참여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나오지 않음. 일자리 전환 관련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채용연계·유급보장·대체인력지원 등 빠져있음
-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태안 1호기의 서부발전 직원 65명은 구미의 LNG 발전소로, 협력사 직원 64명은 인근 석탄화력으로 이동했는데 지역 내 대체산업이나 신규일자리 전무, 이는 전환이 아닌 전출로 고용유지가 아니라 지역이탈로 이어지는 점 지적

• (고용노동지방청) 근로감독관 기피 현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 올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307명 중 249명이 행정직이었는데 이 중 약 40%인 97명이 임용 포기, 심지어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 실시하여 8·9급 승진 적체 우려, 이에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요구
- 실업급여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4년간 반복 수급 21.5%(2만 명) 증가, '26년 말에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 소진될 전망으로 모성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제안하고,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등 반복수급 방지 법안 통과 촉구

산재 예방의 실질적 대안 제시,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 촉구, 재생e 확대 시 전기료 상승 등 국민 우려 해결할 다지표 접근 촉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비판, 산재 예방 효과가 높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확대·산재 피해자 위자료 증액 등 실질적 대안 제시**
 -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內 기업 향한 과도한 처벌 수위 비판
 - 현행법 상 근로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재 수단 부족 지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수단인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 2025년 <산재예방요율제>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사고사망발생률이 0%에 수렴하는 등 효과가 높은 만큼 전 업종으로의 확대 필요성 강조
 - 부상 등 중처벌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는 많은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 손해배상(산) 판결 시 위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영구장애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지적, 위자료 위원회 신설로 산재 피해 보상 범위를 논의, 확대하는 방향성 제시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국선노무사 선임비용 지연 지급 현황 지적**
 -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국선 노무사에 대한 보수를 상습적으로 지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남
 -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연 지급의 법적 잘못을 피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지연 지급에 대한 단서 조항까지 넣고 있어, 개선 요구
- **재생e 급진적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高 가능성·LCOE 기준 맹점 지적**
 - 재생e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압력 관련, 대통령과 장관의 상반된 입장으로 기후부 정책의 국민 신뢰도 저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문제 지적 (대통령-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언급, 장관-전기요금 상승되지 않을 것)
 - 재생e 확대로 인한 전력요금 영향 분석 자료 전무 실태 개선 요구
 - 재생e 단가 설명 시 범용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지표의 한계 및 문제점(송/배전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토지 보상 비용 등 직/간접 비용 미반영) 지적 및 기후부에 다지표 접근 촉구
- **정부 따라 바뀌는 치수 정책 비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경제성보다 ‘안전·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둘 것 강조 등**

“정권 따라 흔들리는 탈탄소·노동정책, 국민과 산업이 피해보는 일 없어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 의원

주요 내용

-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기후대응담, 정권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 지난 정부가 오랜 검토와 숙의를 거쳐 선정한 14개 기후대응담 후보지 중 7곳을 백지화하고, 7곳을 공론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수자원 관리정책은 정권의 입맛이 아닌 국민안전과 미래세대 위한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며 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치수대책 마련을 촉구함
- **탈원전 시즈2 우려, 규제 부처의 산업 진흥 기능 회복 요구**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일련의 발언이 탈원전 강성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이 이념의 논리로 퇴행하지 않아야 할 것, 기후부가 규제부처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 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함
- **현실 외면한 NDC(국가온실감축목표)목표, 산업계와의 소통·조정 부재 지적**
 -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과 기술적 여건, 감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채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업계·기술계·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현 가능한 감축로드맵 재설정을 촉구함
- **무공해차 실적 경쟁보다 충전 인프라 안정화가 먼저**
 - 이재명 정부가 2035년까지 전체 등록차의 35%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운영부실과 충전 인프라 관리 미흡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통합누리집 실태조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부적정 시공, 횡령 등 다수의 문제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함
-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 현장 혼선 막을 보완입법 시급**
 -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현장의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고, 노동계만이 아닌 중소기업·하청근로자 모두를 위한 균형잡힌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행령 개정과 후속 보완입법,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함
- **산재 처벌 강화 일변도 정책 비판… 예방 중심의 전환 요구**
 -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과징금, 등록말소 등 처벌 일변도가 아닌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주문함

정쟁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감사 되어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

주요 내용

• 관세 협상 투명하게 해야

- 미국 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음. 협상에 차질 생기지 않는 선에서 협상 내용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시간에 쫓겨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협상완료된 것이라도 문서화해야

• AI 등 신산업 위한 전력 공급,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역부족

- AI 등 신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려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취약성이 존재함. 특히 태양광의 경우 부지나 ESS 비용까지 고려해야 함
-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ESS 설비비용은 원전의 약 6배나 되고, 부지는 무려 123배가 필요함
-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지속 추진해야

• '동해심해가스전' 탐사 지속되어야

- 대왕고래에 '경제성 없음' 결론이 나왔음. 그러나 대왕고래는 동해심해가스전의 여러 개 구조 중 하나로, 대왕고래 구조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망구조 전체가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님
- 해외의 경우에도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수차례 시추한 바 있음. 가이아나는 1960년대 탐사를 시작해 50여 년만에 성공했고,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에서 탐사를 성공했음
-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개발률은 '15년 15.5%에서 '23년 11.3%로 하락했음. 비슷한 처지인 일본은 '15년 27.2%에서 '23년 37.2%로 상승함
- 동해심해 개발 사업은 자원개발 빈국인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함. 1차 결과를 토대로 차분히 추가 탐사해 개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위한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

주요 내용

•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 생활환경 개선

-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25.10.28)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손실 보상 위한 기후보험 도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25.9.30)
-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확대 및 이상기후 대응 위한 예보관 확충
- 국내산 전기차·전기버스 보급 확대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 해외 취업사기 대응

- 해외 취업사기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 거짓·과장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산업재해 근절

- 산업재해 사전예방 촉구 및 산재예방 예산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25.10.30)
- 안전체험교육장 재개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고용 지원사업 개선
-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근절 촉구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25.10.15)
-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촉구

• 안정적 전력 수급

-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 논의 필요
- 에너지 고속도로 재원 부담 및 주민수용성 우려

• 택배 새벽배송 전면 금지 신중검토

- 새벽배송 금지, 일자리 축소 및 소비자 불편 우려



국토교통
위원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실패 바로잡고 국민안전·국민편의 최우선에 둔 민생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주요 내용

- 정부의 연이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전환 촉구**
 - 서울시와 협의도, 구체적 공급 계획도 없는 9·7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한 문제 지적, 후속 대책 마련 촉구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간 소통채널’ 마련 성과 달성
 - 5대 부동산 정책 제언*에 국토부장관 동의 답변 이끌어 냄 (* ①반시장적 규제 탈피 ②서울·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촉진책 마련 ③서울·경기와 긴밀 협의 ④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책 및 ⑤지방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 정부의 탁상행정이 낡은 불합리·불공정한 정책 지적하여 국민불편 해소**
 - 청도역 사고 이후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된 문제를 지적, 상습적인 열차 지연 문제 해소 (10.15~31 작업중지명령 2·3차 해제 완료)
 - 동일 노선 소요시간 차이에도 열차 운임 동일 문제 지적, KTX 운임 개선방안(시간가치 고려한 정차역 할인 도입) 제시 및 국토부 개선 의지 확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불공정한 노선 감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부-공정위-항공사 간 적극적 협의를 통한 개선(시행조치 변경 등) 방안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이끔
 - 건립 30년 이상, LH 영구임대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인한 어르신 등 사회약자 불편·안전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를 통해 여야 공감대 확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예산 반영 등 노력 유도
 -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도한 임직원 임차사택 지원 등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지적 및 개선 방안 마련 유도
- 국민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전면적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 및 진출입로 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관리대책 마련 및 휴게소 음식 관리 부실 개선대책 마련 촉구 → 한국도로공사차원의 휴게소의 안전·위생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끌어냄
 - 수소차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및 항공기 내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원의 수소차 전용검사소 확대 및 전문인력을 확충 방안 이끌어냄
 - 5년간 시설물 사고 직전 ‘B등급’ 이상 시설물이 77.4% 차지하는 등 안전등급 평가 부실 문제 지적 → 국토부의 전반적인 시정대책 수립 이끌어냄

이재명 정권의 공공중심·규제중심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문제점 지적 및 정책 전환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

주요 내용

- 서울 도심 아닌 외곽 중심의 공공 물량 공급 계획 지적**
 - 정부가 9·7 공급대책 통해 제시한 수도권 개발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주택 지구는 서울 도심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 대거 포진
 - 반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지 중심으로 진행
 - 미분양 발생 지역인 경기 지역에 공급 계획 발표한 점과 공공주도 사업의 느린 속도 및 비효율성 지적
- 6·27 대출 규제 및 10·15 수요억제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 잇따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발생 및 실수요자 피해 지적
 - 신생아특례대출 지방 일괄 적용, 전세 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오락가락 ‘땀질 처방’식 정책 변동성 지적
- ‘135만호’ 공급이라는 숫자만 내세우며 모든 부담 LH에 떠넘기는 정부**
 - 정부가 인위적으로 LH를 동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개발독재’적 시각이자 ‘국가자본주의적 발상’이라 지적
 - LH는 부채만 160조에 달하며, 건설 업체들의 LH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도 '24년 1조 6천억, 올해 8월 기준 3,600억에 달하는 등 자금운용 여의치 않은 상황 지적
 -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업체 옥죄는 법안과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과 수요 모두 틀어막은 채 ‘부채 덩어리’ LH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부의 공급 대책 지적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정(失政) 적발 및 내국인 역차별 문제 지적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

주요 내용

- **서민 옥죄고, 이재명 정부 권력자들 배 불리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민낯 확인**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이상경 前 차관 등 이재명 정권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 포착
 - 대출 규제 이후 서민의 월세화, 현금 부자들의 증여·현금 거래 급증 현상 확인
 - 10·15 대책 관련 '대면회의 0회' 등 졸속 협의·요식 행위 확인
 - 통계조작 관련 감사원 지적 누락·징계 불복 등 국토부의 '감사 뭉개기' 실태 지적
- **부동산·항공·교통 등 각 민생 현장 내 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문제 점검**
 - 외국인 중 '토지필지 최다 보유',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1위' 부동산 3관왕 '중국인' 현실과 증빙서류 제출의무 없는 외국인 토허제 한계점 지적
 -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1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한 마약 문제 근절 당부
 - 중국인 영업 불법 콜밴 '흑차'로 인한 국내 콜밴 산업 피해 지적
- **국민 생명 관련 정부의 관리 소홀 문제점 지적 및 명백한 진상 규명 촉구**
 - 무안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 없앨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모두 묵살되고, 사고기 엔진 제작사가 엔진 결함을 인지했었던 사실을 최초로 규명
 - 청도군 열차사고 관련 '작업자 안전' 침해한 사유지 부실 관리 문제 및 열차 경보 단말기의 안전 실효성 문제 지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부동산 정책 비판, 교통인프라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대안 제시!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질타, '서민 서울 추방령' 규탄**
 - 이상경 전 1차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갭투자·다주택을 보유한 행태를 비판
 - "정책을 만든 자들은 투기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질타
 -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관련 고위직에게 보유 주택 모두 매각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는 숭선수범을 요구하며, 10·15 대책의 전면 철회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
-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피해자 치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 개정안 철회를 요구함
 - 코레일의 누적 부채와 KTX 노후차량 교체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열차 교체지원 제도화를 제안
 - 해외 암표사이트에서 KTX 승차권이 고가로 재판매되는 실태를 공개하고, 코레일과 구글코리아 간 협력 및 예매시스템 보안 강화 필요성을 촉구
 -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 남용으로 인한 예산 증액과 유희부지 무단점유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
 -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저활용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드론 실험장·물류·정비 복합형 전환 등 기능 재편 필요성을 제시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 LH의 조성원가 토지공급이 수 조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토지보상금 급감·부채비율 증가·인력 이탈 등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촉구함
 - HUG의 '든든전세' 사업이 공급목표 1만호 중 입주율 3.5%에 그친 실태를 지적하고, 보증기관의 직접 임대사업 구조 재검토를 요구
 - LX공사 중국산 GNSS 측량장비 사용을 지적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과 주권 강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 추진을 요구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미이행을 지적하며,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 '지역상생 투자이행률' 지표 반영을 제안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신뢰 없는 대책은 '백약이 무효' - 10월 13일 국토교통부 등 -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주요 내용

•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문제 제기

- 현 정부 부동산 대책(6·27 대출규제, 9·7 공급확대)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함을 지적
-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악화되었으며, 공급정책 또한 구체적 실행력이 부족함
- 10·15를 포함한 반복적 규제발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 정책 신뢰 상실이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

- “정책의 신뢰는 내용보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메시지 전달
-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핵심인사들의 다주택 소유·투기·편법 증여 논란이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규제 중심 정책의 부작용과 시장 불안 확대

-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되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함
-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 제기
-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대책에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전례처럼 '문재인 시즌2'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 불안을 확대·심화시킬 가능성을 피력.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2021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하면서 SNS에서 인용한 단어

• 지역균형발전 실현 - 포항·경북 현안 해결로 지방 성장 견인

-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국가기간도로망 핵심축임을 강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촉구.
-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를 통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LH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 구현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의 영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만 폭등, 서민들만 피해

- 세 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 패닉바임 재현 우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등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 지적
-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반영 촉구

•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먹튀 방지 대책 마련 및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 촉구

- 외국인 국내 토지(필지) 보유 4년 만에 19% 증가, 거짓신고, 탈세 등 불법행위 급증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사고 역시 '21년 3건에서 '24년 53건으로 17배 증가, 사고 금액 '21년 5억에서 '24년 140억으로 28배 급증
- HUG 대위변제 회수액 55억(26%) 불과, 미회수 156억원 외국인 채무자 43명 중 22명은 연락 두절 상태
-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 등 공개, 보증사고시 출국제한 등 관련 입법 추진

• LH 임대주택 입주민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 지적 및 제도개선 촉구

- 포르쉐, BMW 등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로 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 및 계약 갱신 꼼수 실태 지적, 국토부와 LH의 전수조사 실시 및 공공주택 입주자 제도개선 지적

•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숙박업을 영위 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 촉구

-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제3자 재임대나 숙박사이트 통한 단기임대 다수 적발(5년 8개월간 49건)
- 철저한 단속 및 공유숙박사이트와 업무협약 등 불법행위 근절 개선방안 마련 촉구

• 도로 결빙방지열선 규격 미달, 불량제품 사용 시공 실태 지적 및 제도마련

- 전국 도로에 시공된 결빙방지열선의 시험성적서 분석결과, 규격 미달·불량제품 사용 적발
- 화재 등 안전사고 이어짐으로 국토부에 표준시방서 마련 주문, 품질·안전성 면밀 검토 촉구

• 코레일, 선로 작업 중 사고 작업계획서 관리 부실·앱 감지 단말기 무력화 지적

- 청도 무궁화호 사고 작업계획서와 실제 투입인력 불일치, 앱 단말기는 게임·웹툰 등 설치 가능하고 경보음 줄일 수 있는 현실 지적. 관리 감독 개선 주문
- 정확한 열차접근 정보 제공을 위해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CTC 궤도회로 정보 제공 등 대안 제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해·장애등급표 개선으로 피해자 지원 현실화 주문

- 책임보험 한도 개정 '16년 이후 없어 피해자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못해, 보상 한도 현실화 촉구

• 항공사의 승객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주문

- 항공기 단체 예약시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동시 열람가능, 국토부에 항공사 개인정보 유출 대응방안 마련 촉구

국민의 삶에 와닿는 감사를 목표로 반복되는 부동산 실패, 국민 안전 문제 등 꼼꼼히 살펴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

주요 내용

• 반복되는 부동산 실패,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시장 파괴 멈출 것 촉구

-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2배 상승하며, 서민의 서울 자가 거주가 불가능해졌던 모습과 겹쳐보이는 현실 지적
- 특히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오히려 지방 집값이 떨어지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현상 지적
- 전세보증금 공적 보증제도 악용 실태, 적발은 2배 늘었으나, 환수는 1/10 수준인 청약시장 관리현황 등 부동산 환경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연이은 대형 사고, 안전 문제 전반적인 점검과 대응 마련 주문

- 관제사 과중한 업무 문제. 관제사 1인이 한시간에 40~80회 항공기 관측. 2019년 조직진단 보고서를 통해 '항공관제 인력 부족 문제 위험요소'라고 명시했음에도 개선 없어. 관제기준 정립, 인력 충원, TF정상화 추진 촉구
- 청도 철도사고 서류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았던 문제 지적. 서류와 실제 투입 작업자가 달랐으며, 안전교육 이행 관련 확인 절차 미이행, 장비 역시 서류에만 존재. '시설인력관리시스템' 연동한 인력관리 대안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데이터 참사 문제,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점검. 국토부/LX/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국토교통 관련 중요 데이터 관리 기관 백업 및 이중화 부실 지적

• 제도적 허점으로 관리에 구멍 뚫린 시스템, 개선방안 촉구

-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한 중앙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시 다른 중앙관서에도 확장 적용. 그러나 공공기관은 해당 조항 없어, 실제 부정당업체의 LH 반복 입찰 사례 계속되는 문제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25년 넘게 채무 방치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실이 428억 원. 인천국제공항 역시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 할 428억 원 납부해야 할 금액 존재. 해당 금액의 반환 및 납부로 지역 재투자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 부동산원 관리 부동산 거래 허위매물유형이 2022년부터 74만 건에 달해, 허위매물 적발 이후 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71.4일이나 되는 문제 지적. 제도 개선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할 것 촉구

이재명 정부 '망국적 文시즌2' 부동산정책... 주거사다리 끊긴 청년분노 직시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임태영 의원

주요 내용

• (건설·부동산) 文정부 실패 따라가는 반시장적 건설·부동산 정책 질타

- (국토부) 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사 옥죄기 폐해 및 망국적 부동산 실정 지적
 -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만 10대 건설사 건설중단 피해액 5221억(이전 1년반의 5배)- 6억 대출 제한하자 20·30대 청년층 실수요자 거래 급감.. 주거사다리 끊어놔
- (LH) 9·7대책의 상당수는 허수...기존·민간 활성 위한 거래세 인하 필요
 - 수도권 135만호 공급 중 35만호는 허수...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부족
 - 기존·민간 시장 활성화 위해 거래세 인하 필요하다는 의견에 LH사장도 동의
 - 文정권 LH도심복합사업, 5년 간 착공된 부지는 '0'곳(시공사선정 2곳)
- (서울시) 10.15대책은 탈레반적 사고...청년분노로 정권교체된 文의 길
 - 서울 집주인은 현금부자만 '평양' 빚댄 '서울시민증', '거주이전의 자유 증식' 비판
 - 이재명 정부 '서울시' 의도적 배제... 이한준 LH사장 "서울시와의 협력" 강조
 - 오세훈의 한강버스사업...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초기비판 많았지만 성공기대
-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조작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조작'이라는 민주당
 - 공소장 범죄일람표 변동률 '조작'을 '수정' 변경... 법위반행위 91개는 그대로
 - 文정부 대통령실-국토부의 부당압력에 의한 통계조작의 사실적 증거 넘쳐나
 - 지방APT 223채 팔아도 서울 뚝뚝한1채 못 사...시한폭탄 강통임대 26조보증
- (국토부) 中 먹잇감 된 국내 국제물류주산업 시장의 교란행위 개선시급

• (안전) 철도 사고·부정승차 근절 및 고속도로 재난·노후화 안전개선 지적

- (코레일)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 및 부정승차·기강해이 개선
 - 철도노선 4,285.9km 中 선로변 설치 CCTV는 2,904대, 1km 당 0.6대 수준
 - 5년간 부정승차 208만건... 외국인이용객 561만명인데 부정승차 파악 안 돼
- (도로공사) 고속도로 인근 산불 재난피해 및 노후화 지적 및 개선 촉구
 - 올해만 고속도로 인근 산불화재 28건, 교통통제 9건, 피해복구 167억원
 - 고속도로 노선 36개 중 노후화 10개... 교량·터널 등 시설노후화도 1438개소
- (교통안전공단) 튜닝인증부품의 성능·품질 저하 및 케이블카 노후화 지적

현 정부의 이념 편향 부동산 정책과 처벌 중심 건설안전 정책, 주택시장 붕괴와 건설업 위기 초래 지적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주요 내용

• 이념에 치우친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비현실성과 시장 왜곡 문제 비판

- 현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LH 직접 공급 정책이 L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채 증가 위험을 초래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 유인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시장 위축과 공급 목표 달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풍선효과, 실수요자 피해 등 부동산 시장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박원순 전임시장 재임 기간 동안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어, 입주 예정이던 물량 43만 401호가 증발하는 등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현재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책임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 현장을 외면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건설 안전 대책 비판

- 현 정부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 규제·처벌 일변도의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건설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
-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10대 건설사가 한 해에 진행한 점검·평가 건이 총 6만 523회에 달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비용이 1,445억원, 추가된 법정 전문인력 2만 176명의 인건비가 총 6,914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으며, 중소건설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

• (국토균형발전)

-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선거용 카드' 아닌 '균형 발전' 최우선
 - 1차 이전은 '양적 목표'만 달성, 산업·교통 인프라 등의 '질적 성과'는 미비
 - (공실률) 광주·전남 혁신도시 42.2%, 김천·대구 40%대, 전북도 절반이상
- (국토부·인국공) 교통소외 지역의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확대 필요
 - (2019년대비) 2024년의 수송인원, 시외버스 492%↓ 고속버스 313%↓
 - 연평균 344억 지원되지만 폐지노선 계속 발생 → 교통소외 지역 지원 확대
 - 코로나 때 제천등 인천공항 시외버스 전면중단 후 찢김 재개..운영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불러온 민생과 건설업의 위기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

주요 내용

•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괴롭히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서울 도심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미해소 때문.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초강력 규제에 대응하며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사업성 보전 조치 외면, 착공지연·사업무산 우려
-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말했으면서, 보유세 인상카드 거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대비 지금도 높은 수준
- 해외에도 없는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심 자극
- 부동산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

• 위기의 건설업 더욱 옥죄는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

- 대통령은 연일 “산재사고는 엄벌”을 외치고, 현재 건설현장은 살얼음판
- 정부는 노동안전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고, 감당할 수 없는 이중삼중의 과징금 지옥을 만들려고 함
- 피해는 결국 힘없는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임
- 안전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기에만 매몰되어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됨

•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하자, 주간 통계 폐지하려는 이재명 정부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다시금 좌파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음.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간통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까지 동의 의사를 표명함
- 그러나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국가승인통계로서 학계 전문가 자문과 표본조사 설계를 통해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 정권에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주간 통계를 없앤다면, 이는 2023년 중국의 청년실업을 통계 중단 사례처럼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
- 완벽한 통계는 없음. 폐지가 아니라, 품질 개선과 보완이 해법

국민 삶과 직결되는 도로·철도 안전 강화 및 시장 현실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

주요 내용

• 건설·철도·도로 안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딜레마존 개선을 위한 예비정지선 도입 강조
- 열차탈선감지장치에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꺼짐 상태 운행 문제 지적, 철저한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 예방 필요성 및 단말장치 작동 관리·감독 철저 주문
- 청도 열차사고 관련, 열차접근 경보장치의 기술적 보완 및 개선 촉구
- 건설사 대상,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및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

•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부족과 시장현실 외면에 대한 비판 제기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의 일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미흡 및 과도한 규제 비판
- LH에 전가된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비현실성과 재정 여력 한계 점검
- 전세사고 피해, 수도권에서 지방 확산 지적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강조

•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산업, 안전, 환경 등 주요 현안 종합대응

- 남부내륙철도 발주 착수에 따른 조속 추진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당부
- SK오션플랜트 매각 결정 철회 촉구 및 기회발전특구 취지 훼손 우려 강조
- 드론·AI 해양관리 플랫폼 확대를 통한 통영·고성 등 해안지역 환경개선 제안
- LH 도시재생사업의 지연·취소 문제와 실적 중심 추진에 대한 개선 제안
- HUG 분양 보증, 대기업 쏠림 심화 문제점 및 공공보증의 균형 회복 강조
- 빈번한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부작용 극복 방안 주문
- 김포공항 주차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촉구



성평등
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는 보여주기식 행정과 졸속 정책의 표본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주요 내용

●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 - 간판만 바꾼 보여주기식 행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지만, 정책 방향은 모호하고 행정만 비대화
- 인력은 17명, 예산도 늘었지만 중복기능 통합과 성과평가 체계 부재
-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업무(성별근로공시제, 고용개선조치)도 졸속추진으로 전문성, 예산확보 불투명
→ 국민들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정책 성과를 원하는 만큼 철저한 성과 검증체계 마련 촉구

● 약물 임신중지 국정과제 - 법과 의료 인프라 없이 속도전만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5년이 지나도 법제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불법거래, 부작용 피해 속출에도 의료안전, 상담, 사후관리 체계 미비
- WHO 기준(임신 12주 이내)보다 현실적 의료환경 뒤처져 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한 졸속 추진은 위험, 법과 제도의 정비, 표준지침 마련, 불법 유통 근절, 사회적 합의절차 선행해야 함을 지적

● 청소년 수련시설 - 수십억원 보수비, 흥미 잃은 넓은 공간

- 전국 864개 청소년 수련시설 중 대부분이 합숙형, 노후화 구조로 세대 변화 반영 실패
- 2024년 한 해만 보수비 38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단순 유지 수준에 머무름
- 지방 수련시설 국비 지원 없어 보수 진행도 없이 혁신 콘텐츠와 디지털 체험 부재
→ 보수행정이 아닌 리모델링과 콘텐츠 혁신 위해 연구용역 및 5개년 개선 로드맵 마련할 것을 촉구

캄보디아 사건 등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 기준·절차 명확화 및 수사권 조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필요성 등 주요현안 질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은희 의원

주요 내용

● 캄보디아 인신매매 '이중지위' 피해자 판단기준 부재 및 성평등가족부 미온적 대응 지적

-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위 인정 신청 건 관련, '피해자면서 피의자'인 수사 사건인 관계로 판정이 보류된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사례 판정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대응·이중지위 판단기준 미제시 질타
- 이중지위 피해자 지원은 국민 법감정과 국제기준을 종합 고려할 필요성 제시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중지위)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답변

●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성범죄 사건 피해자 권익보호 약화 우려 제기

- 민주당의 일방적 검찰청 폐지 확정 및 후속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인한 피해자 권익보호 약화 가능성과 관련해 참고인 질의응답 진행
- (참고인 주요 답변내용 /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변호사)
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성폭력 사건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을 시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고 ②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건 특성상 보완수사를 통한 보다 치밀한 수사가 요구됨
* 참고) 2024년 기준 성 관련 범죄 보완수사 요구비율
- 성폭력처벌법 위반사범 8.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 14.2%
- 수사구조 개편으로 성폭력 피해자 권익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소송구조 예산 증액 등 성평등가족부의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송구조 예산 증액 등 필요성 긍정 답변

● 여성고용정책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무늬만 이관' 문제 질타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정책 '전면이관' 발표했으나,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인원은 5급 사무관 1명으로, 이관 관련 실무회의도 1회 수준에 그친 사실 확인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평등 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 필요성 강조

●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점검 및 다크웹 등 신종 디지털범죄 강력대응 촉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내년도 인력충원 부족문제 및 최근 증가 추세인 신종 디지털성범죄 정책연구 인력 및 관련 연구예산 확보 주문

가족·여성 정책 시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성평등가족위원회 서명옥 의원

주요 내용

• 정부 아이돌봄 사업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예방책 강화 촉구

- 아동학대 발생이 지속적 증가하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자격 정지됐던 인력 현황, 재발률 등 통계는 미집계 실태 지적
- 아동학대 가해 인력의 자격 정지 후 복귀에 대한 문턱이 낮아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 촉구
- 영아·심야 시간 등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높은 가구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인력에 대한 제한, 감독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간 등록제에 따른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및 민간의 자발적인 기관 등록 유인책 마련 촉구

• 국제결혼중개업 불법 광고는 활개치고 있음에도 미흡한 조치 실태 지적

- 5년간 약 1만건 적발된 국제결혼 불법 광고, 성상품화 문제 소지가 될 신상 공개 유형이 대다수임을 지적
- 모니터링 예산 올해 5배 늘렸으나 지난해까지 용역 업체였던 모니터링 전문업체 대신 '게임 번역' 업체에 맡긴 점 지적
- 불법 광고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의뢰 및 경찰청 수사 의뢰는 각각 360건이나 처리된 건은 전무한 문제점 지적하며 자체적인 콘텐츠 삭제, 사이트 차단 방안 강구 촉구 및 수사 기관 협조 필요성 지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급증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책 촉구

- 부정수급 환수율 '21년 70%에서 작년과 올해 40%대 하락한 점 지적
- 환수액 감면과 징수 제외는 지자체가 전담해 정부 역할 제한적인 현실 지적
- 부정수급 선제적 차단 방안 마련과 지자체의 환수 절차 이행 실태점검 등 대책 촉구

성평등가족부의 정체성과 기능 정립 및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족·돌봄정책의 현장성 강화 요구

성평등가족위원회 서범수 의원

주요 내용

• 성평등가족부 조직 정체성과 기능 정립

- 성평등부 약칭은 특정 기능으로 부처가 쏠린 것처럼 보여
- 장기간의 장관 공백과 외부 출신 인사 중심 인사 구조로 조직 사기와 정 체성이 약화됨
- 차관이 중심을 잡고 부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보완 필요

- CEO의 성비위 문제에도 인증제도 시행 이후, 지정취소는 4건에 불과함. 전수 조사후 성비위 관련 기준 강화 필요
- 100점 중 20점을 정성평가로 하면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담보 어려워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어떻게?

-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 블라인드 처리로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어려워
- 경각심 위해 기관명과 후속 조치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장은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관별로 대책 상이하고 사실상 규정이 없는 곳도 있어 더욱 세심한 대책 마련
- 허점투성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성별임금격차 발표, 성평등부인가? 성갈등유발부인가?

- 원인 분석 없는 자료들은 성별임금격차의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일방적이고 단순한 성별 임금격차의 산출 방식도 문제

•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집행 부진에도 예산 증액?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인력 공급 대책 여전히 부족
- 장관 공백과 정권 교체기 이후 핵심 업무 사업 점검 필요

성평등가족부 실질적 조직개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체계, 딥페이크 성범죄 질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

주요 내용

- (가족부) 형식적 명칭 변경 아닌 실질적 조직개편과 책임 행정 구현 촉구**
 -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별로 편재되어 있어 전문부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 체감 높은 핵심 정책에 선택과 집중해야 함을 촉구
 - 성평등가족부로의 이름만 바꾸는 조직개편이 아닌 책임 행정 구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 (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 시급**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26개 항목의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검진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
 - 복잡한 신청·접수 절차가 청소년들의 실제 건강검진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절차 개선 촉구
- (가족부) 여전히 성행하는 딥페이크 범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필요**
 -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 조치 시스템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
 - 이미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SNS와 텔레그램 등에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히 점검·정리할 것을 요구

책임은 실종되고, 공백만 커졌다… 확대·개편된 성평등가족부 강력 질타

성평등가족위원회 한지아 의원

주요 내용

- 방미심위 마비 속 방치된 국민… 성평등가족부 소극 대응 강력 질타**
 - 여당의 무리한 극단정치로 방미심위 위원장 및 위원 공백 사태 장기화
 - 류희림 위원장 사퇴(6월 3일)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방미심위에 접수한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14,377건,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881건 모두 단 한 건도 조치되지 못한 상태이나 성평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의존한 점 지적
 -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도 기존과 다름없음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공백 해소 방안 마련 촉구
- 청소년 ‘AI 과의존’ 심화에도 손 놓은 성평등가족부의 무책임 지적**
 - 대인 관계, 우울증 상담까지 AI 통해 해결하려는 AI 과의존 청소년 증가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 준비를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AI기본법」, 「AI이용자보호법」 등 관계법률과 AI 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는커녕, 계획조차 없음이 확인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계부처 즉각 협의 및 AI 시대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주문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법적 보완 통해 해소 촉구**
 - 현행 제도상,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소멸하나, 잠정조치의 효력은 가해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이후에야 발생하고 있음
 - 조치들이 중단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법 구조상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지적
 - 성평등가족부가 실태 파악 후 법무부와 경찰청과 협의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결정 시점’이 아니라 ‘고지 시점’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
- 홈캠이 사생활 유출 창구로… 성평등가족부 역할론 강조**
 - 베이비캠, 팻캠, 로봇청소기 등 우리의 일상 속 기기들이 해킹을 통해 사생활 유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현황 지적. IP 카메라 유출은 남성, 여성, 가족, 연인 등 “성평등가족부” 이름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
 -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사안을 기술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생활 침해와 가족 보호 관점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할 것을 촉구



2025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발행일 | 2025년 11월
발행처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국민의힘
전화 | 02-6288-0200

2025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